

KREI

농업·농촌에 대한 2019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허정희·박혜진·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허정희 | 부연구위원

박혜진 | 선임주무원

우병준 | 연구위원

정책연구보고 D495

농업농촌에 대한 2019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9.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지아이지인

I S B N | 979-11-6149-367-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2019년 농업계는 양파·마늘 등 농산물 가격 불안정, 9~10월에 잇따라 불어 닦친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쌀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이는 쌀값 안정에도 기여했다. 로컬푸드와 직거래 확대, 농식품 수출 성장, 사회적 농업의 확대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로 손꼽힌다. 특히, 지난 4월에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농촌특별위원회는 기존의 경쟁과 효율 중심 농정에서 벗어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와 농업 관련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는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수행에 참고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여론 형성과 정책지원 활동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1,521명 등 국민 3,021명이 참여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도시민과 농업인의 다양한 정책 건의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제언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 자료가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기초한 연구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 주신 전국의 도시민과 현지통신원 및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답한 농업인은 73.8%, 도시민 78.0%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보다 미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평가함. 또한,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전망하였으며, ‘희망’은 31.7%, ‘보통’ 51.0%, ‘비관’은 17.3%로 응답함.

하지만 다른 산업과 비교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부정적이다’ 49.8%, ‘긍정적이다’ 36.4%로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보다 13.4%p 많이 나타남.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는 64.2%가 응답하였으며, ‘가치가 없다’는 5.3%에 그쳤음. 농업·농촌의 주요 공익적 기능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동의가 78.6%로 가장 높았고, ‘전통문화 계승, 여가를 보내는 공간’(70.4%), ‘환경, 생태계 보전에 기여’(6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들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한다’는 60.2%, ‘반대한다’는 36.2%로 ‘긍정’ 의견이 24.0%p 많이 나타남.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면제 등)과 농촌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각각 51.0%, 46.5%가 지지(긍정 또는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부정’(반대) 의견은 각각 7.5%, 13.9%로 나타나 ‘긍정’ 의견이 많았음.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수요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성에 대해 ‘많다’는 각각 34.2%, 28.6%, ‘보통’은 36.8%, 34.6%로 나타나 도시민의 과반 이상은 평

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성을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귀농·귀촌 의향 비율은 2006년 71.3%에서 2019년 34.6%로 감소 추세이며, 귀농·귀촌 시기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가 62.1%로 과반 응답함. 도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46.0%),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21.4%) 등의 이유로 귀농·귀촌을 원했으며, ‘생활하기에 소득이 부족할 것 같아서’(29.9%), ‘농업노동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28.8%) 등으로 귀농·귀촌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도시민들은 농축산물(채소, 곡물, 육류, 과일) 구입 시 ‘안전성’과 ‘품질(맛)’을 많이 고려하였으며, 특히 ‘과일’은 다른 품목에 비해 ‘품질(맛)’을 우선시함.

수입산과 비교해 국산 농축산물 중 ‘한우’(73.4%), ‘쌀’(67.0%), ‘돼지고기’(59.7%), ‘과일’(52.3%) 등의 순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함. 또한,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 농산물보다 안전하다’가 77.3%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는 16.0%에 그침. 도시민의 절반 정도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다’(51.9%)고 응답했으며, ‘수입 농산물에 대해 인식은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 구매한다’는 22.3%로 나타나 도시민들의 수입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을 구입할 때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41.9%,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는 41.1%로 나타났으며,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는 17.1%에 그쳤음.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56.2%, ‘보통이다’ 33.6%,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10.2%로 조사됨.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해 일반 국민(농업인 81.2%, 도시민 75.4%) 대부분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도시민은 39.5%인 반면, 농업인은 69.8%로 나타나 ‘부정’ 인식이 많았음.

종합 행복점수를 측정해보니 농업인 6.66점(10점 만점), 도시민 6.33점으로 나뉨. 분야별 행복점수에 대해 ‘가정생활’은 농업인 7.72점, 도시민 6.64점, ‘사회생활’ 농업인 7.02점, 도시민 6.15점,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농업인 7.02점, 도시민 6.52점, ‘건강상태’는 농업인 6.26점, 도시민 6.87점으로 응답함.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전반에 ‘불만족’하는 농업인은 50%였으며, ‘만족’은 9.9%에 그침. 도시민은 ‘만족’ 23.9%, ‘불만족’ 15.4%, ‘그저 그렇다’ 60.7%였음.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농업인은 ‘자연재해(폭염 등)’(37.0%), ‘농산물 가격 안정’(27.7%), ‘농민수당(기본수당)’(27.5%), ‘WTO 개도국 지위 변경’(19.7%), ‘공익형 직불제 개편’(19.0%) 등으로 관심이 많았음. 도시민은 ‘가축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53.6%), ‘농산물 가격 안정’(29.1%), ‘자연재해(폭염 등)’(26.5%), ‘식품 안전성(PLS)’(21.7%), ‘지역경제 활성화’(15.0%) 등으로 응답함.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에 대해 ‘긍정’하는 농업인은 57.3%, ‘보통’은 23.7%, ‘부정적이다’는 18.1%였음. 성공적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도입'(45.1%), '직불제 예산 지속 확대'(28.1%), '쌀 변동 직불제 폐지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장치 마련'(24.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WTO 개도국 지위 전환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확대'(농업인 22.6%, 도시민 3.3%),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 재해보험 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및 개선'(농업인 13.6%, 도시민 14.1%)을 꼽았음.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 이슈로 '자연재해'(농업인 40.9%, 도시민 8.3%), '농민수당(기본수당)'(농업인 29.7%, 도시민 3.1%), '쌀 및 농산물 수급 안정'(농업인 27.2%, 도시민 19.3%), '가축질병 관리'(농업인 9.5%, 도시민 34.3%), '식품 안전성'(농업인 11.1% 도시민 28.3%), '지역경제 활성화'(농업인 12.7%, 도시민 19.7%) 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응답함.

농업·농촌·식품 국민의식 한·일 비교

농업·농촌·식품에 대한 한·일 간 국민의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농업정책으로 한국은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일본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꼽았음.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로 한국은 '잔류농약',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을 꼽았으며, 일본은 '식중독', '수출입 음식 제품' 등이라고 응답함.

외국인이 체험해봤으면 하는 음식문화로 한국과 일본 모두 '발효식품을 이용한 요리'를 우선 꼽았으며, 이어 한국은 '명절 음식', 일본은 '향토 요리'로 나타남.

'앞으로 농촌 여행을 할 의향이 있다'는 한국 80.3%, 일본 47.1%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33.2%p 높은 긍정 의견을 보였음.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농촌 여행

시 ‘자연 및 풍경’, ‘지역 휴양지에서 휴식(온천 등)’ 등에 관심이 있으며, 체류 기간도 ‘1~2박’이라고 응답함. 숙박시설로는 한국은 ‘일반 민박 또는 펜션’(41.3%)을, 일본은 ‘옛집, 폐교 등을 활용한 숙박시설’(23.3%)을 선호함. 특히, 한국과 일본 모두 ‘관심 없음’, ‘교통 불편’, ‘숙박시설과 위생 불안’ 등의 이유로 농촌 여행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함.

농업경영 및 농촌 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올해 농사에 ‘불만’(46.4%)이 ‘만족’(22.2%)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불만의 이유로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35.8%),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됐다’(29.5%),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11.8%) 등으로 답함.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높음)는 23.3%, ‘불만족한다’(낮음)는 33.3.%였으며, 일의 내용에 ‘만족’은 26.6%, ‘불만족’은 28.1%, 현재 얻고 있는 소득에 ‘만족’은 10.1%, ‘불만족’은 56.7%로 나타남. 불만족 사유로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51.5%),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14.4%),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14.2%) 등으로 응답함.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농업 생산비 증가’(15.6%), ‘일손 부족’(15.3%), ‘FTA 등 개방 확대’(10.7%) 등을 꼽았음.

5년 전과 비교 시 올해 농촌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는 27.3%, ‘나빠졌다’는 33.5%, ‘마찬가지다’는 38.4%로 나타남. 특히, 5년 전과 비교해 농업경영과 생활 환경 18개 항목 중 ‘도로교통 등 생활환경’(6.47점), ‘보건·의료 시설’(5.96점), ‘문화·복지 시설’(5.87점), ‘이웃과의 관계’(5.32점), ‘공동체 생활 및 문화’(5.18점) 등은 향상되었으며, ‘농촌일손’(2.04점), ‘정부의 농업 인식’(3.03점), ‘농산물 수

입 개방'(3.15점), '농자재 수급 및 가격'(3.27점), '농사 수익성'(3.73점)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농촌 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42.7%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주거환경'(45.8%), '이웃과의 관계'(35.3%), '보건 의료'(33.5%), '대중교통'(30.2%), '문화 체육 여가'(25.7%), '쓰레기 및 환경 관리'(25.6%) 등으로 응답함.

도시 생활 수준에 비해 농촌 생활 수준이 '낮다'는 농업인은 80.6%, 도시민은 52.0%로 응답해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농촌 생활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인들은 마을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70.1%)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낀다' 53.8%, '느끼지 않는다' 10.4%로 나타남.

시사점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농업이 지금 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농업인 52.6%, 도시민 54.5%)라고 인식하고 있어 현재보다 미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더 높이 평가함.

농업·농촌의 중요성(78.0%)과 애착심(38.5%)의 차이가 39.5%p로 크게 나타나 도시민이 느끼는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애착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험, 홍보,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의 64.2%가 지지하였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 대해서도 60.2%는 동의 의견을 밝힘.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 중 특히 '식량(농식품)의 안정적 공급'(87.5%), '여가 활용'(83.9%), '국토 균형발전'과 '환경 보전'(각각 81.0%)에 높은 지지율을 보였음. 따라서 이와

같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구체적인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함.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민들은 ‘자연 속에서의 건강한 생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 등을 이유로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낮은 소득’, ‘힘든 노동’, ‘생활환경 등의 불편함’ 등은 귀농·귀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도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계속되는 환경에서 이들의 귀농·귀촌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해소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층 유입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도시민들은 농축산물 구입 시 ‘가격’보다 ‘안전성’, ‘품질(맛)’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음. 수입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수입산보다 국산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7.3%로 여전히 높게 나타남. 따라서 소비자의 국내산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높은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에 관한 사후관리 및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종합 행복도는 농업인 6.66점, 도시민 6.33점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행복지수(6.33점)와 비슷하였음. 행복점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농업인은 ‘재정상태’와 ‘건강상태’, 도시민은 ‘재정상태’와 ‘사회생활’을 꼽았음.

올해 주요 농식품 이슈로 농업인은 ‘자연재해’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병충해 발생 및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도시민은 ‘가축질병’, ‘식품 안전성’ 등을 선택해 안전한 농식품과 관련된 이슈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5년 내 주요 이슈로 농업인은 ‘자연재해’, ‘농민수당’, 도시민은 ‘가축질병 관리’와 ‘식품 안전성’을 꼽고 있어 이들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 농업인의 57.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도입’, ‘직불제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WTO 개도국 지위 전환에 따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도시민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안정 강화’(37.9%)를 우선 과제로 선택했는데,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농업·농촌·식품에 대한 한·일 간 국민의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으로 한국은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일본은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꼽았음. 또한, 식품 안전 관련 불안 요소로 한국은 ‘잔류농약’을, 일본은 ‘식중독’이라고 응답함. 농촌 여행에 대한 의향이 일본보다 한국에서 훨씬 높았으며, ‘자연 및 풍경’과 ‘지역 휴양지에서 휴식’ 등을 주요 관심 요인으로 꼽았음.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는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농업·농촌이 가진 치유, 문화·여가, 휴양,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하지만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일반 국민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 ‘농산물 수입 개방 등의 불안한 장래’, ‘육체적 부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19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carried out its annual public survey to understand Koreans' overall opinions o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e survey, conducted on November 11 – 31, targeted 1,500 urban residents and 3,000 farmers. All of the urban residents and 1,521 farmer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about half of Koreans think that agriculture has been and will be significant for the national economy (52.6% of farmers, 54.5% of urban dwellers). Also, they consider that agriculture will be more vital in the future than now.

Although city dwellers felt that agriculture is significant (78.0%), their affection toward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amounted to 38.5%, indicating that there should be various efforts to raise their affection, such as rural experience and education programs.

Questioned how valuable agriculture was as to its public function, 64.2% of urban respondents answered “highly valuable.” Also, 60.2% of them agreed on additional tax burdens to keep the value of agriculture. The result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significance of agriculture's public function and enhance the value.

Regarding various functions of agriculture, 87.5% of the respondents put a priority on the stable supply of food (agricultural produce). Besides, they were aware of agriculture's other functions, such as pastime activity (83.9%),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81.0%),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81.0%).

The interest and relevance toward rural issues have been down, and so has the intention for urban-to-rural migration after retirement. City residents have longed for rural life in search of a healthy environment and relaxed freedom. However, low income, hard labor, and inconvenient living conditions are still significant obstacles to their dreams.

Concerning the purchase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urban dwellers considered safety and quality (taste) more important than price. They agreed on local products' safety and competitiveness. However, their rejection of imported products has reduced, implying that their intention to buy local products is likely to go down over time.

The overall happiness index was 6.66 for farmers and 6.33 for city residents, similar the overall score for Koreans (6.33). Breaking down the happiness score by category, factors reducing the index were financial and health state for farmers, and financial state and social life for city residents.

As to issues for agricultural products, the respondents pointed at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and damages from insects, and livestock diseases from the outbreak of African swine fever. Also, questioned what would be the most vital challenge in the agricultural food sector in the coming five years, the urban respondents answered livestock disease and food safety, indicating that the production of safe food is the most significant task for Korean agriculture.

Asked what would be the most urgent task along with Korea's relinquishment of developing country statu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urban dwellers mentioned stable supply and demand in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37.9%) as a top priority, reflecting the opinion of consumers sensitive to prices.

Also, to a survey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thoughts on farming and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Korean respondents pointed to improving competitiveness in agriculture as a focus area in agricultural policy, while Japanese respondents to supplying safe farming products. Regarding food safety concerns, Koreans mentioned pesticide residue, while Japanese said food poisoning. Asked what type of their traditional food they will recommend to foreigners, both Koreans and Japanese picked fermented foods.

As to the farming outcome of 2019, the response of satisfaction has been on the same level for the past three years, and worsening farming conditions and weak price competitiveness were reasons for dis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with farming work is improving, and the main reason for dissatisfaction is income rather than work itself. Also,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increased cost for production and lack of farmhands were the challenges for the farming business.

Satisfaction with rural life at present is on the rise, and the result is the same in comparison with five years ago. Besides, as to farming business and living conditions, the areas improved in comparison with five years ago were farming methods and skills, while lack of farmhands was worse than five years ago. As farmers were not happy with income and job opportuniti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ong-term solution to this problem.

Researchers: Heo Jeonghoi, Park Hyejin, Woo Byungjoon

Research period: 2019. 1. ~ 2019. 12.

E-mail address: berliner@krei.re.kr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3
2. 조사 방법	4
3. 자료 처리 및 분석	11

제2장 조사 결과

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15
2.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수요	28
3.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47
4. 농업·농촌·식품 국민의식 한·일 비교	54
5. 농업경영 및 농촌 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64

제3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언

1. 정책 건의를 통해 본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	82
-----------------------------------	----

부록

1. 농정건의 전문(농업인·도시민)	87
2. 조사표(농업인·도시민)	125

참고문헌	147
------------	-----

제1장

〈표 1-1〉 조사 개요	5
〈표 1-2〉 조사 문항 상세 내용(농업인·도시민)	5
〈표 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10
〈표 1-4〉 자료처리 절차	11

제2장

〈표 2-1〉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16
〈표 2-2〉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	17
〈표 2-3〉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 전망	18
〈표 2-4〉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19
〈표 2-5〉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20
〈표 2-6〉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동의	21
〈표 2-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견	23
〈표 2-8〉 농업인 대상 세제혜택에 대한 인식	24
〈표 2-9〉 농촌 복지 관련 예산 증대에 대한 인식	25
〈표 2-10〉 농촌 복지 관련 예산 증대에 대한 인식(연도별)	26
〈표 2-11〉 다른 산업, 직업 대비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27
〈표 2-12〉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및 관련성 인식 ..	29
〈표 2-13〉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	30
〈표 2-14〉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연도별)	31

〈표 2-15〉 귀농·귀촌 구체적 시기	31
〈표 2-16〉 귀농·귀촌 희망 이유	32
〈표 2-17〉 현재 거주지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만족도	34
〈표 2-18〉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35
〈표 2-19〉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인식	37
〈표 2-20〉 수입 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37
〈표 2-21〉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인식	39
〈표 2-22〉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구매 의향	40
〈표 2-23〉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구매 충성도	41
〈표 2-24〉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 개선에 대한 인식	42
〈표 2-25〉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 개선에 대한 인식(연도별) ..	42
〈표 2-26〉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	43
〈표 2-27〉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44
〈표 2-28〉 분야별 행복점수	45
〈표 2-29〉 영역별 행복점수(연도별)	46
〈표 2-30〉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정책 전반적 만족도	47
〈표 2-31〉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에 대한 인식	50
〈표 2-32〉 성공적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51
〈표 2-33〉 ‘농업 소득은 불안정하다’(한·일 비교)	54
〈표 2-34〉 ‘농업은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한·일 비교) ..	55
〈표 2-35〉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농업정책(한·일 비교)	57
〈표 2-36〉 식품 안전 관련 불안 요소(한·일 비교)	58
〈표 2-37〉 외국인이 체험해보았으면 하는 음식문화(한·일 비교)	59
〈표 2-38〉 최근 농촌 여행 경험 및 앞으로의 의향(한·일 비교)	60

〈표 2-39〉 농촌 여행을 하고 싶은 관심 요인(한·일 비교)	61
〈표 2-40〉 농촌 여행 시 희망 체류 기간(한·일 비교)	61
〈표 2-41〉 농촌 여행 희망 시 원하는 숙박 시설(한·일 비교)	62
〈표 2-42〉 농촌 여행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한·일 비교)	63
〈표 2-43〉 올해 농사 만족도	64
〈표 2-44〉 올해 농사 만족도(연도별)	65
〈표 2-45〉 올해 농사 불만족 사유	66
〈표 2-46〉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	67
〈표 2-47〉 농업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직업만족도 비교	68
〈표 2-48〉 농업 종사 직업 불만족 사유	68
〈표 2-49〉 농업경영 위협 요소 인식(중복응답)	69
〈표 2-50〉 5년 전 대비 올해 농촌 생활 수준	70
〈표 2-51〉 5년 전 대비 올해 농촌 생활 수준(연도별)	70
〈표 2-52〉 5년 전 대비 농업경영과 생활환경 변화	71
〈표 2-53〉 현재 농촌 생활 만족도	72
〈표 2-54〉 현재 농촌 생활 만족도(연도별)	73
〈표 2-55〉 현재 분야별 농촌 생활 만족도	73
〈표 2-56〉 도시 생활 수준 대비 농촌 생활 수준	75
〈표 2-57〉 거주하는 마을에 마을 주민과의 관계	76
〈표 2-58〉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 여부	76

제3장

〈표 3-1〉 농정 건의 요지 집계(도시민 1,856건, 농업인 1,197건)	83
---	----

제2장

〈그림 2-1〉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19
〈그림 2-2〉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동의(‘그렇다’)	22
〈그림 2-3〉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정’과 세금 부담 ‘찬성’	23
〈그림 2-4〉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인식	25
〈그림 2-5〉 다른 산업, 직업 대비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27
〈그림 2-6〉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과 관계가 ‘많다’	29
〈그림 2-7〉 귀농·귀촌의 구체적 시기	32
〈그림 2-8〉 귀농·귀촌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33
〈그림 2-9〉 현재 거주지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만족도	34
〈그림 2-10〉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36
〈그림 2-11〉 수입 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38
〈그림 2-12〉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인식	39
〈그림 2-13〉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	43
〈그림 2-14〉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44
〈그림 2-15〉 영역별 행복점수	46
〈그림 2-16〉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정책 전반적 만족도	48
〈그림 2-17〉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중복응답)	49
〈그림 2-18〉 WTO 개도국 지위 전환에 대한 가장 시급한 보완 대책	52
〈그림 2-19〉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과제	53
〈그림 2-20〉 농업 종사에 대한 만족도(전반적 만족도, 일의 내용, 소득)	67
〈그림 2-21〉 현재 분야별 농촌 생활 만족도(‘만족’ 의견)	74
〈그림 2-22〉 도시 생활 수준 대비 농촌 생활 수준	75
〈그림 2-23〉 마을 주민과의 관계 ‘원만’ 및 거주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 ‘있다’ ..	77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978년 개원 이래 현지통신원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말 농업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 이 조사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매년 조사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농업·농촌 정책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06년부터는 조사 대상에 도시민도 포함하여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이면서 납세자인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를 종합적으로 추적하고 정책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였음.

2. 조사 방법

2.1. 조사 시기 및 대상

- 이 조사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업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자체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음.¹⁾
- 도시민의 경우, 전국(제주 포함)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크기는 1,500명으로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추출을 실시하였음. 신뢰 수준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pm 2.5\%$ p임.
- 농업인의 경우, 우리 연구원 현지통신원²⁾ 3,000명을 대상으로 전수 우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조사에 충실하게 응답한 1,521명(응답률 60.0%)의 조사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1) 이 조사는 연구 활용이라는 조사 목적에 부합하고 과거 조사 연계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여론조사(도시민)와 패널 형태(농업인) 조사를 병행함.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들은 농촌에서 모범농가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 지역 농·축·임협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인들로, 지역별 분포나 경작규모, 연령, 학력 등의 분포로 볼 때 농촌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표 1-1 조사 개요

구 분	농업인	도시민
조사 기간	2019년 11월 11일 ~ 11월 29일	2019년 11월 8일 ~ 11월 30일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 방법	우편조사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1,521명(응답자)	1,500명
표본추출 방법	전국 읍·면 모범농가	지역·성·연령별 할당 표본추출
표본 오차	고정표본 사용	±2.5%p(95% 신뢰 수준)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자료: 저자 작성.

2.2. 조사 문항 구성

○ 조사 문항은 지난 2013년에 실시한 문항 재설계 작업에 기초하여, 고정문항과 주기에 맞춰(매년, 격년, 3년) 조사할 문항을 선정하고 농업 관련 현안과 이슈를 포함해 조사 문항을 설계함. 농업인 대상 조사 문항은 고정 문항과 정책현안 등 30개 문항으로, 도시민 대상 조사 문항은 3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표 1-2 조사 문항 상세 내용(농업인·도시민)

분야	세부항목	농업인	도시민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의식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	○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심	○	○
	본인의 행복점수 자가 평가_건강상태	○	○
	본인의 행복점수 자가 평가_재정상태	○	○
	본인의 행복점수 자가 평가_친지, 친구관계	○	○
	본인의 행복점수 자가 평가_가정생활	○	○
	본인의 행복점수 자가 평가_사회생활	○	○
	본인의 행복점수 자가 평가_종합적 행복도	○	○
	농업정책,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	○
	농업정책,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 정도	-	○

(계속)

분야	세부항목	농업인	도시민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의식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지 정도	-	0
	농업, 농촌의 기능_식량의 안정적 공급	-	0
	농업, 농촌의 기능_국토의 균형 발전 이바지	-	0
	농업, 농촌의 기능_일자리 창출	-	0
	농업, 농촌의 기능_환경, 생태계 보전에 기여	-	0
	농업, 농촌의 기능_전통문화 계승, 여가를 보내는 공간	-	0
	농업, 농촌의 기능_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	-	0
	농업, 농촌의 기능_난개발로 인한 농촌경관 훼손	-	0
	농업, 농촌의 기능_불리한 생활 여건	-	0
	농업, 농촌의 기능_정부 지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	-	0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찬반 여부	-	0
	농업인 대상 세제혜택에 대한 인식	-	0
	농촌 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인식	-	0
	타 산업, 직업 대비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	0
	농업의 매력에 대한 인식	-	0
	최근 농촌 여행 경험 및 앞으로의 의향	-	0
	농촌 여행 희망 시 관심사	-	0
	농촌 여행 시 희망 체류 기간	-	0
	농촌 여행 시 희망 숙박 시설	-	0
	농촌 여행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0
농정 전반 및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_쌀	0	0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_한우	0	0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_돼지고기	0	0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_닭고기	0	-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_신선채소	0	-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_과일	0	0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_화훼	-	0
	타 산업 대비 농업의 발전 가능성	0	-
	한국농업 미래에 대한 전망	0	0
	5년 전 대비 올해 농촌 생활 수준	0	-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	0	0
	도시 대비 농촌 생활 수준	0	0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0	0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0	0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	0	0

(계속)

분야	세부항목	농업인	도시민
농정 전반 및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공익형 직불제도의 개편에 대한 인식	0	-
	공익형 직불제도의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	0	-
	농업부문 피해 보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0	0
	농업 소득의 불안정성에 대한 의견	0	-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 농업정책	0	0
	식품 안전 관련 불안 요소	0	0
	외국인이 체험해보았으면 하는 한국 음식문화	0	0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과제	0	0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	0	0
	은퇴 후, 귀농귀촌 희망 여부	-	0
	귀농귀촌 희망 이유	-	0
	귀농귀촌의 구체적 시기	-	0
	귀농귀촌하고 싶지 않은 이유	-	0
	현재 거주지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만족도	-	0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_채소	-	0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_육류	-	0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_곡물	-	0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_과일	-	0
	수입산 대비 국산 농산물의 안정성	-	0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인식	-	0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시 예상되는 농산물 구입 행태	-	0
	최근 5년간 국산 농산품의 안전성 개선에 대한 인식	-	0
농업경영에 대한 인식	올해 농사 만족도	0	-
	올해 농사 불만족 사유	0	-
	농업 종사 직업 만족도_전반적 만족	0	-
	농업 종사 직업 만족도_일의 내용	0	-
	농업 종사 직업 만족도_수입	0	-
	농업 종사 직업 불만족 사유	0	-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농사방법과 기술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도로교통 등 생활환경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보건·의료 시설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문화·복지 시설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이웃과의 관계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공동체 생활 및 문화	0	-

(계속)

분야	세부항목	농업인	도시민
농업경영에 대한 인식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교육 환경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영농(농지)규모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농업인의 농업 애착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농가부채·영농자금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농산물 유통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농외소득 기회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일반 국민의 농업인식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농사 수익성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농자재 수급 및 가격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농산물 수입 개방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정부의 농업인식	0	-
	5년 전 대비 농업경영, 생활환경 변화_농촌일손	0	-
	현재 농촌 생활 만족도	0	-
	현재 분야별 농촌 생활 만족도_주거환경	0	-
	현재 분야별 농촌 생활 만족도_교육환경	0	-
	현재 분야별 농촌 생활 만족도_대중교통	0	-
	현재 분야별 농촌 생활 만족도_쓰레기 및 환경 관리	0	-
	현재 분야별 농촌 생활 만족도_보건 의료	0	-
	현재 분야별 농촌 생활 만족도_문화체육여가	0	-
	현재 분야별 농촌 생활 만족도_소득원 및 일자리	0	-
	현재 분야별 농촌 생활 만족도_이웃과의 관계	0	-
	마을 주민과의 관계	0	-
	마을 내 소속감, 자긍심 보유 여부	0	-

자료: 저자 작성.

2.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도시민은 지역별로 특별/광역시 거주자가 54.7%, 일반시 거주자가 45.3%, 농촌 거주 경험이 '있다'는 34.7%,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30.6%, 화이트칼라 24.2% 등의 순으로 분포함.
- 농업인은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이 60.6%,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 이하가 57.9%,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이 57.7%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영농형태별로는 수도작(25.0%)과 과수(23.4%)의 비중이 크게 차지함.

표 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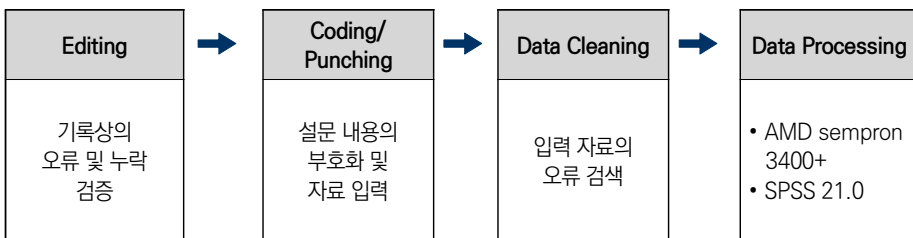
단위: 명, %

농업인(n=1,521)				도시민(n=1,500)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지역별	인천/경기	142	9.3	지역별	서울	356	23.7
	부산/경남/울산	179	11.8		인천/경기	489	32.6
	대구/경북	284	18.7		부산/경남/울산	227	15.1
	광주/전라	399	26.2		대구/경북	127	8.5
	대전/충청	341	22.4		광주/전라	122	8.1
	제주/강원	172	11.3		대전/충청	129	8.6
	무응답	4	0.3		제주/강원	50	3.3
지역 형태별	도시근교	341	22.4	지역 규모별	특별/광역시	820	54.7
	평야지대	324	21.3		일반시	680	45.3
	산간지대	795	52.3	성별	남자	756	50.4
	무응답	61	4.0		여자	744	49.6
연령별	60세 미만	505	33.2	연령별	19~29세	307	20.5
	60세 이상	922	60.6		30대	301	20.1
	무응답	94	6.2		40대	340	22.7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880	57.9		50대	335	22.3
	대졸 이상	637	41.9		60세 이상	217	14.5
	무응답	4	0.3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69	4.6
영능 경력별	20년 미만	631	41.5		고졸	678	45.2
	20년 이상	877	57.7		대재 이상	753	50.2
	무응답	13	0.9	가구원 수별	2명 이하	381	25.4
영능 형태별	수도작	380	25.0		3명	403	26.9
	과수	356	23.4		4명	628	41.9
	노지채소	187	12.3		5명 이상	87	5.8
	축산	131	8.6	월평균 생활비	50만 원 미만	8	0.5
	시설원예	176	11.6		50만~70만 원 미만	29	1.9
	특작	192	12.6		70만~100만 원 미만	83	5.6
	기타	87	5.7		100만~150만 원 미만	199	13.3
	무응답	12	0.8		150만~200만 원 미만	310	20.7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602	39.6		200만~300만 원 미만	547	36.4
	2천만 원 이상	742	48.8		300만~500만 원 미만	297	19.8
	무응답	177	11.6		500만 원 이상	26	1.8
월평균 생활비	50만 원 미만	45	3.0	직업별	화이트칼라	364	24.2
	50만~70만 원	75	4.9		블루칼라	460	30.6
	70만~100만 원	171	11.2		자영업	306	20.4
	100만~150만 원	282	18.5		주부	229	15.3
	150만~200만 원	321	21.1		학생	99	6.6
	200만 원 이상	502	33.0		기타/무직	43	2.9
	무응답	125	8.2	농촌 거주 경험	있다	521	34.7
					없다	979	65.3

3. 자료 처리 및 분석

- 조사된 자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 3단계(Editing, Coding/Punching, Data Cleaning)에 걸친 검증을 실시하고,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음.
- 농업인, 도시민 조사 결과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그룹 간 공통문항 중심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정리하였음.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각 문항을 종속변수로, 응답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계층 간 인식을 비교하였음.
- 또한, 이번 조사 결과와 1994년 이후 조사 결과를 일부 대비하여 연도별 의식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음.

표 1-4 자료 처리 절차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조사 결과



2

조사 결과

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농업·농촌에의 애착심 정도, 다른 산업과 비교해 농업의 발전 가능성,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 전망, 타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질문하였음.
- 또한, 도시민에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인식,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에의 비용 부담 의향,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인식,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음.

1.1. ‘농업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 농업인 73.8%, 도시민 78.0% 지지

○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앞으로 중요할 것’(‘지금까지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지금까지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농업인은 73.8%, 도시민은 78.0%로 나타나 국민의 대다수는 현재보다 미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더 높이 평가함.

- 특히,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도시민은 2011년 90.2%로 매우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2019년 78.0%로 12.2%p 낮아진 수치임.

○ 한편,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는 도시민은 6.1%, 농업인은 11.0%로 나타나 도시민에 비해 농업인의 부정 인식이 4.9%p 높게 조사됨.

표 2-1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2006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06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60.2	61.9	62.2	50.0	45.0	41.5	52.6	81.4	72.4	73.1	54.7	60.9	60.0	54.5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할 것	11.9	15.0	19.1	23.6	19.7	26.3	21.2	7.0	16.9	17.1	27.3	16.3	17.7	23.5
앞으로 중요할 것(소계)	72.1	76.9	81.3	73.6	64.7	67.8	73.8	88.4	89.3	90.2	82.0	77.2	77.7	78.0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10.2	10.2	8.4	10.1	16.1	16.0	11.0	3.3	4.4	3.7	4.1	1.7	3.5	6.1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16.7	12.4	9.7	14.5	17.2	14.9	14.7	8.3	6.2	6.1	13.9	21.1	18.8	15.8
앞으로 중요치 않을 것(소계)	26.9	22.6	18.1	24.6	33.3	30.9	25.7	11.6	10.6	9.8	18.0	22.8	22.3	21.9
모름/무응답	1.1	0.6	0.7	1.8	2.0	1.4	0.5	-	-	-	-	-	-	-

주: 격년 주기 조사 문항.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1.2. 농업·농촌에 애착심 ‘많다’, 농업인과 도시민 인식 차이 커

○ 농업·농촌에 애착 정도가 ‘많다’는 농업인 78.2%, 도시민 38.5%로 농업인과 도시민 간 39.7%p의 인식 차이를 보였음. ‘없다’는 농업인 4.1%, 도시민 24.7%로 농업인보다 도시민이 6배 더 많은 부정 의견을 보임.

- 농업·농촌에 애착 정도가 ‘많다’는 농업인은 60세 미만, 영농경력이 20년 미만, 영농형태는 축산, 시설원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도시민은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자영업, 주부 계층에서, 농촌거주 경험이 있고, 가족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 높게 나타남.

표 2-2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우 많다	20.3	27.8	31.1	22.3	19.4	60.5	23.3	7.5	8.9	11.9	7.1	6.4	14.7	4.5
대체로 많은 편	51.4	45.7	43.0	45.3	50.0	31.3	55.0	33.5	29.7	31.7	32.5	32.5	37.5	34.0
많다(소계)	71.7	73.4	74.1	67.6	69.4	91.8	78.2	40.9	38.6	43.6	39.7	41.6	52.2	38.5
보통	21.4	18.9	19.3	21.4	20.7	6.2	17.0	33.2	39.5	35.7	35.4	33.6	31.1	36.9
별로 없다	4.3	5.3	4.7	8.0	6.9	1.4	3.8	23.0	19.9	17.2	21.2	22.7	16.2	22.2
전혀 없다	1.3	0.3	0.4	1.6	0.3	0.2	0.3	2.9	2.0	3.4	3.7	2.1	0.6	2.5
없다(소계)	5.6	5.6	5.1	9.5	7.2	1.6	4.1	25.9	59.4	52.9	24.9	24.8	16.8	24.7
모름/무응답	1.3	2.1	1.6	1.5	2.6	0.5	0.6	-	-	-	-	-	-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1.3.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 전망, 과거 10년 전과 비슷해

○ 앞으로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전망한 농업인은 20.8%, ‘비관적’ 전망은 53.1%로 응답함. 도시민은 ‘희망적이다’ 31.7%, ‘비관적이다’ 17.3%로 응답함.

- ‘희망적’이라는 농업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영농경력이 짧을수록, 영농형태는 축산, 시설원예, 노지채소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 ‘희망적’ 전망에 대해 농업인은 과거 10년(2009년 20.2%, 2019년 20.8%)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도시민 역시 동일한 추세(2009년 30.0%, 2019년 31.7%)임.

표 2-3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 전망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2009	2011	2012	2013	2016	2019	2009	2011	2012	2013	2016	2019
매우 희망적	1.9	2.7	2.2	1.1	2.1	1.7	1.7	2.5	1.2	0.8	1.1	2.8
희망적인 편	18.3	19.5	19.3	17.2	17.0	19.1	28.3	21.7	19.2	26.5	31.9	28.9
희망적(소계)	20.2	22.2	21.5	18.3	19.1	20.8	30.0	24.2	20.4	27.3	33.0	31.7
보통	29.4	25.6	22.2	26.3	22.6	25.5	40.3	42.1	42.5	42.5	45.1	51.0
비관적인 편	41.3	42.2	44.6	42.9	45.9	45.6	27.3	32.4	34.6	27.9	20.5	16.8
매우 비관적	8.4	8.1	9.7	11.4	11.0	7.6	2.3	1.3	2.4	2.4	1.4	0.5
비관적(소계)	49.7	50.3	54.3	54.3	56.9	53.1	29.6	33.7	37.0	30.3	21.9	17.3
모름/무응답	0.8	2.0	2.1	1.1	1.5	0.5	-	-	-	-	-	-

주: 3년 주기 조사 문항.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1.4. 타 산업과 비교해 농업의 발전 가능성 ‘긍정’ 인식 증가해

○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49.8%, ‘긍정적이다’ 36.4%로 ‘부정’ 인식이 13.4%p로 크게 나타남.

- ‘긍정적’ 인식은 60세 미만(44.6%), 대재 이상(42.2%)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013년 19.0%에서 2019년 36.3%로 17.3%p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5.0%p(2013년 64.7%, 2019년 49.7%) 감소함.

표 2-4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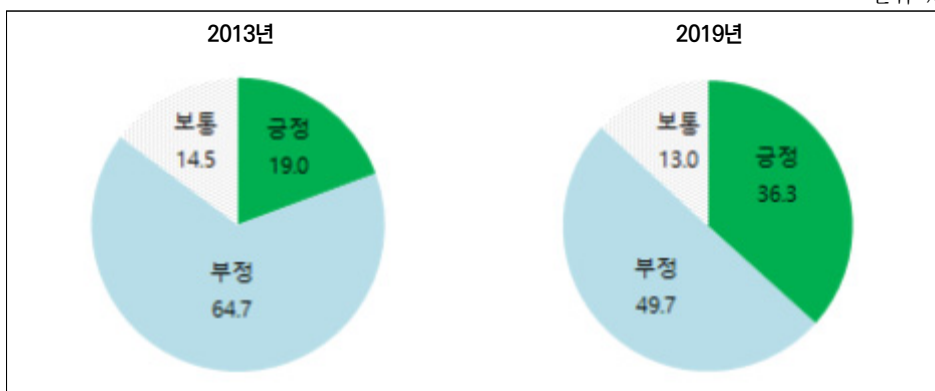
구분	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부정 (소계)	비슷 하다	대체로 긍정적	매우 긍정적	긍정 (소계)	무응답	T/F
전체	5.3	44.4	49.8	13.0	30.8	5.5	36.4	0.9	
연령	60세 미만	3.2	38.4	41.6	13.5	35.2	9.3	44.6	0.4
	60세 이상	6.4	47.6	54.0	12.9	28.3	3.6	31.9	1.2
	무응답	6.4	45.7	52.1	10.6	31.9	4.3	36.2	1.1
교육 수준	고졸 이하	7.0	45.9	53.0	13.3	27.8	4.3	32.2	1.6
	대졸 이상	3.0	42.4	45.4	12.4	35.0	7.2	42.2	0.0
	무응답	0.0	50.0	50.0	25.0	25.0	0.0	25.0	0.0

주: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1.5.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지도 강화 방안 필요

○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³⁾ 관련하여 ‘가치가 많다(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는

3) 조사 문항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기능’으로 제시함.

도시민은 64.2%로 과반이었으며, ‘가치가 없다(전혀 없다, 별로 없다)’는 5.3%에 그쳤음.

○ ‘가치가 많다’는 2018년 72.2%에서 2019년 64.2%로 8.0%p 감소한 반면, ‘보통이다’는 7.5%p(2018년 22.9%, 2019년 30.4%) 증가함.

○ ‘가치가 많다’는 응답은 농촌 거주 경험자, 가족이 농사를 짓는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 농업·농촌에 대한 경험이 있을수록 농업·농촌의 가치를 더 높게 공감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업·농촌과 도시민의 접점을 넓혀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표 2-5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우 많다	14.3	21.6	8.0	6.8	18.4	8.7	10.1	11.9	11.8	7.0	8.1	22.5	8.7
많은 편이다	39.3	41.8	50.6	49.1	45.7	53.3	43.7	54.3	58.7	55.1	61.9	49.7	55.5
많다(소계)	53.6	63.5	58.6	55.9	64.1	61.9	53.7	66.2	70.5	62.1	70.0	72.2	64.2
보통이다	33.7	28.5	33.1	35.7	29.9	33.1	33.5	29.5	26.1	31.3	26.5	22.9	30.4
별로 없다	11.9	7.4	8.0	7.2	5.6	0.3	12.1	4.1	3.3	6.5	3.5	4.7	5.1
전혀 없다	0.8	0.6	0.3	1.2	0.3	4.7	0.7	0.2	0.1	0.2	0.0	0.1	0.3
없다(소계)	12.7	8.0	8.3	8.4	5.9	4.9	12.7	4.3	3.5	6.7	3.5	4.8	5.3
모름/무응답	-	0.1	-	-	0.1	-	-	-	-	-	-	-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1.6. 농업·농촌 기능 중 ‘식량의 안정적 공급’ 중요해

○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 중 ‘식량의 안정적 공급’(87.5%)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았고, ‘전통문화 계승, 여가를 보내는 공간’(83.9%), ‘환경, 생태계 보전에 기여’,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각각 81.0%)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도시민의 10명 중 8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우선시켰지만, 이를 제외한 ‘식품 안전성 향상’, ‘환경 보전’, ‘경관 보전’ 등 다양한 역할 수행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농촌의 부정적 기능 중 ‘주거·교육·교통·복지·보건 등 생활여건이 불리하다’가 80.4%로 가장 높았으며, ‘농촌 지역 난개발 등으로 농촌경관이 훼손된다’(66.6%), ‘농업·농촌이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한다’(55.7%), ‘식품 안전성 차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43.1%) 순으로 나타남.

○ 2017년과 비교해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동의’ 의견은 모두 증가함.

- 긍정 기능인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30.8%p,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 30.5%p, ‘식량(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26.0%p로 2017년과 비교해 ‘동의’ 의견이 큰 폭으로 증가함.
- 또한, ‘주거·교육·교통·복지·보건 등 생활여건이 불리하다’ 32.2%p, ‘농업·농촌이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27.8%p, ‘식품 안전성 차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22.3%p, ‘농촌 지역 난개발 등으로 농촌경관이 훼손된다’ 17.6%p 등의 부정 기능에 대한 ‘동의’ 의견도 높아짐.

표 2-6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잘 모르겠음	
	2017	2019	2017	2019	2017	2019	2017	2019
식량(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7.9	3.5	23.8	8.6	61.5	87.5	1.7	0.2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	16.4	6.7	24.9	11.7	50.5	81.0	2.5	0.6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24.1	25.3	26.2	15.9	42.4	58.2	1.5	0.5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한다	8.4	6.5	18.7	12.4	66.0	81.0	1.2	0.2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15.0	5.9	25.0	10.1	53.1	83.9	0.9	0.3
식품 안전성 차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40.8	43.5	31.0	13.3	20.8	43.1	1.2	0.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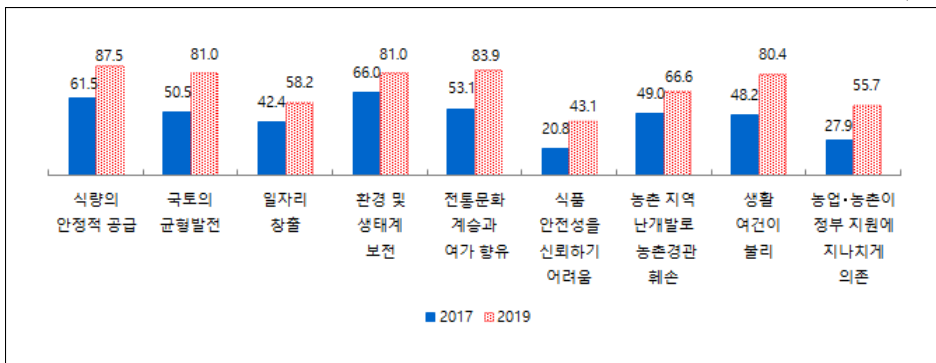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잘 모르겠음	
	2017	2019	2017	2019	2017	2019	2017	2019
농촌 지역 난개발 등으로 농촌경관이 훼손된다	22.2	19.3	21.6	13.8	49.0	66.6	1.2	0.2
주거·교육·교통·복지·보건 등 생활여건이 불리하다	18.0	8.2	26.1	11.2	48.2	80.4	1.6	0.3
농업·농촌이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37.3	22.4	27.6	21.3	27.9	55.7	1.3	0.4

주: 그렇지 않다(0+1+2+3+4점), 보통이다(5점), 그렇다(6+7+8+9+10점)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그림 2-2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동의(‘그렇다’)

단위: %



주: ‘잘 모르겠음’ 비율은 제외.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1.7.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에 도시민 60.2% ‘세금 추가 찬성’

○ 국가정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 의견이 60.2%로 ‘반대’(36.2%) 의견보다 24.0%p 크게 나타남.

- ‘찬성’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촌거주 경험 응답자, 가족이 농사를 짓는 응답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 ‘찬성’ 의견은 2018년 53.0%에서 2019년 60.2%로 7.2%p 증가하였으며, 이는 그동안의 증감 폭을 감안해볼 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적극 찬성’은 2016년 1.4%, 2017년 9.6%, 2018년 14.5%, 2019년 18.4%로 점차 상승하고 있음. ‘적극 반대’ 의견은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1.4%를 기록하였음.

표 2-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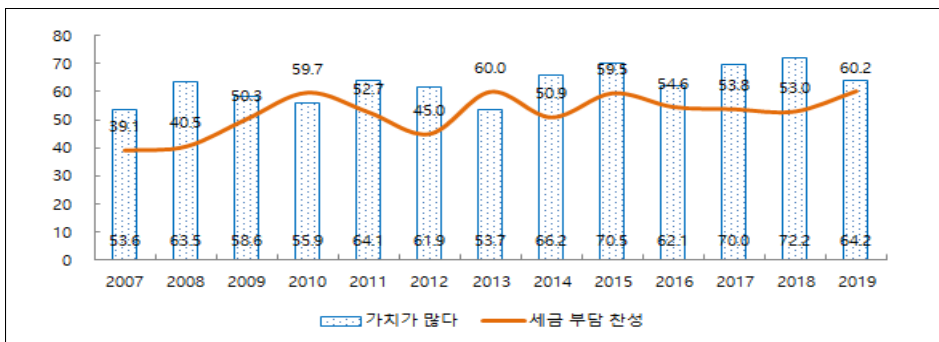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적극 찬성	5.0	6.5	3.2	4.2	7.7	2.9	14.9	4.3	3.7	1.4	9.6	14.5	18.4
찬성한다	34.1	34.0	47.1	55.5	45.0	42.1	45.1	46.6	55.7	53.2	44.2	38.5	41.8
찬성(소계)	39.1	40.5	50.3	59.7	52.7	45.0	60.0	50.9	59.5	54.6	53.8	53.0	60.2
반대한다	24.7	22.1	32.4	36.7	29.3	38.9	29.2	31.3	27.7	32.2	38.7	32.4	34.7
적극 반대	3.7	4.6	9.5	3.6	6.4	9.0	2.8	6.7	5.0	6.6	2.7	5.5	1.4
반대(소계)	28.4	26.7	41.9	40.3	35.7	47.9	32.0	38.0	32.7	38.8	41.4	37.9	36.2
잘 모르겠다	32.5	32.9	7.8	-	11.5	6.9	7.9	11.0	7.8	6.6	4.8	9.0	3.6
모름/무응답	-	-	-	-	-	0.2	-	-	-	-	-	-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많다’와 세금 추가 부담에 ‘찬성’의 견 간 격차는 2018년 19.2%p까지 증가했다가 2019년 4.0%p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

그림 2-3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정’과 세금 부담 ‘찬성’

단위: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1.8. 농업인 대상 각종 세제혜택 ‘긍정’ 51%, 2년 전과 동일

○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면제 등)에 대해 ‘긍정’ 의견은 51.0%, ‘부정’ 의견은 7.5%로 나타남.

- ‘긍정’ 의견은 인천/경기 지역, 농촌거주 경험이 있으며, 가족이 농사를 짓는 응답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2-8 농업인 대상 세제혜택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부정	대체로 부정	부정 (소계)	보통	대체로 긍정	매우 긍정	긍정 (소계)	T/F
전체		0.2	7.3	7.5	41.5	45.2	5.8	51.0	
지역	서울	0.0	7.3	7.3	47.2	44.9	0.6	45.5	12.82***
	인천/경기	0.0	5.6	5.6	31.5	48.9	14.1	62.9	
	부산/경남/울산	0.0	6.2	6.2	45.1	47.0	1.8	48.8	
	대구/경북	0.0	10.8	10.8	51.6	34.4	3.1	37.6	
	광주/전라	0.0	8.2	8.2	48.4	42.6	0.8	43.4	
	대전/충청/세종	2.2	11.2	13.4	42.1	39.8	4.7	44.5	
농촌거주 경험	제주/강원	0.0	8.0	8.0	40.0	50.0	2.0	52.0	8.20***
	있다	0.0	4.0	4.0	31.4	55.8	8.7	64.6	
가족농사 여부	없다	0.3	9.1	9.4	46.9	39.5	4.2	43.7	8.53***
	없다	0.3	4.2	4.5	26.6	58.0	10.9	68.9	
	있다	0.2	8.4	8.6	46.9	40.5	4.0	44.5	
	없다	0.2	8.4	8.6	46.9	40.5	4.0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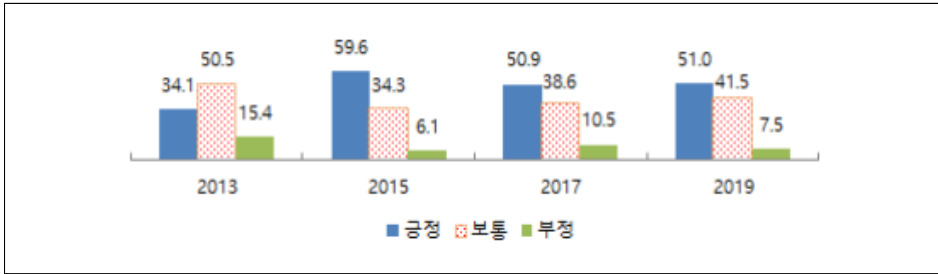
주: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 ‘긍정’ 의견은 2015년 59.6%, 2019년 51.0%로 감소 추세이지만, ‘보통’은 같은 기간 7.2%p 증가하여 도시민의 과반은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인식함.

그림 2-4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1.9. 농촌 복지 관련 예산 증액 ‘찬성’ 의견, 최근 3년째 정체

○ 농촌 주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농촌복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 46.5%, ‘반대한다’ 13.9%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3배 이상 많았음.

- ‘찬성’ 의견은 농촌거주 경험 응답자(61.2%), 농촌 거주 가족이 있는 경우(65.8%)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표 2-9 농촌 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적극 반대	반대	반대 (소계)	보통	찬성	적극 찬성	찬성 (소계)	T/F
전 체		0.5	13.4	13.9	39.6	40.9	5.6	46.5	
지역	서울	0.0	18.5	18.5	43.3	37.4	0.8	38.2	6.08***
	인천/경기	0.8	12.8	13.6	32.5	40.4	13.5	53.9	
	부산/경남/울산	1.3	10.1	11.4	44.8	41.6	2.2	43.8	
	대구/경북	0.0	11.5	11.5	47.3	40.4	0.8	41.2	
	광주/전라	0.0	10.7	10.7	43.4	43.4	2.5	45.9	
	대전/충청/세종	0.0	11.7	11.7	39.8	44.0	4.5	48.5	
농촌거주 경험	제주/강원	2.0	12.0	14.0	30.0	56.0	0.0	56.0	8.50***
	있다	0.4	7.6	7.9	30.9	52.7	8.5	61.2	
가족농사 여부	없다	0.6	16.4	17.0	44.2	34.7	4.0	38.7	9.38***
	있다	0.3	7.7	8.0	26.3	54.2	11.6	65.8	
	없다	0.6	15.4	16.0	44.4	36.1	3.4	39.5	
	있다								

자료: 저자 작성.

○ 농촌 복지 관련 예산 증대에 ‘찬성’ 의견은 2017년 51.3%, 2018년 47.8%, 2019년 46.5%로 감소 추세이며, 이는 2006년(75.4%)과 비교할 때 크게 낮아진 수준임. ‘반대’(적극 반대, 반대한다) 의견은 최근 3년째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2-10 농촌 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인식(연도별)

단위: %

구분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적극 찬성	12.9	20.2	6.4	6.7	16.2	5.5	4.1	7.8	5.2	1.1	4.1	5.5	5.6
찬성한다	62.5	53.1	57.0	56.8	51.9	50.5	45.9	46.4	56.7	34.0	47.1	42.3	40.9
찬성(소계)	75.4	73.3	63.4	63.5	68.1	56.1	50.0	54.2	61.9	35.1	51.3	47.8	46.5
보통이다	21.3	22.7	31.4	30.1	25.3	31.8	37.0	38.7	30.3	36.8	33.9	37.7	39.6
반대한다	3.1	3.2	5.2	5.2	6.0	11.7	12.1	6.7	7.3	25.7	14.0	12.7	13.4
적극 반대	0.3	0.7	0.1	0.1	0.6	0.4	0.9	0.4	0.5	2.5	0.8	1.7	0.5
반대(소계)	3.4	3.9	5.3	5.3	6.6	12.1	13.0	7.1	7.8	28.1	14.8	14.4	13.9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1.10. 타 산업, 직업 대비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되고 있어

○ 다른 산업이나 직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다’는 31.1%, ‘부정적이다’는 26.1%로 나타남. ‘보통’은 42.8%로 가장 높았음.

- ‘긍정’ 의견은 대구/경북(44.1%), 부산/울산/경남(43.8%), 고졸(35.6%)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표 2-11 다른 산업, 직업 대비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부정 (소계)	보통 이다	대체로 긍정적	매우 긍정적	긍정 (소계)	T/F
전 체		2.3	23.7	26.1	42.8	29.5	1.6	31.1	
지역	서울	0.0	20.8	20.8	51.4	27.5	0.3	27.8	21.23***
	인천/경기	7.0	35.5	42.5	34.3	22.4	0.8	23.2	
	부산/경남/울산	0.0	11.4	11.4	44.8	42.1	1.7	43.8	
	대구/경북	0.0	13.2	13.2	42.7	43.3	0.8	44.1	
	광주/전라	0.0	20.5	20.5	39.3	30.3	9.8	40.2	
	대전/충청/세종	0.8	23.9	24.7	48.7	24.7	1.9	26.6	
	제주/강원	0.0	20.0	20.0	50.0	30.0	0.0	3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4	19.0	20.5	44.7	32.4	2.4	34.8	12.75***
	고졸	1.4	19.6	21.1	43.3	33.7	1.9	35.6	
	대재 이상	3.2	27.9	31.1	42.2	25.4	1.3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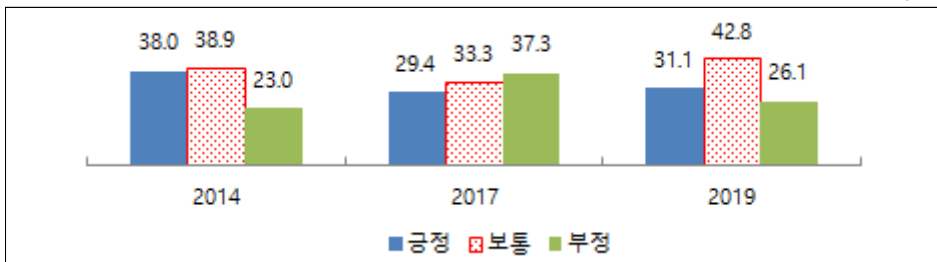
주: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 2017년에 비해 ‘긍정’ 의견은 1.7%p, ‘보통’은 9.5%p 증가하였으며, ‘부정’ 의견은 11.2%p 감소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2-5 다른 산업, 직업 대비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단위: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2.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수요

- 도시민의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농촌 문제와의 관련성 인식 및 관심도 수준, 거주지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음.
- 또한, 도시민의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 구체적 시기,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이유와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 이와 함께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경쟁력 인식, 국산 및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인식,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 개선 정도 등을 조사하였음.
- 농업인과 도시민의 공통 조사 문항으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농촌지역의 경제 상황 등도 질문하였음.

2.1. 농업·농촌 문제 관심도와 관련성 점차 하락 추세

-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34.2%, ‘보통이다’는 36.8%, ‘없다’는 29.1%였음.
 - ‘많다’는 의견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촌거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가족이 농사를 짓는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련이 ‘많다’는 28.6%, ‘보통이다’는 34.6%, ‘없다’는 36.8%로 나타남.

○ 본인과의 관련이 ‘많다’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촌거주 경험이 있고, 가족이 농사를 짓는 응답자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결과는 평소 농업정책이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따라서 도시민의 과반수는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성이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표 2-12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및 관련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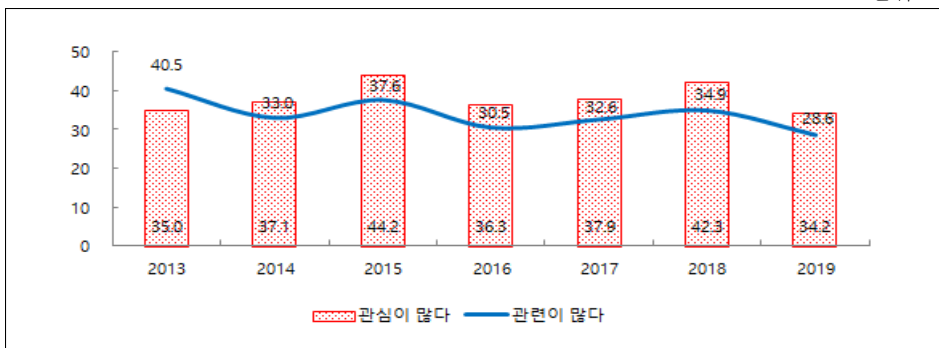
단위: %

문항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 관심 정도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련 정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우 많다	5.8	6.2	7.7	3.3	3.4	6.0	3.9	7.7	4.9	8.8	3.9	4.7	7.0	4.3
많은 편	29.2	30.9	36.5	33.0	34.5	36.3	30.3	32.8	28.1	28.8	26.6	27.9	27.9	24.3
많다(소계)	35.0	37.1	44.2	36.3	37.9	42.3	34.2	40.5	33.0	37.6	30.5	32.6	34.9	28.6
보통	37.1	38.8	33.1	37.5	32.5	37.1	36.8	34.5	37.9	36.3	39.3	34.5	38.6	34.6
보통 이상(소계)	72.1	75.9	77.3	73.8	70.4	79.4	71.0	75.0	70.9	73.9	69.8	67.1	73.5	63.2
별로 없다	25.2	22.0	20.4	22.8	27.4	19.3	26.1	21.9	25.1	22.0	24.3	29.8	24.2	31.2
전혀 없다	2.7	2.1	2.3	3.4	2.2	1.3	3.0	3.1	4.1	4.1	5.9	3.0	2.3	5.6
없다(소계)	27.9	24.1	22.7	26.2	29.6	20.6	29.1	25.0	29.2	26.1	30.2	32.8	26.5	36.8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그림 2-6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과 관련이 ‘많다’

단위: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2.2. 도시민 10명 중 3명, 은퇴 후 귀농·귀촌 희망

○ 은퇴 후 혹은 여건이 되면 귀농·귀촌을 할 생각이 ‘있다’는 도시민은 34.6%, ‘없다’는 59.3%로 조사됨.

-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50대(51.1%) 및 60대(43.2%), 자영업자(43.6%), 농촌거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52.7%)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표 2-13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

단위: %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없다 (소계)	조금 있다	매우 많다	많다 (소계)	잘 모르겠다	T/F
전 체		23.6	35.7	59.3	26.2	8.5	34.6	6.1	
연령	19~29세	39.8	38.4	78.2	13.0	2.9	15.9	5.9	35.33***
	30대	27.9	38.8	66.8	21.4	5.6	26.9	6.3	
	40대	18.5	38.0	56.5	28.7	8.0	36.7	6.8	
	50대	12.5	30.7	43.1	35.8	15.3	51.1	5.8	
	60대	19.9	31.5	51.4	32.5	10.7	43.2	5.4	
직업	화이트칼라	22.1	34.4	56.5	28.3	7.7	36.1	7.4	17.41***
	블루칼라	19.6	37.9	57.5	27.2	9.2	36.4	6.2	
	자영업	13.3	37.3	50.6	30.3	13.2	43.6	5.9	
	주부	33.9	35.2	69.2	22.1	4.6	26.6	4.2	
	학생	50.4	32.6	83.0	11.1	0.0	11.1	5.9	
	기타/무직	36.4	20.0	56.4	23.1	13.9	37.0	6.6	
농촌거주 경험	있다	11.4	29.0	40.3	36.1	16.5	52.7	7.0	12.61***
	없다	30.1	39.2	69.3	20.9	4.2	25.1	5.6	

자료: 저자 작성.

○ 귀농·귀촌 의향 비율은 2006년 71.3%, 2015년 47.0%, 2019년 34.6%로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 추세임. 지난 2006년 71.3%를 보였던 귀농·귀촌 의향 의견은 2019년 36.7%p나 낮아졌으며, ‘없다’는 의견도 59.3%로 2006년 28.7%보다 30.6%p 증가해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줌.

표 2-14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연도별)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9
매우 많다	21.7	16.1	19.7	13.2	9.1	20.4	12.5	15.0	8.7	10.5	6.7	18.7	8.5
조금 있다	49.6	47.6	43.1	39.8	38.6	43.3	41.1	28.6	30.3	36.5	34.5	25.4	26.2
있음(소계)	71.3	63.7	62.8	53.0	47.7	63.7	53.6	43.6	39.0	47.0	41.3	44.1	34.6
별로 없다	21.0	23.4	22.7	27.4	34.5	20.9	27.5	32.9	28.7	25.1	29.5	33.7	35.7
전혀 없다	7.7	12.9	14.5	19.7	17.8	15.5	19.0	19.7	25.8	23.4	25.8	20.2	23.6
없음(소계)	28.7	36.3	37.2	47.1	52.3	36.4	46.5	52.6	54.5	48.5	55.3	53.9	59.3
잘 모르겠다	-	-	-	-	-	-	-	3.7	6.5	4.5	3.4	2.0	6.1

주: 2018년 응답항목은 '5점 척도'이므로 제외함.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 귀농·귀촌 의향자(n=520)에게 구체적 시기를 질문한 결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았고, 이어 '10년 이후' 15.4%, '10년 내' 12.2% 등의 순이었음.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최근 5년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10년 내'와 '10년 이후'라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응답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

표 2-15 귀농·귀촌 구체적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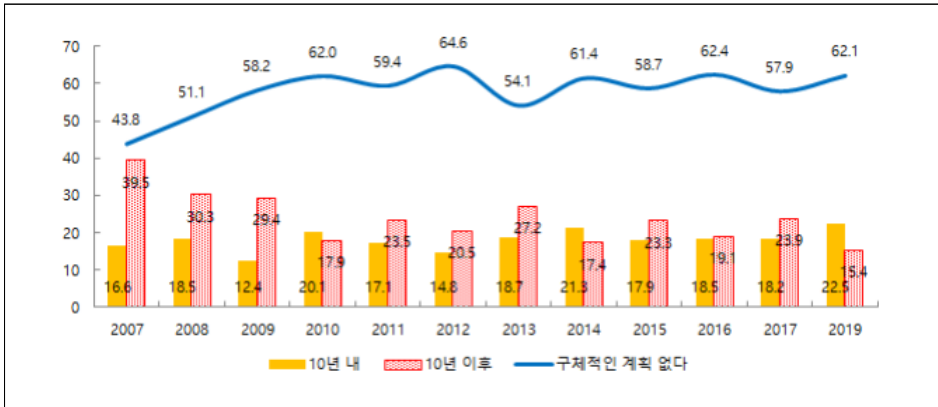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9
3년 내	2.4	3.1	1.4	1.4	3.1	1.9	1.2	2.1	1.8	2.9	2.0	1.7
5년 내	3.0	6.1	3.8	5.0	5.3	3.6	5.4	6.7	5.2	4.5	4.4	8.6
10년 내	11.2	9.3	7.2	13.7	8.7	9.3	12.1	12.5	10.9	11.1	11.8	12.2
10년 이후	39.5	30.3	29.4	17.9	23.5	20.5	27.2	17.4	23.3	19.1	23.9	15.4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43.8	51.1	58.2	62.0	59.4	64.6	54.1	61.4	58.7	62.4	57.9	62.1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그림 2-7 귀농·귀촌 구체적 시기

단위: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이유(n=520)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지만, 2011년 61.5%에서 2019년 46.0%로 감소해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함.

○ 반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21.4%),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11.2%),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9.0%) 응답 비율은 같은 기간 각각 4.0%p, 5.0%p, 4.3%p 상승함.

표 2-16 귀농·귀촌 희망 이유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9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2.2	4.4	4.6	0.6	6.2	7.0	8.3	8.9	7.4	6.6	5.7	11.2
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을 지급하기 위해	4.0	3.6	3.2	6.0	4.3	7.8	8.3	9.7	6.4	10.5	3.8	3.7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61.9	57.5	62.4	61.0	61.5	58.7	52.4	50.1	58.2	51.4	58.1	46.0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2.3	3.0	1.5	3.9	3.5	3.2	4.3	4.1	4.0	3.7	3.3	2.8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6.5	2.7	1.9	5.0	4.7	4.9	6.0	3.2	5.2	4.5	7.4	9.0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17.7	22.1	19.4	17.9	17.4	14.6	17.7	21.4	16.2	20.2	18.3	21.4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5.1	6.6	5.5	2.4	1.6	3.9	2.6	2.4	2.7	3.1	3.2	5.3
기타	0.2	0.1	1.4	3.2	-	-	0.5	0.2	-	-	0.2	0.6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 귀농·귀촌 미의향자(n=889)는 귀농·귀촌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생활하기에 소득이 부족할 것 같아서’(29.9%), ‘농업노동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28.8%), ‘지역토박이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18.0%), ‘의료 교통 등 생활환경의 불편 때문에’(11.8%), ‘자녀 교육에 제약이 많은 환경 때문에’(8.6%), ‘외로움, 고립감 등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의료, 교통 등 생활환경의 불편 때문에’는 50대(37.6%)에서, ‘농업노동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는 19~29세(36.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8 귀농·귀촌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자료: 저자 작성.

2.3. 도시민 64.4%, 거주 지역 주거 및 생활환경에 ‘만족’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만족’ 의견이 64.4%로 많았고, ‘불만’ 의견은 3.6%에 그쳤음. ‘그저 그렇다’는 32.0%였음.

- 특히, 남성(60.9%)에 비해 여성(67.9%)의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17 현재 거주지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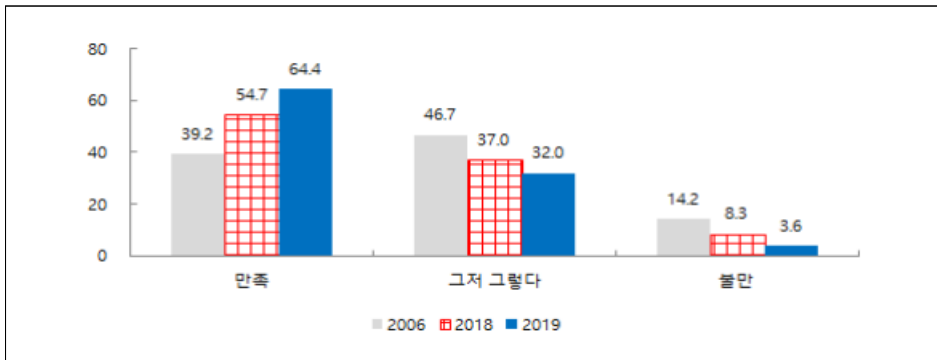
구분		대체로 불만이다	불만 (소계)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이다	매우 만족이다	만족 (소계)	T/F
전 체		3.6	3.6	32.0	60.9	3.5	64.4	
성별	남자	3.9	3.9	35.2	57.9	3.0	60.9	-2.73**
	여자	3.3	3.3	28.7	64.0	4.0	67.9	
가족농사 여부	있다	3.2	3.2	27.2	65.9	3.7	69.6	2.26*
	없다	3.8	3.8	33.7	59.1	3.4	62.5	

자료: 저자 작성.

○ ‘만족’ 의견은 2006년 39.2%에서 2019년 64.4%로 25.2%p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저 그렇다’와 ‘불만’ 의견은 감소 추세임.

그림 2-9 현재 거주지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만족도

단위: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2.4. 도시민, 농식품 구매 시 ‘안전성’, ‘품질(맛)’을 우선 고려

○ 도시민의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우선 고려사항으로 채소, 육류, 곡물, 과일 모든 품목에서 ‘안전성’과 ‘품질(맛)’을 꼽았음. 특히, ‘과일’ 품목은 다른 품목에 비해 ‘품질(맛)’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채소는 2018년에 ‘품질(맛)’(45.1%)을, 2019년에는 ‘품질(맛)’(38.0%)보다는 ‘안전성’(46.9%)을 우선 고려사항으로 답하였음.

- 또한, 육류 구입 시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품질(맛)’(2018년 47.3%, 2019년 47.4%)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음. 곡물은 2018년에 ‘품질(맛)’(35.3%)과 ‘안전성’(34.5%)을 택한 반면, 2019년에는 ‘품질(맛)’(36.1%)보다 ‘안전성’(39.6%)을 꼽았음. 과일은 2018년(62.5%)과 2019년(67.2%) 모두 ‘품질(맛)’이라고 응답함.

○ 또한, 채소, 곡물, 과일 구입 시 ‘가격’을 고려한다는 의견은 전년 대비 각각 2.6%p, 4.0%p, 2.8%p로 감소해 ‘가격’보다 ‘안전성’, ‘품질(맛)’ 등을 더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꼽고 있음.

표 2-18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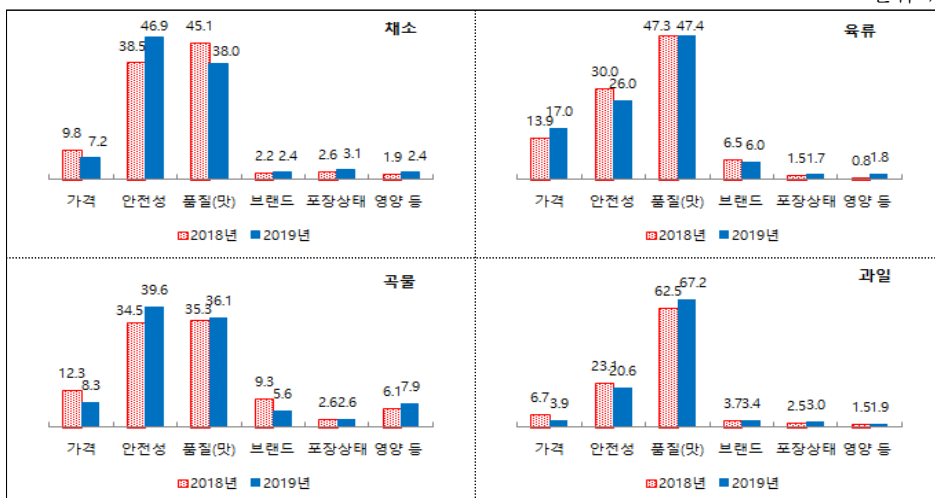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가격		안전성		품질(맛)		브랜드		포장상태		영양 등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채소	9.8	7.2	38.5	46.9	45.1	38.0	2.2	2.4	2.6	3.1	1.9	2.4
육류	13.9	17.0	30.0	26.0	47.3	47.4	6.5	6.0	1.5	1.7	0.8	1.8
곡물	12.3	8.3	34.5	39.6	35.3	36.1	9.3	5.6	2.6	2.6	6.1	7.9
과일	6.7	3.9	23.1	20.6	62.5	67.2	3.7	3.4	2.5	3.0	1.5	1.9

주: 2008~2017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포장상태’ 대신 ‘원산지(국산/수입)’로 조사됨.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그림 2-10 농축산물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단위: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2.5. 도시민,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경쟁력 높게 평가

○ 수입산과 비교해 국산 농축산물 중 ‘한우’ 경쟁력이 ‘높다’는 도시민은 73.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쌀’(67.0%), ‘돼지고기’(59.7%), ‘과일’(5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도시민은 2017년도 대비 ‘과일’을 제외한 ‘쌀’(8.1%p), ‘한우’(7.8%p), ‘돼지고기’(3.5%p)의 경쟁력이 ‘높다’는 의견이 증가하였음. ‘과일’의 경우에 2017년(53.0%), 2019년(52.3%) 비슷하게 나타남.

표 2-19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인식

단위: %

구분	낮다					보통					높다				
	2013	2015	2016	2017	2019	2013	2015	2016	2017	2019	2013	2015	2016	2017	2019
쌀	13.1	9.9	13.8	14.3	9.7	26.3	23.9	23.0	26.7	23.3	60.7	66.2	63.1	58.9	67.0
한우	12.2	8.2	14.8	13.7	11.2	28.9	25.5	25.6	20.8	15.4	58.9	66.3	59.6	65.6	73.4
돼지고기	12.5	8.7	13.7	11.8	13.6	37.7	38.3	39.7	32.0	26.6	49.8	53.0	46.5	56.2	59.7
과일	11.7	8.9	9.7	12.6	12.0	39.0	33.5	44.7	34.3	35.8	49.3	57.7	45.6	53.0	52.3

주: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쌀’, ‘한우’, ‘돼지고기’, ‘과일’ 품목만 비교.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2.6. 수입산 농산물보다 국산 농산물 ‘안전하다’ 10명 중 7명

○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 농산물보다 안전하다’는 77.3%인 반면 ‘수입산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보다 안전성이 높다’는 6.7%에 그쳤음.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는 16.0%였음.

-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 농산물보다 안전하다’는 지역, 성별, 교육 수준 등 모든 그룹에서 70% 이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표 2-20 수입 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단위: %

구분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 농산물보다 안전하다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	수입산 농산물이 국산보다 안전성이 높다	$\chi^2(df)$
전 체		77.3	16.0	6.7	
성별	남자	74.4	19.6	6.0	15.63(2)***
	여자	80.3	12.2	7.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3.1	9.9	7.0	20.14(4)***
	고졸	78.4	12.8	8.8	
	대재 이상	75.9	19.3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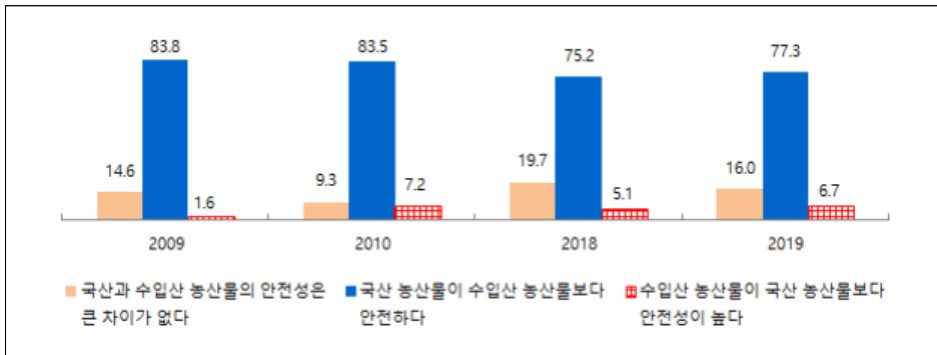
주: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저자 작성.

-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 농산물보다 안전하다’는 2009년(83.8%)에 비해 6.5%p 낮아진 77.3%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도 시민은 국산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2-11 수입 농산물과 비교한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단위: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2.7. 도 시민, 수입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 점차 줄어들고 있어

- 수입 농산물에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다’는 51.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수입 농산물에 대해 인식은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 구매한다’는 22.3%로 나타남.

-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다’는 19~29세(65.6%), 농촌거주 경험이 없는 응답자(57.3%)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 수입 농산물에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다’는 2015년(38.6%)에 비해 13.3%p 증가해 도 시민들의 수입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1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수입 농산물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 자주 구 매 못함	수입 농산물이 좋고 구매도 거리낌 없음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다	수입 농산물 좋지 않게 생 각하고 구매하 지 않음	수입 농산물 인식은 좋지 않지만 가격 저렴해 구매	x2(df)
전 체		1.6	8.2	51.9	16.1	22.3	
연령	19~29세	1.5	7.0	65.6	11.1	14.7	51.83(16)***
	30대	2.3	11.7	52.7	14.0	19.3	
	40대	1.4	5.9	47.8	18.8	26.1	
	50대	2.0	8.3	45.8	17.3	26.6	
	60대	0.0	8.2	47.3	20.2	24.3	
농촌거주 경험	있다	1.5	7.8	41.9	21.5	27.3	39.33(4)***
	없다	1.6	8.4	57.3	13.2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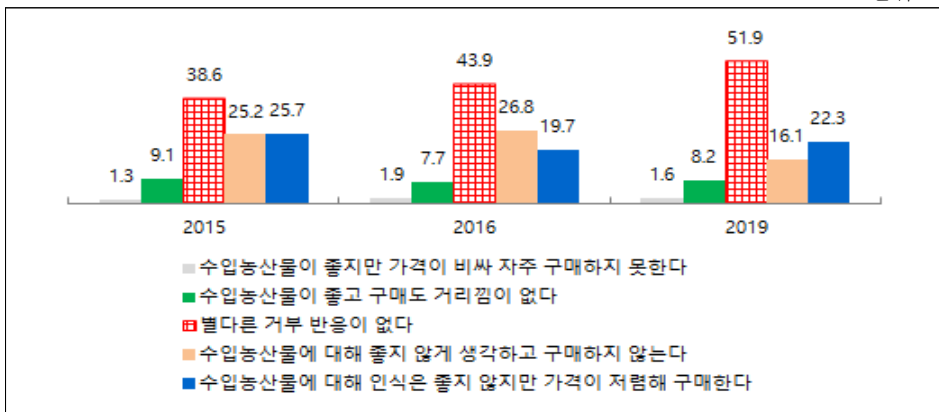
주: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 또한, ‘수입 농산물에 대해 인식은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 구매한다’는 2016년(19.7%)과 비교해 2.6%p 증가한 반면, ‘수입 농산물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구매하지 않는다’는 2016년 26.8%, 2019년 16.1%로 10.7%p 감소해 국산 농산물 구매 의향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2-12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2.8. 우리 농산물 구매 충성도 뚜렷한 감소 추세 보여

○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을 구입할 때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가 41.9%,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가 41.1%로 비슷한 비율로 응답함.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17.1%에 그쳤음.

-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는 농촌거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25.9%)에서 농촌거주 경험이 없는 응답자(12.3%)보다 2배 이상 많았음.

표 2-22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구매 의향

단위: %

구분		수입 농산물에 비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 에 비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 구입	국산/수입산이든 품질 우선 고려해 구입	x2(df)
전 체		17.1	41.1	41.9	
직업	화이트칼라	18.3	41.1	40.6	36.57(10)***
	블루칼라	18.2	40.4	41.3	
	자영업	11.8	48.5	39.8	
	주부	23.1	33.9	43.0	
	학생	4.0	42.5	53.4	
	기타/무직	29.3	29.4	41.3	
농촌거주 경험	있다	25.9	36.2	37.9	44.19(2)***
	없다	12.3	43.6	44.0	

주: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다’는 2007년 19.9%, 2019년 41.1%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농식품 구매 시 품질을 최우선 고려하되 국산과 가격 차가 크면 수입산도 괜찮다는 의미로 풀이됨.

○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는 2018년 29.3%에서 2019년 41.9%로 12.6%p 증가하여, 품질만 좋으면 굳이 국산 농산물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도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다’는 의견은 2010년 45.1%, 2015년 21.0%, 2019년 17.1%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미래 농업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구매 충성도가 아닌 품질은 물론 가격 경쟁력에 대한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임.

표 2-23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구매 충성도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33.7	38.0	37.0	45.1	39.1	34.1	30.4	29.5	21.0	32.8	24.2	32.7	17.1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19.9	19.4	31.1	28.3	22.7	28.5	36.1	35.1	39.3	28.7	34.4	37.9	41.1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46.3	41.9	31.9	26.7	38.2	37.3	33.5	35.4	39.7	38.5	41.4	29.3	41.9
기타	0.2	0.6	-	-	-	-	-	-	-	-	-	-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각 연도).

2.9. 소비자인 도시민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높아져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56.2%, ‘보통이다’ 33.6%, ‘개선되지 않고 있다’ 10.2%로 조사됨.

- ‘개선되고 있다’는 60대(66.6%)와 50대(61.6%), 가족농사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63.4%)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표 2-24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 개선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전혀 개선 안 됨	개선되지 않은 편	개선 안 됨 (소계)	보통임	개선되고 있는 편	매우 개선됨	개선되고 있음(소계)	T/F
전 체		0.8	9.4	10.2	33.6	53.7	2.5	56.2	
연령	19~29세	0.7	8.9	9.6	39.5	49.2	1.6	50.9	4.22**
	30대	0.6	12.1	12.8	38.1	46.5	2.6	49.1	
	40대	0.9	9.2	10.1	34.6	53.3	2.0	55.3	
	50대	0.8	8.8	9.7	28.7	59.0	2.7	61.6	
	60대	0.9	7.5	8.4	25.0	62.5	4.1	66.6	
가족농사 여부	있다	0.2	9.9	10.2	26.4	60.5	3.0	63.4	2.63**
	없다	1.0	9.2	10.2	36.2	51.2	2.3	53.6	

주: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 ‘개선되고 있다’는 2013년 24.2%에서 2019년 56.2%로 32.0%p 크게 증가한 반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같은 기간 35.3%에서 10.2%로 25.1%p나 감소함.

표 2-25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 개선에 대한 인식(연도별)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9
매우 개선되고 있다	3.9	3.7	2.9	1.6	1.7	2.5
개선되고 있는 편	20.3	56.9	50.7	51.0	44.1	53.7
개선되고 있음(소계)	24.2	60.6	53.6	52.6	45.9	56.2
보통	40.5	33.9	33.5	36.0	33.9	33.6
개선되고 있지 않은 편	34.9	4.9	11.5	10.2	18.5	9.4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0.4	0.5	1.3	1.2	1.7	0.8
개선되고 있지 않음(소계)	35.3	5.4	12.9	11.4	20.3	10.2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2.10. 일반 국민 75% 이상,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심각하다’

○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농업인은 81.2%, 도시민은 75.4%로 모두 크게 나타남.

표 2-26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전혀 심각 하지 않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소계)	보통 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소계)	무응답	T/F
농업인	0.7	4.2	4.9	13.2	45.0	36.2	81.2	0.7	6.42***
도시민	0.2	2.9	3.1	21.5	53.6	21.7	75.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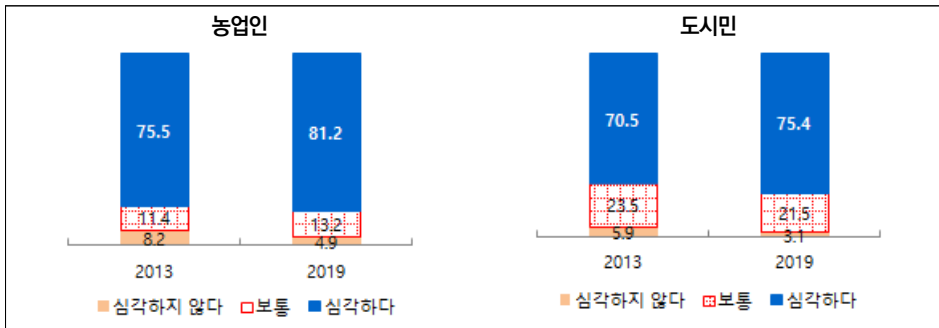
주: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 2013년과 비교해 농업인은 5.7%p(2013년 75.5%, 2019년 81.2%), 도시민은 4.9%p(2013년 70.5%, 2019년 75.4%) 증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빈부격차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3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2.11. 농업인 10명 중 6명, 현재 농촌 경제상황 ‘안 좋다’

○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농업인은 69.8%, 도시민은 39.5%로 농업인과 도시민 간 30.3%p 인식 차이를 보였음. ‘좋다’(매우 좋다, 좋은 편)는 농업인은 4.7%, 도시민은 18.0%에 그쳤음.

표 2-27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좋다	좋은 편	좋다 (소계)	보통 이다	안 좋은 편이다	매우 안 좋다	안 좋다 (소계)	무응답	T/F
농업인	0.1	4.7	4.7	24.8	57.1	12.8	69.8	0.7	-19.78***
도시민	0.1	18.0	18.0	42.5	36.7	2.8	3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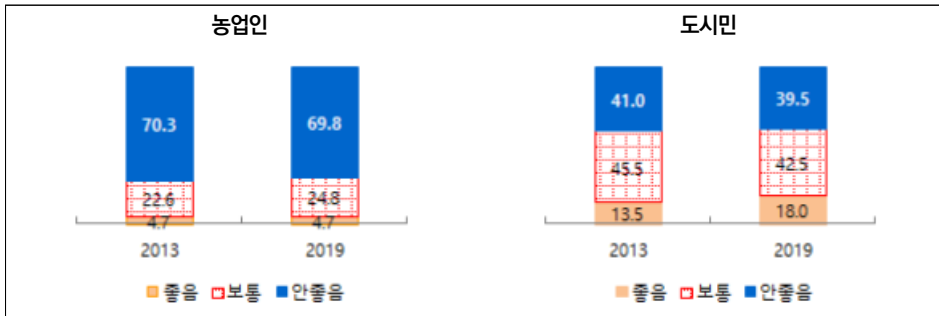
주: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 농업인은 2013년 조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남. 도시민은 ‘보통이다’는 의견이 2013년 45.5%, 2019년 42.5%로 3.0%p 감소하였고, ‘안 좋다’는 의견은 2013년 13.5%, 2019년 18.0%로 4.5%p 상승해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2-14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2.12. 농업인, 도시민의 행복, ‘관계성’과 ‘자본’이 좌우해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분야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여 종합행복지수를 살펴본 결과, 농업인은 6.66점, 도시민은 6.33점으로 나타남.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기존에 조사되었던⁴⁾ 한국인 행복지수(6.33점)와 비교해 동일한 결과임.

○ 각 영역별 행복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농업인의 경우에 ‘가정생활’의 행복점수가 7.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사회생활’과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가 각각 7.02점으로 응답됨.

- 반면, ‘자신의 재정상태’ 5.29점, ‘자신의 건강상태’ 6.26점으로 낮게 나타나 두 가지 요인이 농업인의 종합행복지수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 한편, 도시민은 ‘건강상태’ 6.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생활’ 6.64점,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6.52점, ‘사회생활’ 6.15점, ‘재정상태’ 5.46점 등의 순으로 응답됨.

○ 특히, ‘가정생활’(농업인 7.72점, 도시민 6.64점), ‘사회생활’(농업인 7.02점, 도시민 6.15점) 영역에서 농업인과 도시민의 행복점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도시민보다 농업인의 행복점수가 높게 나타남.

표 2-28 분야별 행복점수

단위: %

항목		불행한 상태	보통	행복한 상태	잘 모르겠음	평균(점)	t/F
건강상태	농업인	19.0	19.3	60.6	0.9	6.26	-8.05***
	도시민	14.7	5.7	79.5	-	6.87	
재정상태	농업인	30.2	28.0	40.8	0.9	5.29	-2.16*
	도시민	24.0	23.0	53.0	-	5.46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농업인	5.6	18.0	75.5	0.9	7.02	6.79***
	도시민	15.5	7.2	77.3	-	6.52	
가정생활	농업인	4.4	9.7	84.7	1.1	7.72	13.98***
	도시민	16.6	6.7	76.7	-	6.64	
사회생활	농업인	6.9	16.0	76.1	1.0	7.02	11.38***
	도시민	17.7	11.2	71.0	-	6.15	
종합적인 행복도	농업인	9.8	18.5	71.7	-	6.66	5.38***
	도시민	16.6	7.5	75.9	-	6.33	

주: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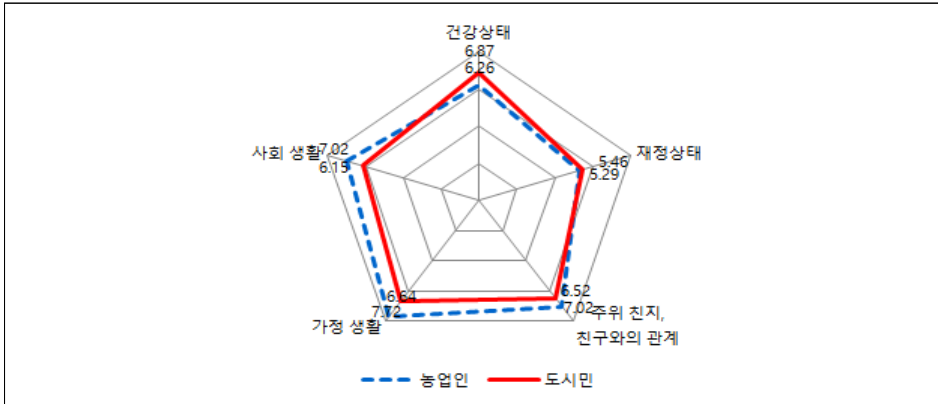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4)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인 행복지수는 6.33점으로 나타났음(김미곤 외 2018).

- 유엔(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는 전 세계 156개국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함. 이는 156개국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천 명씩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이며, 한국은 2019년 행복지수 5.895점으로 나타남.

그림 2-15 영역별 행복점수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표 2-29 영역별 행복점수(연도별)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자신의 건강상태	6.04	6.28	5.94	6.26	7.36	7.35	7.39	6.87
자신의 재정상태	5.30	5.46	5.22	5.29	6.29	6.23	6.19	5.46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7.03	6.83	6.85	7.02	7.29	7.20	7.36	6.52
가정생활	7.74	7.65	7.56	7.72	7.33	7.21	7.32	6.64
사회생활	7.19	7.00	6.93	7.02	6.90	6.95	6.99	6.15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3.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이슈,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과제, 개도국 특혜 미주장 시 농업부문 피해 보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음.
- 또한, 국외 비교 문항으로 중점 농업정책, 식품 안전에 불안을 느끼는 점, 외국인이 체험해봤으면 하는 한국의 음식문화 등을 질문하였음.
- 농업인에게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한 인식을, 도시민에게는 농촌 여행 경험, 체류 기간, 숙박시설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음.

3.1. 농업인, 최근 3년간 농업·농촌 정책 만족도 변화 없어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농업인의 절반인 50.0%가 ‘불만’을 갖고 있으며, ‘만족’은 9.9%에 그침. 도시민은 ‘만족’ 23.9%, ‘불만족’ 15.4%, ‘그저 그렇다’ 60.7%였음.

표 2-30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정책 전반적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불만 (소계)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만족 (소계)	무응답	10점 평균(점)	T/F
농업인	11.1	38.9	50.0	38.8	9.4	0.5	9.9	1.3	3.71	-21.9***
도시민	0.7	14.6	15.4	60.7	23.9	0.1	23.9	0.0	5.20	

주: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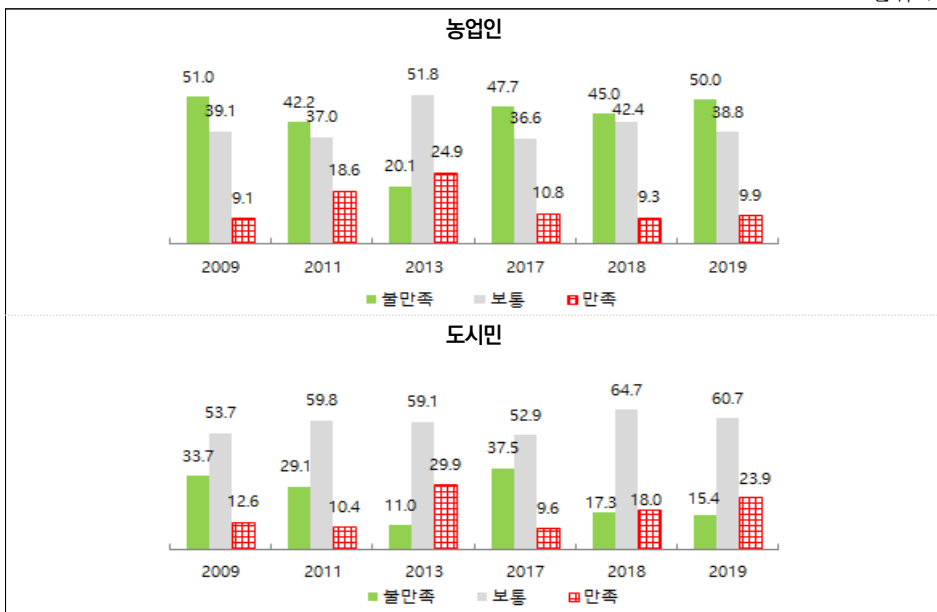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농업인은 최근 3년간 ‘만족’(2017년 10.8%, 2018년 9.3%, 2019년 9.9%)과 ‘불만족’(2017년 47.7%, 2018년 45.0%, 2019년 50.0%) 의견에 큰 변동은 없었음.

○ 도시민은 ‘만족’(2017년 9.6%, 2018년 18.0%, 2019년 23.9%)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불만족’(2017년 37.5%, 2018년 17.3%, 2019년 15.4%) 의견은 하락 추세임.

그림 2-16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정책 전반적 만족도

단위: %



주: 농업인 '모름/무응답' 제외.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3.2.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로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꼽아

○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야로 농업인은 ‘자연재해(폭염 등)’(37.0%)를 가장 많이 꼽았음. 이는 병충해 발생,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시

설물 피해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이어 ‘농산물 가격 안정’(27.7%), ‘농민수당(기본수당)’(27.5%), ‘WTO 개도국 지위 미주장’(19.7%), ‘공익형 직불제 개편’(19.0%)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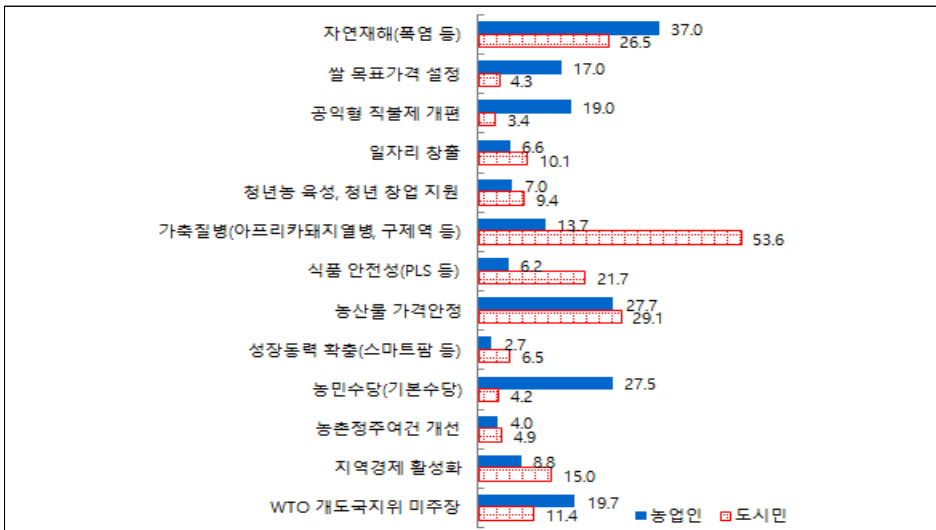
○ 반면, 도시민은 ‘가축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을 53.6%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국가적·사회적 우려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됨.

- 이어 ‘농산물 가격 안정’(29.1%), ‘자연재해(폭염 등)’(26.5%), ‘식품 안전성(PLS 등)’(21.7%), ‘지역경제 활성화’(15.0%) 순으로 응답함.

○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 이슈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관심도가 높았던 분야로 조사됨.

그림 2-17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중복응답)

단위: %



주: 농업인 ‘무응답’, ‘기타’ 제외.
자료: 저자 작성.

3.3. 농업인 57.4%,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긍정’

○ 공익형 직불제 개편⁵⁾에 ‘매우 긍정’이라는 농업인은 10.8%, ‘대체로 긍정’은 46.5%로 전체 응답자의 57.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정적’(매우 부정적과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는 18.1%, ‘보통’은 23.7%로 나타남.

- ‘긍정’ 의견은 대재 이상(63.6%), 영농경력 20년 미만(65.3%), 영농형태별로는 노지채소(68.4%) 및 과수(64.6%)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 직불제 단가 영향을 받은 노지채소 농가의 긍정 비율은 68.4%로 가장 많았으며, 과수 및 특작 농가도 각각 64.6%와 60.4%의 긍정 비율을 보임. 수도작 농가는 41.8%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표 2-31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부정적 (소계)	보통 이다	대체로 긍정적	매우 긍정적	긍정적 (소계)	무응답	T/F
전 체		3.5	14.6	18.1	23.7	46.5	10.8	57.4	0.9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9	16.7	21.6	24.1	44.5	8.5	53.1	1.3	-5.57***
	대재 이상	1.6	11.3	12.9	23.2	49.5	14.1	63.6	0.3	
	무응답	0.0	75.0	75.0	0.0	25.0	0.0	25.0	0.0	
영농 경력	20년 미만	1.6	10.3	11.9	22.7	53.2	12.0	65.3	0.2	5.83***
	20년 이상	4.9	17.6	22.5	24.4	42.1	9.9	52.0	1.1	
	무응답	0.0	23.1	23.1	23.1	23.1	15.4	38.5	15.4	
영농 형태	수도작	6.8	22.1	28.9	27.6	33.7	8.2	41.8	1.6	11.45***
	과수	0.6	9.8	10.4	24.7	50.3	14.3	64.6	0.3	
	노지채소	2.7	8.6	11.2	19.8	58.8	9.6	68.4	0.5	
	축산	5.3	16.8	22.1	19.1	50.4	8.4	58.8	0.0	
	시설원예	2.8	17.6	20.5	19.3	48.9	10.8	59.7	0.6	
	특작	3.6	11.5	15.1	24.0	47.9	12.5	60.4	0.5	
	기타	1.1	10.3	11.5	27.6	47.1	11.5	58.6	2.3	
	무응답	0.0	25.0	25.0	8.3	50.0	8.3	58.3	8.3	

주: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⁵⁾ 2020년부터 직접지불제는 기존 소득손실 보전 방식에서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증진 역할에 대한 기여 보상 방식으로 지급하는 ‘공익형 직접지불제’로 개편될 예정임.

3.4. 성공적인 공익형 직불제, ‘공정·투명한 모니터링 도입’ 가장 필요

- 성공적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도입’(45.1%) 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 ‘직불제 예산 지속 확대’(28.1%), ‘쌀 변동 직불제 폐지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장치 마련’(24.7%) 등의 순으로 응답함.
- ‘공정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도입(준수의무 확인, 부당수령 방지 등)’은 대재 이상(55.4%), 영농경력 20년 미만(56.9%)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함.
 - 반면, ‘직불제 예산 지속 확대’와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장치 마련’은 영농경력 20년 이상인 농가에서 많이 나타남.

표 2-32 성공적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구분		공정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도입	직불제 예산 지속 확대	쌀 변동 직불제 폐지에 따른 농가경영 안정장치 마련	기타	무응답	x2(df)
전 체		45.1	28.1	24.7	0.6	1.6	
교육 수준	고졸 이하	37.6	31.7	28.2	0.3	2.2	48.39(3)***
	대재 이상	55.4	22.9	19.9	0.9	0.8	
	무응답	50.0	50.0	0.0	0.0	0.0	
영농 경력	20년 미만	56.9	22.7	18.5	1.3	0.6	70.5(3)***
	20년 이상	36.5	32.0	29.3	0.1	2.1	
	무응답	53.8	23.1	7.7	0.0	15.4	

주: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3.5. WTO 개도국 지위 전환의 보완대책, 농업인 ‘공익형 직불제 확대’ 꿈아

- WTO에서 개도국 특혜를 못 받게 되는 경우에 농업부문 피해 보전을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농업인은 ‘공익형 직불제 확대’(22.6%),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 재해보험 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및 개선’(13.6%),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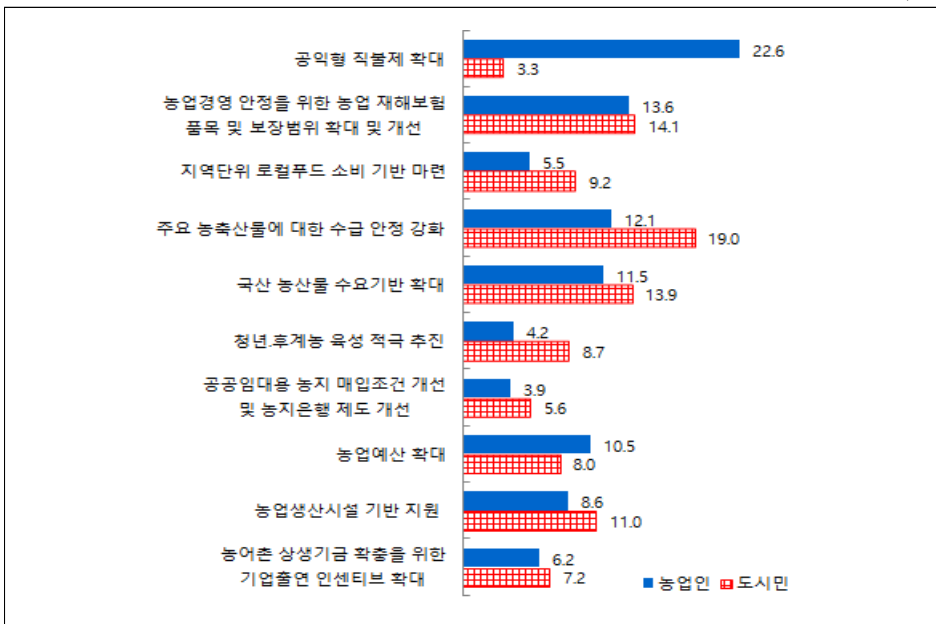
안정 강화'(12.1%) 등의 순으로 응답함.

- '공익형 직불제 확대'는 60세 이상(24.9%), 고졸 이하(24.6%), 영농경력 20년 이상(25.5%), 수도권(28.7%)과 노지채소(22.8%), 과수(22.0%)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11.5%), '농업생산시설 기반 지원'(8.6%)은 60세 미만, 영농경력 20년 미만인 농가에서 많이 응답함.

○ 도시민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 강화'(19.0%),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 재해보험 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및 개선'(14.1%),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13.9%) 등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2-18 WTO 개도국 지위 전환에 대한 가장 시급한 보완 대책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3.6.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 이슈로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꼽아

○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농업인은 ‘자연재해(폭염 등)’(40.9%), ‘농민수당(기본수당)’(29.7%), ‘쌀 및 농산물 수급 안정’(27.2%) 등의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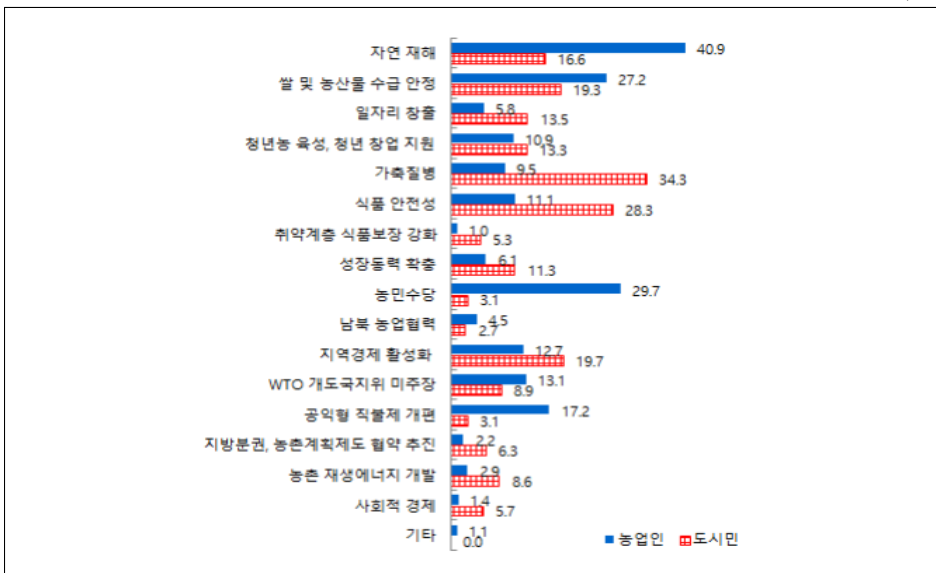
- ‘자연재해(폭염 등)’는 과수(23.2%), 특작(21.8%), 축산(21.5%)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 도시민은 ‘가축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관리’(34.3%), ‘식품 안전성’(28.3%), ‘지역경제 활성화’(19.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가축질병 관리’와 ‘식품 안전성’을 가장 많이 꼽아 도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우리 농업의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보여짐.

그림 2-19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과제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4. 농업·농촌·식품 국민의식 한·일 비교

- 우리 농업·농촌의 현재 위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올해는 한국과 일본 간 국민의식에 대해 비교해 보았음. 각 국가 간 조사 시기와 조사 방식, 조사 내용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를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농정 현안에 대한 반응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선,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소득은 불안정하다’라는 의견에 대한 인식을, 도 시민에게는 ‘농업은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인식을 물어봄.
- 또한,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농업정책, 식품 안전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인, 각국의 음식문화 중 외국인이 체험해봤으면 하는 문화, 농촌 여행 경험 여부, 관심 요인, 체류 기간 등을 조사하였음.

4.1. ‘농업 소득 불안정’, ‘자연에서 일할 수 있다’에 한·일 ‘동의’ 높아

- ‘농업 소득은 불안정하다’에 한국(농업인) 87.2%, 일본 85.5%로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의 ‘동의’ 의견을 보임. ‘비동의’는 한국 10.8%, 일본 10.6%에 그쳤음.

표 2-33 ‘농업 소득은 불안정하다’(한·일 비교)

단위: %

구분	2019년	2018년	① - ②
	① KREI 조사 결과	② 일본 조사 결과	
매우 그렇다	32.9	24.6	8.3
그렇다	54.3	60.9	-6.6
동의(소계)	87.2	85.5	1.7
그렇지 않다	7.8	7.5	0.3

(계속)

구분	2019년	2018년	① - ②
	① KREI 조사 결과	② 일본 조사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3.0	3.1	-0.1
비동의(소계)	10.8	10.6	0.2
모르겠다	0.9	3.1	-2.2

주: 일본 내각부(2018). 『식품과 농림어업에 관한 여론조사』. 전국 18세 이상의 일본 국적을 가진 3천 명 대상.
자료: 저자 작성.

○ ‘농업은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에 한국(52.0%)과 일본(79.3%)
과반이 ‘동의’ 의견을 보임.

- ‘비동의’ 의견은 한국 43.6%, 일본 18.3%로, 한국에 비해 일본의 ‘비동의’ 의견
이 25.3%p 낮게 나타남.

○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한국 4.1%, 일본 28.2%로 한국보다 일본이 24.1%p
더 많은 ‘동의’ 의견을 보였음.

표 2-34 ‘농업은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한일 비교)

단위: %

구분	2019년	2018년	① - ②
	① KREI 조사 결과	② 일본 조사 결과	
매우 그렇다	4.1	28.2	-24.1
그렇다	48.0	51.1	3.1
동의(소계)	52.0	79.3	-27.3
그렇지 않다	37.2	12.7	24.5
매우 그렇지 않다	6.4	5.6	0.8
비동의(소계)	43.6	18.3	25.3
모르겠다	4.4	2.4	2.0

주: 일본 내각부(2018). 『식품과 농림어업에 관한 여론조사』. 전국 18세 이상의 일본 국적을 가진 3천 명 대상.
자료: 저자 작성.

4.2. 한국은 ‘농업 경쟁력 향상’, 일본은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중점 농정으로 꼽아

○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농업정책에 대해 한국(도시민)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56.5%),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것’(51.7%), ‘한국의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는 것’(31.9%)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농업인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55.7%),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것’(40.0%), ‘농촌 방문 및 이주를 촉진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23.1%)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일본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것’(56.2%),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46.0%), ‘휴경지 발생을 방지하고 농지를 유지하는 것’(3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은 농업인, 도시민 모두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일본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가장 중시함.

- 특히, ‘한국(일본)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17.7%p), ‘휴경지 발생을 방지하고 농지를 유지하는 것’(16.8%p), ‘농촌 방문 및 이주를 촉진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6.7%p),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것’(4.5%p) 등에서 한국(도시민)과 일본 간 인식이 나타남.

표 2-35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농업정책(한일 비교)

단위: %

구분	2019년 KREI		2018년	① - ②
	농업인	① 도시민	② 일본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 및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것	40.0	51.7	56.2	-4.5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55.7	56.5	46.0	10.5
휴경지 발생을 방지하고 농지를 유지하는 것	16.0	21.8	38.6	-16.8
한국 문화를 다음세대에 전달하는 것	7.0	19.0	36.7	-17.7
농촌 방문 및 이주를 촉진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	23.1	25.9	32.6	-6.7
한국의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는 것	20.8	31.9	26.1	5.8
인공지능 및 무인항공기 등 첨단기술을 통한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	20.6	30.1	25.3	4.8

주 1) 일본 내각부(2018). 『식품과 농림어업에 관한 여론조사』. 전국 18세 이상의 일본 국적을 가진 3천 명 대상.

2) '기타', '특별히 없음', '모르겠음', '무응답' 제외.

자료: 저자 작성.

4.3. 식품 안전 불안 요소로 한국은 '잔류농약', 일본은 '식중독' 꼽아

○ 식품 안전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도시민은 '잔류농약'(62.5%), '유전자 변형 식품'(47.0%), '방사성 물질'(3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농업인은 '유전자 변형 식품'(55.2%), '잔류농약'(42.4%), '식품첨가물'(32.3%) 등으로 응답함.

○ 일본은 '식중독'(41.7%), '수출입 음식 제품'(40.3%), '식품 첨가물'(37.9%), '잔류농약'(35.2%) 등의 순으로 식품 안전에 불안한 요소를 꼽았음.

- 일본 식품안전위원회⁶⁾에서 2019년 2월 22일~3월 8일 조사된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 안전 위험에 대해 '불안하다'(매우 불안, 어느

⁶⁾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매년 식품안전모니터를 대상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의식에 대해 조사해오고 있음. 식품안전모니터는 일본 성인남녀 470명으로 식품 관련 학문을 전공하거나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행정예 종사하는 것을 자격으로 두고 있음.

정도 불안)는 ‘유해 미생물(세균 등), 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등’이 86.7%로 가장 많이 나타남.

표 2-36 식품 안전 관련 불안 요소(한일 비교)

단위: %

구분	2019년 KREI		2018년 ② 일본	① - ②
	농업인	① 도시민		
식중독	6.9	12.2	41.7	-29.5
수출입 음식 제품	26.0	11.7	40.3	-28.6
식품 첨가물	32.3	31.3	37.9	-6.6
잔류농약	42.4	62.5	35.2	27.3
유전자 변형 식품	55.2	47.0	29.1	17.9
방사성 물질	27.4	39.4	27.1	12.3
알레르기 유발물질	4.7	15.9	25.1	-9.2
라벨지의 불안전한 표기	11.0	14.2	21.9	-7.7
불안감을 느끼지 않음	2.6	11.7	15.8	-4.1

주 1) 일본 내각부(2018). 『식품과 농업어업에 관한 여론조사』. 전국 18세 이상의 일본 국적을 가진 3천 명 대상.

2) ‘기타’, ‘모르겠음’, ‘무응답’ 제외.

자료: 저자 작성.

4.4. 한국과 일본, 외국인이 체험할 음식문화로 ‘발효식품 요리’ 꼽아

○ 우리의 음식문화 중 외국인이 체험해봤으면 하는 문화로 한국과 일본 모두 ‘발효식품을 이용한 요리’를 우선 꼽았으며, 한국(35.3%)보다 일본(50.8%)이 15.5%p 많이 응답함.

- 그다음으로 한국은 ‘설, 추석, 단오 등 명절(연중행사) 때 먹는 요리’(34.6%), ‘자연의 아름다움 및 사계절의 특징을 담은 요리’(34.3%), ‘각 지역의 식재 및 향토 요리’(32.4%)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일본은 ‘각 지역의 식재 및 향토 요리’(48.7%), ‘설, 추석, 단오 등 명절(연중행사) 때 먹는 요리’(46.5%), ‘자연과 사람에게 감사하고 음식을 소중히 하는 태도’(37.9%) 등을 꼽았음.

표 2-37 외국인인 체험해보았으면 하는 음식문화(한일 비교)

단위: %

구분	2019년 KREI		2018년	① - ②
	농업인	① 도시민	② 일본	
발효식품을 이용한 요리	50.4	35.3	50.8	-15.5
각 지역의 식재 및 향토 요리	33.0	32.4	48.7	-16.3
설, 추석, 단오 등 명절(연중행사) 때 먹는 요리	13.1	34.6	46.5	-11.9
자연과 사람에게 감사하고 음식을 소중히 하는 태도	22.7	21.6	37.9	-16.3
지역의 식품을 지탱하는 농림수산업 및 전통문화 체험	25.1	31.2	35.2	-4.0
국산 식재 맛보기	11.6	22.7	34.5	-11.8
자연의 아름다움 및 사계절의 특징을 담은 요리	29.7	34.3	32.5	1.8
영양 균형이 좋고 건강한 음식	15.8	29.8	22.9	6.9
짜장면, 양념 치킨 등 외국에서 유입되었으나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요리	4.7	13.4	14.1	-0.7

주 1) 일본 내각부(2018). 『식품과 농림어업에 관한 여론조사』. 전국 18세 이상의 일본 국적을 가진 3천 명 대상.

2) '기타', '특별히 없음', '모르겠음', '무응답' 제외.

자료: 저자 작성.

4.5. '앞으로 농촌 여행 의향 있다', 일본보다 한국이 긍정 의견 높아

○ 최근 2~3년 내에 농촌 여행 경험 및 앞으로의 의향에 대해 '앞으로 농촌 여행을 할 의향이 있다'(농촌 여행을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의향이 있음, 농촌 여행을 한 적은 없으나, 앞으로 의향이 있음)는 의견은 한국 80.3%, 일본 47.1%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33.2%p 높은 긍정 의견을 보였음.

- 특히, '여행을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의향이 있다'는 한국 45.6%, 일본 14.6%로 한국이 일본보다 31.0%p나 높은 '긍정' 의견을 보임.

○ 반면, '농촌 여행을 할 의향이 없다'는 일본 50.5%로 절반 이상 '부정' 의견을 보임. 특히, '여행을 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 의향이 없다'는 강한 부정에 대해 한국은 12.9%, 일본은 44.1%로, 일본이 한국보다 31.2%p 많은 '부정' 의견이 나타남.

표 2-38 최근 농촌 여행 경험 및 앞으로의 의향(한일 비교)

단위: %

구분	2019년	2018년	① - ②
	① KREI	② 일본	
농촌 여행을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의향이 있음	45.6	14.6	31.0
농촌 여행을 한 적은 없으나, 앞으로 의향이 있음	34.7	32.5	2.2
농촌 여행 의향 있음(소계)	80.3	47.1	33.2
농촌 여행을 한 적이 있으나, 앞으로 의향이 없음	6.8	6.4	0.4
농촌 여행을 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 의향이 없음	12.9	44.1	-31.2
농촌 여행 의향 없음(소계)	19.7	50.5	-30.8
모르겠음	-	2.4	-2.4

주: 일본 내각부(2018). 『식품과 농림어업에 관한 여론조사』. 전국 18세 이상의 일본 국적을 가진 3천 명 대상.
자료: 저자 작성.

○ ‘여행을 한 적은 없으나, 앞으로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521)를 대상으로 농촌 여행을 하고 싶은 관심 요인에 대해 한국은 ‘자연 및 풍경(산, 강, 바다, 계단식 논 등)’(57.7%), ‘지역 휴양지에서 휴식(온천 등)’(44.6%), ‘축제, 전통 예능 등 지역문화’(31.8%), ‘지역의 특산품을 사용한 식사’(24.1%), ‘유적지, 사찰 등의 문화재’(2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본 조사 결과도 한국과 비슷하게 ‘자연 및 풍경(산, 강, 바다, 계단식 논 등)’(58.7%), ‘지역 휴양지에서 휴식(온천 등)’(53.5%), ‘지역의 특산품을 사용한 식사’(52.0%), ‘축제, 전통 예능 등 지역문화’(40.1%), ‘유적지, 사찰 등의 문화재’(34.0%), ‘지역 특산품 구매’(30.3%) 등으로 응답함.

○ 특히, ‘지역의 특산품을 사용한 식사’, ‘지역민과의 교류’는 한국보다 일본의 지지가 매우 많았으며, 인식 차이도 각각 27.9%p, 20.0%p로 크게 나타났음.

표 2-39 농촌 여행을 하고 싶은 관심 요인(한일 비교)

단위: %

구분	2019년	2018년	① - ②
	① KREI	② 일본	
자연 및 풍경(산, 강, 바다, 계단식 논 등)	57.7	58.7	-1.0
지역 휴양지에서 휴식(온천 등)	44.6	53.5	-8.9
지역의 특산품을 사용한 식사	24.1	52.0	-27.9
축제, 전통 예능 등 지역문화	31.8	40.1	-8.3
유적지, 사찰 등의 문화재	22.8	34.0	-11.2
지역 특산물 구매	15.5	30.3	-14.8
농림어업체험	10.7	27.5	-16.8
지역민과 교류	6.6	26.6	-20.0
농어가 민박	7.9	24.0	-16.1
운동, 오락(등산, 사이클링 등)	12.5	14.0	-1.5

주 1) 일본 내각부(2018). 『식품과 농림어업에 관한 여론조사』. 전국 18세 이상의 일본 국적을 가진 3천 명 대상.

2) ‘기타’, ‘특별히 없음’, ‘모르겠음’ 제외.

자료: 저자 작성.

○ ‘여행을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683)를 대상으로 농촌 여행 시 체류하고 싶은 기간을 질문한 결과, 한국은 ‘2박’이 37.2%로 가장 많았고, ‘1박’(32.0%), ‘당일’(13.6%), ‘3박’(13.1%)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일본도 한국과 비슷하게 ‘2박’과 ‘1박’의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다음으로 ‘당일’이 아닌 ‘3박’, ‘4~6박’을 꼽았음.

표 2-40 농촌 여행 시 희망 체류 기간(한일 비교)

단위: %

구분	2019년	2018년	① - ②
	① KREI	② 일본	
당일	13.6	2.9	10.7
1박	32.0	26.4	5.6
2박	37.2	40.9	-3.7
3박	13.1	15.3	-2.2
4~6박	1.7	6.9	-5.2
7박 이상	2.3	4.1	-1.8
모르겠음	-	3.3	-

주: 일본 내각부(2018). 『식품과 농림어업에 관한 여론조사』. 전국 18세 이상의 일본 국적을 가진 3천 명 대상.

자료: 저자 작성.

- ‘여행을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의향이 있다’(n=683)와 ‘여행을 한 적은 없으나, 앞으로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521)를 대상으로 농촌 여행 시 원하는 숙박시설에 대해 한국은 ‘일반 민박 또는 펜션’(41.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캠핑장’(13.9%), ‘농어가 민박’(12.6%) 등이 비교적 큰 격차로 그 뒤를 이었음.
- 일본은 ‘옛집, 폐교 등을 활용한 숙박시설’(23.3%), ‘일반 호텔 또는 전통숙박시설’(21.5%), ‘농어가 민박’(19.2%), ‘일반 민박 또는 펜션’(16.0%), ‘공공 숙박시설’(10.7%), ‘캠핑장’(6.5%) 등의 순으로 응답함.
- 특히, 한국은 ‘일반 민박 또는 펜션’(41.3%)에 대한 선호도가 일본(16.0%)보다 25.3%p 높게 나타남.

표 2-41 농촌 여행 희망 시 원하는 숙박 시설(한일 비교)

단위: %

구분	2019년	2018년	① - ②
	① KREI	② 일본	
옛집, 폐교 등을 활용한 숙박시설	9.7	23.3	-13.6
일반 호텔 또는 고급 전통숙박시설	10.6	21.5	-10.9
농어가 민박	12.6	19.2	-6.6
일반 민박 또는 펜션	41.3	16.0	25.3
공공 숙박시설	5.9	10.7	-4.8
캠핑장	13.9	6.5	7.4

주 1) 일본 내각부(2018). 『식품과 농림어업에 관한 여론조사』. 전국 18세 이상의 일본 국적을 가진 3천 명 대상.

2) ‘기타’, ‘특별히 없음’, ‘모르겠음’ 제외.

자료: 저자 작성.

- ‘여행을 한 적이 있으나, 앞으로 의향이 없다’(n=102), ‘여행을 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 의향이 없다’(n=194)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농촌 여행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한국은 ‘관심 없음’(27.2%), ‘교통 불편’(12.6%), ‘숙박 시설과 위생이 불안’(12.4%), ‘농촌 정보 부족’(10.7%) 등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꼽았음.

○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심 없음’이 32.0%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숙박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름’ 9.4%, ‘숙박 시설과 위생이 불안’과 ‘교통 불편’이 각각 9.0%, ‘농촌 정보 부족’ 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한국과 일본 모두 여행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데에서 농촌 여행에 대한 ‘동의’ 의견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이에 국내외 농촌 여행 수요 흡수를 위한 매력적인 농촌관광 콘텐츠 확충 및 접근성 문제와 편의시설 문제 개선 등을 통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겠음.

표 2-42 농촌 여행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한일 비교)

단위: %

구분	2019년	2018년	① - ②
	① KREI	② 일본	
관심 없음	27.2	32.0	-4.8
숙박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름	8.0	9.4	-1.4
숙박 시설과 위생이 불안	12.4	9.0	3.4
교통 불편	12.6	9.0	3.6
농촌 정보 부족	10.7	8.0	2.7
교통 및 숙박 예약 방법을 모름	5.6	7.5	-1.9
과거에 다녀와서 이미 만족했기 때문	6.0	4.1	1.9
식사가 가능한 곳이 적어서	3.2	3.0	0.2

주 1) 일본 내각부(2018). 『식품과 농림어업에 관한 여론조사』. 전국 18세 이상의 일본 국적을 가진 3천 명 대상.

2) ‘기타’, ‘특별히 없음’, ‘모르겠음’ 제외.

자료: 저자 작성.

5. 농업경영 및 농촌 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 농업인에게 올해 농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농업 종사 직업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 5년 전과 비교한 올해 농촌 생활 수준, 5년 전과 비교한 농업경영과 생활환경 변화(18개 항목), 분야별 농촌 생활 만족도(8개 분야), 거주하는 마을의 마을 주민과의 관계,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 도시 생활 수준에 비해 농촌 생활 수준 인식 등을 조사하였음.

5.1. 올해 농사 ‘불만족’ 전년 대비 15.5%p 증가

○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22.2%, ‘불만족한다’ 46.4%로 ‘불만족’의 견이 2배 이상 많이 나타남.

- ‘만족’ 응답은 도시근교(28.2%), 교육 수준 대재 이상(28.1%), 영농경력 20년 미만(27.6%)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표 2-43 올해 농사 만족도

단위: %

구분		불만 이다	약간 불만	불만 (소계)	그저 그렇다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만족 (소계)	무응답	T/F
전 체		16.0	30.4	46.4	31.1	19.5	2.8	22.2	0.3	
지역 형태	도시근교	12.9	29.0	41.9	29.6	23.8	4.4	28.2	0.3	5.46**
	평야지대	15.7	29.6	45.4	33.0	18.2	2.8	21.0	0.6	
	산간지대	17.5	31.6	49.1	31.2	17.5	2.1	19.6	0.1	
	무응답	16.4	26.2	42.6	27.9	27.9	1.6	29.5	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8.1	33.0	51.0	30.7	16.0	2.0	18.1	0.2	-5.1***
	대재 이상	13.3	26.4	39.7	31.9	24.3	3.8	28.1	0.3	
	무응답	0.0	100.0	100.0	0.0	0.0	0.0	0.0	0.0	
영농 경력	20년 미만	12.5	26.5	39.0	33.1	24.4	3.2	27.6	0.3	5.38***
	20년 이상	18.8	33.2	52.0	29.6	15.8	2.4	18.2	0.1	
	무응답	0.0	30.8	30.8	30.8	23.1	7.7	30.8	7.7	

주: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 ‘만족’ 의견은 2010년 14.3%에서 2015년 35.2%까지 증가하고, 2019년 22.2%로 낮아져 지속적인 답보상태인 것으로 파악됨.

표 2-44 올해 농사 만족도(연도별)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우 만족	5.3	1.6	2.1	3.2	6.4	5.3	7.9	2.4	3.3	3.1	2.8
약간 만족	23.8	12.7	22.9	20.1	26.6	28.0	27.3	17.4	21.6	26.9	19.5
만족(소계)	29.1	14.3	25.0	23.3	33.0	33.3	35.2	19.8	24.9	30.0	22.2
그저 그렇다	27.3	31.0	33.3	40.2	32.2	31.1	28.5	28.6	34.7	38.4	31.1
약간 불만	28.6	30.0	27.9	22.2	23.5	23.9	22.7	29.1	27.0	25.3	30.4
매우 불만	14.6	24.3	12.9	14.2	10.7	11.1	12.5	21.7	12.1	5.6	16.0
불만(소계)	43.2	54.3	40.8	36.4	34.2	35.0	35.2	50.7	39.1	30.9	46.4
무응답/모름	0.4	0.4	0.9	0.2	0.5	0.7	1.1	0.8	1.3	0.7	0.3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 올해 농사가 불만족(n=706)스러운 이유로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음. 이어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됐다’(29.5%),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11.8%)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최근 3년간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는 2017년 43.7%에서 2019년 35.8%로 7.9%p 감소한 반면, ‘기타’ 의견은 2017년 10.6%에서 2019년 20.5%로 9.9%p 크게 증가함.

- ‘기타’ 응답으로 ‘자연재해(태풍, 가뭄 등)로 수확이 줄어들’(10.1%), ‘기후 변화’(2.5%), ‘경기침체로 인한 자연스러운 가격 하락’(2.4%), ‘바이러스/병충해’(1.3%) 등이 있었음.

표 2-45 올해 농사 불만족 사유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득이 줄었다	22.5	44.5	31.3	29.6	26.5	25.9	39.6	-	-	-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	44.0	30.0	36.8	30.7	17.3	13.1	15.0	43.7	39.9	35.8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	15.1	8.6	9.1	10.1	5.2	8.6	6.3	10.8	11.1	11.8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됐다	14.3	10.8	17.6	25.4	45.4	46.3	33.3	29.6	31.4	29.5
소비자의 요구가 까다로워졌다	0.8	0.2	0.3	-	0.7	0.5	1.3	1.1	1.5	1.6
기타	1.8	5.2	3.6	4.2	4.0	5.6	4.5	10.6	9.5	20.5
모름/무응답	1.5	0.7	1.3	-	0.9	-	-	4.2	6.5	0.8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5.2.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만족도 2017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어

○ 농업 종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만족한다’(높음)는 23.3%, ‘불만족한다’(낮음)는 33.3%로 ‘불만족’에 비해 ‘만족’이 10.0%p 낮게 나타남.

- ‘전반적 만족도’는 대재 이상(31.6%), 연평균 소득이 2천만 원 이상(31.3%)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의 내용에 ‘만족’은 26.6%, ‘불만족’은 28.1%로 응답하였음. 특히, 현재 얻고 있는 소득에 ‘만족’ 의견은 10.1%, ‘불만족’ 56.7%로 ‘만족’보다 ‘불만족’이 46.6%p로 매우 많이 응답함.

-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대재 이상(37.8%), 영농경력이 20년 미만(34.1%)에서 높게 나타남.
-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영농형태가 축산(26.0%), 시설원예(14.8%)이고,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이상(15.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 ‘전반적인 만족도’와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각각 7.5%, 5.4%인 반면, ‘현재 얻고 있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20.3%로 나타나 일의 내용보다 수입에 대한 불만족이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됨.

표 2-46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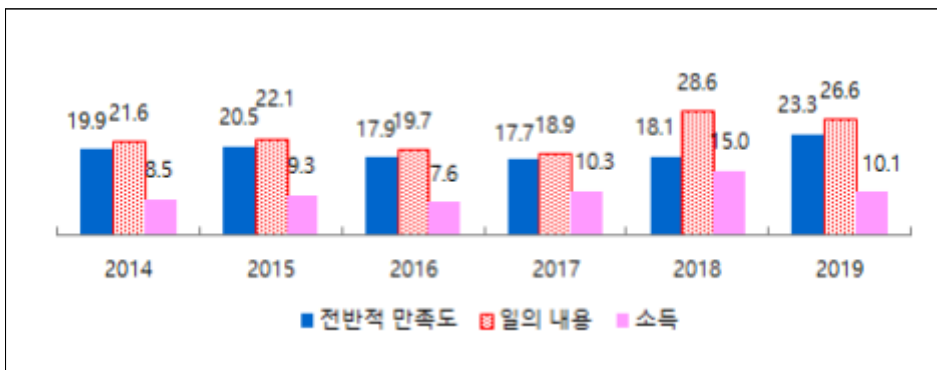
항목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은 편	낮음 (소계)	보통 이다	대체로 높은 편	매우 높음	높음 (소계)	모름/무응답	5점 평균(점)
전반적 만족도	7.5	25.8	33.3	41.2	19.7	3.6	23.3	2.2	2.86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5.4	22.7	28.1	42.2	23.3	3.4	26.6	3.1	2.96
현재 얻고 있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	20.3	36.4	56.7	29.9	8.2	1.9	10.1	3.3	2.33

자료: 저자 작성.

- 농업 종사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23.3%로 2018년(18.1%)보다 5.2%p 증가한 반면,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2018년 28.6%, 2019년 26.6%)’와 ‘현재 얻고 있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2018년 15.0%, 2019년 10.1%)’ 모두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 2-20 농업 종사에 대한 만족도(전반적 만족도, 일의 내용, 소득)

단위: %



주: ‘일의 내용’과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부터 조사됨.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 농업 종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6점으로 일반 국민 평균 직업만족도(3.45점,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조사)보다 낮게 나타남.

표 2-47 농업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직업만족도 비교

단위: %

항목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은 편	보통 이다	대체로 높은 편	매우 높음	모름/무응답	5점 평균 (점)
KREI(2019년)	7.5	25.8	41.2	19.7	3.6	2.2	2.86
한국고용정보원(2018년)	0.3	5.3	48.3	41.7	4.5	-	3.45

주: 한국고용정보원(2018년)은 최성수·이은수(2018)의 자료를 이용함.
자료: 저자 작성.

-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불만족하는 응답자(n=989)들은 불만족 사유로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51.5%)’를 가장 많이 지적함. 이어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14.4%),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14.2%),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가 2011년 32.9%에서 2019년 51.5%로 18.6%p 증가한 것은 노동력 투입 대비 농업 소득 수준이 낮은 문제인 것으로 예상됨.

-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응답도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 할 때 노동력 투입 대비 농업 소득 수준이 낮은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2-48 농업 종사 직업 불만족 사유

단위: %

구분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32.9	46.7	51.5	49.0	59.3	60.4	53.7	51.5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30.2	21.6	25.1	31.5	18.7	16.8	15.5	14.4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16.3	14.4	9.5	10.0	10.0	11.5	14.0	12.2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11.5	10.8	7.3	5.7	8.0	9.3	12.0	14.2
농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2.4	0.6	1.0	1.7	1.8	1.6	4.8	2.2
기타(무응답 포함)	6.8	6.0	5.6	2.0	2.2	0.3	-	5.5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5.3. 농업경영 주요 위협 요소로 ‘농업 생산비 증가’, ‘일손 부족’ 꼽아

○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농업 생산비 증가’(15.6%), ‘일손 부족’(15.3%)을 가장 많이 선택함. 그다음으로 ‘FTA 등 개방 확대’(10.7%), ‘판로확보 어려움’(9.7%),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9.6%),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이후 ‘농업 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 ‘FTA 등 개방 확대’는 농업경영의 주 위협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해오고 있음.

표 2-49 농업경영 위협 요소 인식(중복응답)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FTA 등 개방 확대	16.2	17.6	17.6	12.2	14.6	4.4	10.7
농업 생산비 증가	16.1	14.8	14.2	13.8	14.0	16.6	15.6
영농자금 압박	1.7	1.7	1.8	2.0	1.7	1.7	2.8
농업정책 오류	5.7	6.2	5.4	5.2	6.1	5.4	5.5
일손 부족	16.7	13.5	14.1	15.0	16.6	17.0	15.3
판로확보 어려움	5.1	8.0	9.6	10.1	7.7	7.3	9.7
농지 부족	0.6	0.5	0.3	0.6	0.6	1.2	1.0
농가부채 증가	5.7	6.0	4.1	4.2	4.0	5.0	4.4
후계인력 부재	6.6	5.1	5.3	4.8	6.4	7.7	3.8
구제역 등 가축질병	0.6	0.8	0.8	0.6	1.2	1.3	0.7
가뭄/홍수/태풍 피해	2.5	1.9	3.0	4.3	3.6	7.7	5.6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감소	5.1	5.6	5.5	4.9	4.7	4.8	4.7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7.3	12.2	10.6	8.4	8.7	7.5	8.0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7.7	3.5	5.8	9.5	6.9	7.9	9.6
조수 피해	1.4	1.6	1.5	2.2	2.2	3.3	2.1
기타	1.1	-	-	2.3	1.0	1.2	0.7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5.4. 5년 전 대비 올해 농촌 생활 수준 ‘긍정’으로 회복

○ 5년 전과 비교 시 올해 농촌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는 27.3%, ‘나빠졌다’ 33.5%, ‘마찬가지다’ 38.4%로 나타남.

- ‘좋아졌다’는 대재 이상(30.9%), 영농경력 20년 미만(30.6%),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이상(31.1%)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2-50 5년 전 대비 올해 농촌 생활 수준

단위: %

구분	매우 나빠짐	약간 나빠짐	나빠짐(소계)	마찬가지	약간 좋아짐	매우 좋아짐	좋아짐(소계)	무응답	T/F
전 체	7.7	25.8	33.5	38.4	24.9	2.4	27.3	0.9	
교육 수준	고졸 이하	9.2	27.7	36.9	36.9	22.6	2.2	24.8	1.4
	대재 이상	5.5	22.9	28.4	40.5	28.1	2.8	30.9	0.2
	무응답	25.0	50.0	75.0	25.0	0.0	0.0	0.0	0.0
영농 경력	20년 미만	5.5	21.7	27.3	42.2	27.3	3.3	30.6	0.0
	20년 이상	9.2	28.7	38.0	36.0	23.1	1.7	24.9	1.1
	무응답	7.7	23.1	30.8	15.4	23.1	7.7	30.8	23.1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8.8	25.6	34.4	42.2	21.1	1.5	22.6	0.8
	2천만 원 이상	6.5	26.1	32.6	35.8	28.0	3.1	31.1	0.4
	무응답	9.0	24.9	33.9	36.2	24.3	2.8	27.1	2.8

자료: 저자 작성.

○ ‘좋아졌다’는 2003년 18.1%에서 2019년 27.3%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우 나빠졌다’는 2003년 20.1%, 2019년 7.7%로 12.4%p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표 2-51 5년 전 대비 올해 농촌 생활 수준(연도별)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9	2013	2016	2019
매우 나빠졌다	20.1	15.2	23.3	12.3	8.8	7.1	7.6	7.7
약간 나빠졌다	29.5	33.5	31.9	28.6	24.7	21.2	27.9	25.8
나빠짐(소계)	49.6	48.7	55.2	40.9	33.5	28.3	35.5	33.5
마찬가지다	32.4	31.0	27.8	33.1	37.0	42.4	39.2	38.4
약간 좋아졌다	16.8	18.2	15.8	23.7	25.5	26.4	22.3	24.9
매우 좋아졌다	1.3	2.1	1.2	0.9	3.1	1.4	2.4	2.4
좋아짐(소계)	18.1	20.3	17.0	24.6	28.6	27.9	24.7	27.3
모름/무응답	-	-	-	1.4	0.9	1.4	0.6	0.9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5.5. 5년 전 대비 ‘농사방법과 기술’ 좋아지고, ‘농촌 일손’ 나빠졌다

○ 5년 전과 비교하여 농업경영과 생활환경에 대해 ‘농사방법과 기술’(96.2%), ‘도로 교통 등 생활환경’(91.9%), ‘보건·의료 시설’(89.2%), ‘문화·복지 시설’(86.5%), ‘이웃과의 관계’(81.6%), ‘공동체 생활 및 문화’(78.4%) 등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함.

○ 반면, ‘농촌 일손’(79.6%), ‘정부의 농업인식’(61.9%), ‘농산물 수입 개방’(61.7%), ‘농자재 수급 및 가격’(61.5%), ‘농사 수익성’(53.0%)은 5년 전에 비해 ‘나빠졌다’고 응답함.

표 2-52 5년 전 대비 농업경영과 생활환경 변화

단위: %

문항	매우 나빠짐	조금 나빠짐	나빠짐 (소계)	보통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좋아짐 (소계)	보통 이상 (소계)	모름/무응답	10점 평균(점)
농사방법과 기술	0.5	1.8	2.3	31.8	56.8	7.6	64.4	96.2	1.6	6.76
도로교통 등 생활환경	1.5	5.8	7.3	32.5	51.7	7.7	59.4	91.9	0.9	6.47
보건·의료 시설	2.2	7.3	9.5	44.6	39.6	5.1	44.6	89.2	1.2	5.96
문화·복지 시설	2.5	9.6	12.1	41.9	40.2	4.3	44.6	86.5	1.4	5.87
이웃과의 관계	3.0	13.9	17.0	52.9	24.7	4.0	28.7	81.6	1.4	5.32
공동체 생활 및 문화	5.3	14.5	19.8	48.4	27.7	2.3	30.0	78.4	1.8	5.18
교육 환경	4.9	15.0	19.9	50.2	23.3	3.6	26.9	77.1	3.1	5.15
영농(농지)규모	3.6	14.8	18.3	64.4	14.1	0.9	15.0	79.4	2.2	4.85
농업인의 농업 애착	6.4	31.2	37.6	44.0	14.7	2.5	17.2	61.2	1.2	4.38
농가부채·영농자금	9.1	27.5	36.6	44.8	14.1	1.9	16.0	60.8	2.6	4.29
농산물 유통	8.9	28.3	37.1	46.8	13.8	0.9	14.7	61.5	1.4	4.23
농외소득 기회	12.0	26.1	38.1	42.1	15.4	1.4	16.8	58.9	3.0	4.18
일반 국민의 농업인식	9.9	38.7	48.7	40.9	8.2	0.7	8.9	49.8	1.6	3.75
농사 수익성	14.3	38.7	53.0	29.8	14.7	1.2	16.0	45.8	1.2	3.73
농자재 수급 및 가격	14.3	47.2	61.5	29.5	7.0	0.4	7.4	36.9	1.6	3.27
농산물 수입 개방	18.7	43.0	61.7	28.4	5.7	1.4	7.2	35.6	2.7	3.15
정부의 농업인식	24.1	37.7	61.9	28.3	7.2	0.7	7.9	36.2	1.9	3.03
농촌일손	40.5	39.1	79.6	14.7	3.2	0.5	3.7	18.4	2.1	2.04

자료: 저자 작성.

5.6.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 의견 꾸준히 증가해

- 현재 농촌 생활에 대해 ‘만족’ 응답이 42.7%로, ‘불만족’ 18.5%보다 24.2%p 높게 나타남. 보통 수준인 ‘그저 그렇다’는 36.9%였음.
- ‘만족’ 응답은 대재 이상(53.8%), 영농경력 20년 미만(53.4%),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이상(48.7%)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2-53 현재 농촌 생활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불만 (소계)	그저 그렇다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만족 (소계)	무응답	T/F
전 체		3.2	15.3	18.5	36.9	36.0	6.6	42.7	2.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3.6	17.4	21.0	41.5	30.1	4.4	34.5	3.0	-6.6***
	대재 이상	2.5	12.6	15.1	30.5	44.1	9.7	53.8	0.6	
	무응답	0.0	0.0	0.0	50.0	50.0	0.0	50.0	0.0	
영농 경력	20년 미만	2.5	11.9	14.4	31.1	44.5	8.9	53.4	1.1	6.53***
	20년 이상	3.6	18.0	21.7	41.3	29.9	4.9	34.8	2.3	
	무응답	0.0	0.0	0.0	23.1	38.5	15.4	53.8	23.1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3.8	17.9	21.8	41.7	29.7	4.2	33.9	2.7	-5.26***
	2천만 원 이상	2.2	14.2	16.3	33.6	40.3	8.4	48.7	1.5	
	무응답	5.1	11.3	16.4	34.5	39.5	7.9	47.5	1.7	

주: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 현재 농촌 생활에 ‘만족한다’는 2003년 10.7%에 그쳤으나, 2019년 42.7%로 32.0%p까지 크게 증가하였음.

- 이 같은 결과는 앞서 5년 전 대비 농업경영과 생활환경 중 ‘향상’된 분야인 ‘도로교통 등 생활환경’, ‘보건·의료 시설’, ‘문화·복지 시설’,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생활 및 문화’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 ‘불만족한다’는 2003년 52.1%에서 2019년 18.5%로 감소 추세이며, ‘그저 그렇다’는 30%대를 유지하고 있음.

표 2-54 현재 농촌 생활 만족도(연도별)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우 만족	0.8	0.8	1.5	1.2	2.5	3.2	3.2	2.5	3.7	3.2	4.5	6.7	8.6	4.7	8.2	5.3	6.6
약간 만족	9.9	10.1	8.0	15.3	15.3	19.5	22.4	20.8	21.9	29.3	26.8	37.1	28.8	24.4	32.5	33.4	36.0
만족(소계)	10.7	10.9	9.5	16.5	17.8	22.7	25.6	23.3	25.6	32.5	31.3	43.8	37.4	29.1	40.7	38.7	42.7
그저 그렇다	37.2	40.2	32.4	40.6	40.0	39.9	38.2	38.4	42.2	34.0	38.2	36.1	39.9	39.5	35.3	41.5	36.9
약간 불만	34.4	32.9	34.1	31.7	29.8	24.3	26.4	28.3	24.4	27.4	24.3	15.5	17.8	23.9	16.5	16.3	15.3
매우 불만	17.7	15.9	24.0	10.2	11.9	12.5	8.3	9.9	7.3	6.0	4.9	3.3	3.2	6.9	4.6	2.2	3.2
불만(소계)	52.1	48.8	58.1	41.9	41.7	36.8	34.7	38.2	31.7	33.4	29.2	18.8	21.0	30.8	21.1	18.5	18.5
모름/무응답	-	-	-	1.1	0.6	0.6	1.6	0.1	0.5	0.2	1.3	1.2	1.7	0.6	3.0	1.3	2.0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5.7. 현재 농촌 생활 중 ‘주거환경’, ‘이웃과의 관계’, ‘보건 의료’ 만족해

○ 현재 8개 분야별 농촌 생활 중 ‘주거환경’(45.8%)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이웃과의 관계’(35.3%), ‘보건 의료’(33.5%), ‘대중교통’(30.2%) 등으로 응답함.

- 특히, ‘소득원 및 일자리’는 현재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5년 전과의 비교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낮은 분야로 나타남.

표 2-55 현재 분야별 농촌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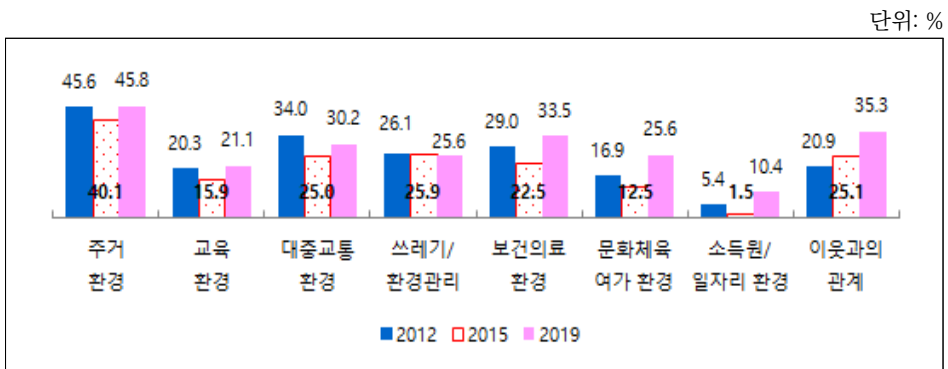
단위: %

문항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불만 (소계)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만족 (소계)	보통 이상 (소계)	모름/무응답	10점 평균 (점)
주거환경	1.6	9.2	10.8	42.5	41.4	4.5	45.8	88.3	0.9	5.96
이웃과의 관계	1.9	11.3	13.2	50.4	30.7	4.6	35.3	85.7	1.1	5.63
보건 의료	4.4	19.8	24.2	41.2	30.0	3.5	33.5	74.7	1.1	5.21
대중교통	7.8	23.8	31.6	37.0	27.2	3.0	30.2	67.2	1.2	4.85
문화 체육 여가	5.4	24.3	29.7	43.0	24.1	1.6	25.7	68.7	1.6	4.80
교육환경	5.3	23.1	28.4	48.5	19.1	2.0	21.1	69.6	2.1	4.73
쓰레기 및 환경 관리	8.8	29.7	38.5	34.8	23.6	2.0	25.6	60.4	1.1	4.50
소득원 및 일자리	10.5	41.6	52.1	36.1	9.3	1.1	10.4	46.5	1.4	3.70

자료: 저자 작성.

○ ‘주거환경’(45.8%)은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웃과의 관계’, ‘문화체육·여가 환경’, ‘보건·의료 환경’ 만족도는 2012년 대비 각각 14.4%p, 8.7%p, 4.5%p 증가하였음. 반면, ‘대중교통’은 2019년 만족도가 높은 분야였지만, 2012년(34.0%)에 비해 3.8%p 감소한 수치임.

그림 2-21 현재 분야별 농촌 생활 만족도(‘만족’ 의견)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5.8. 도시 생활 대비 농촌 생활 수준, 농업인과 도시민 간 인식 차이 커

○ 도시 생활 수준 대비 농촌 생활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는 농업인은 18.0%, 도시민은 48.1%로 농업인보다 도시민이 2배가량 ‘긍정’ 평가하였음.

- ‘낮다’는 농업인은 80.6%, 도시민은 52.0%로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28.6%p ‘부정’ 인식이 높았음.

○ 또한, 2017년과 비교해 농업인은 올해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응답하였으며, 도시민은 ‘긍정’(2017년 11.4%, 2019년 15.8%)과 ‘부정’(2017년 51.7%, 2019년 52.0%) 평가 모두 소폭 증가한 반면, ‘비슷하다’(2017년 36.9%, 2019년 32.3%)는 감소하였음.

표 2-56 도시 생활 수준 대비 농촌 생활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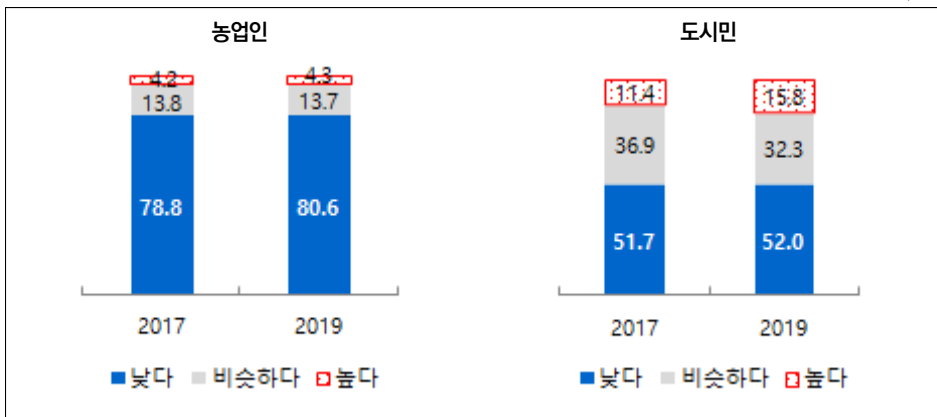
구분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낮다 (소계)	비슷 하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높다 (소계)	무응답	T/F
농업인	23.8	56.8	80.6	13.7	3.9	0.3	4.3	1.4	-21.84***
도시민	3.4	48.6	52.0	32.3	15.7	0.1	15.8	0.0	

주: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2 도시 생활 수준 대비 농촌 생활 수준

단위: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5.9. 마을 주민과의 관계 ‘원만’ 70.1%, 소속감과 자긍심 ‘느껴’ 53.8%

○ 마을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 70.1%로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원만하지 않다’는 4.7%에 그쳤음. ‘그저 그렇다’는 23.3%였음.

- ‘원만하다’는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이상(73.2%)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2-57 거주하는 마을에 마을 주민과의 관계

단위: %

구분		매우 원만하지 않다	원만하지 않은 편	원만하지 않다 (소계)	그저 그렇다	원만한 편	매우 원만하다	원만 하다 (소계)	무응답	T/F
전 체		0.7	3.9	4.7	23.3	58.8	11.3	70.1	2.0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0.5	5.5	6.0	24.8	58.8	8.3	67.1	2.2	-3.29**
	2천만 원 이상	0.8	2.7	3.5	21.8	59.7	13.5	73.2	1.5	
	무응답	1.1	4.0	5.1	24.3	54.8	12.4	67.2	3.4	

주: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 또한,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긍정’ 의견은 53.8%였고, ‘부정’ 의견은 10.4%로 나타남. ‘보통’은 34.9%로 조사됨.

- ‘그렇다’는 영농경력 20년 이상(57.9%),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이상(57.5%)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표 2-58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 여부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소계)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소계)	무응답	T/F
전 체		1.4	9.0	10.4	34.9	44.7	9.1	53.8	0.9	
영농 경력	20년 미만	1.3	10.6	11.9	39.8	40.7	7.4	48.2	0.2	-3.55***
	20년 이상	1.5	7.9	9.4	31.6	47.7	10.3	57.9	1.1	
	무응답	0.0	7.7	7.7	23.1	38.5	15.4	53.8	15.4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1.2	9.6	10.8	37.7	44.0	6.5	50.5	1.0	-2.67**
	2천만 원 이상	1.6	8.4	10.0	32.1	46.0	11.6	57.5	0.4	
	무응답	1.1	9.6	10.7	37.3	41.8	7.9	49.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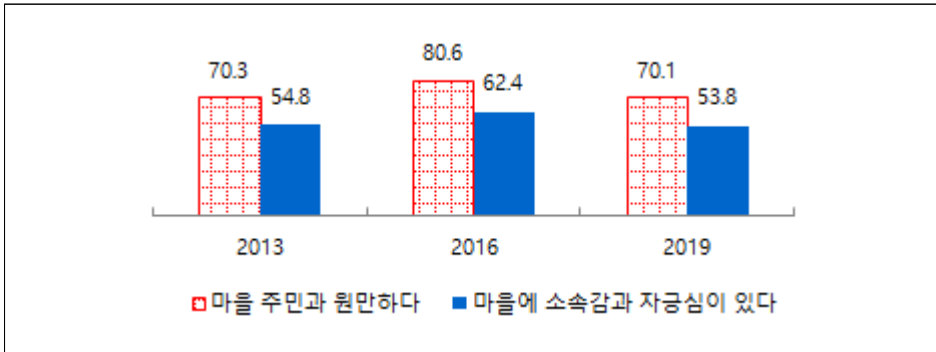
주: *p<.05, **p<.01, ***p<.001

자료: 저자 작성.

○ 마을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와 거주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이 ‘있다’는 ‘긍정’ 의견은 2013년과 비교해 비슷한 응답 결과를 보였음.

그림 2-23 마을 주민과의 관계 ‘원만’ 및 거주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 ‘있다’

단위: %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각 연도).

제3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



3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⁷⁾

-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 농업·농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한 것을 취합,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농업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제기되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최근의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었음.

⁷⁾ 도시민,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와 의견에 대해 제3장에서는 요약정리한 내용만 제시함.

1. 정책 건의를 통해 본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

- 자유의견란을 통해 제시된 도시민과 농업인의 정책 건의와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수요 등은 도시민 1,856건, 농업인 1,197건 등 전체 3,053건으로 집계되어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음.
- 농업인은 ‘농업정책’을, 도시민은 ‘농산물 유통, 가격’과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농정 건의를 많이 제시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농업인은 ‘농산물 유통, 가격’, ‘농촌인력, 후계인력’ 등의 순으로 건의함.
- 도시민은 ‘농산물 유통, 가격’에 대한 주문이 4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인은 ‘농업정책’이 374건으로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도시민은 농산물 유통과정의 간소화,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농업인은 농촌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운영 등을 요구함.
- 이어 도시민은 ‘농산물 안전성’(418건)에 대해 많은 건의를 제시하였으며,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제공, 잔류농약 검사 강화, 농약사용 자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그 외에도 도시민들은 ‘농촌인력, 후계인력’(165건), ‘농업정책’(156건), ‘농촌관광’(128건), ‘농촌 자연환경’(119건) 등의 순으로 건의함.
- 농업인들도 전체 1,197건 중 ‘농산물 유통, 가격’(270건)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거듭 강조하였으며, ‘농촌인력, 후계인력’(146건)에 대한 의견으로 농촌인력 확보,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함.
- 이 밖에도 농업인은 ‘영농자금, 농가부채’(83건), ‘농지’(55건), ‘농촌 자연환경’(53건)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함.

표 3-1 농정 건의 요지 집계(도시민 1,856건, 농업인 1,197건)

단위: 건

분야	구분	건수	요지
농업정책	농업인	3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 농촌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 ■ 대농 위주 정책을 지양하고 중소농을 위한 정책 추진
	도시민	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에 대한 홍보 ■ 농업정책의 일관화, 체계화, 실용화
농촌관광	농업인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산물 판매 및 직거래 확대 필요 ■ 관광 농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도시민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체험 관광사업 육성 필요 ■ 농촌의 새로운 관광지 개발 요망
농산물 유통, 가격	농업인	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 필요 ■ 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되어야 함
	도시민	4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과정 간소화 필요 ■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농산물 안전성	농업인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O 식품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PLS 제도로 농산물 생산이 저하에 따른 방안 마련 필요
	도시민	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농약 검사 강화, 농약 사용 자제 ■ 안전한 농산물 제공/안심 먹거리 제공
통상협상	농업인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경에 따른 대책 필요
	도시민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협상 해결, 수출 확대
품목별 정책	농업인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품목과 생산량 통제 필요 ■ 곡물자금률을 높일 수 있는 일에 대한 정책 필요
	도시민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산물 개발 ■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
영농자금, 농가부채	농업인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자금 지원 확대/농가부채 해결 방안 필요
	도시민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금리/무이자 영농자금 대출 ■ 영농자금 확대
농촌인력, 후계인력	농업인	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인력 확보가 필요 ■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돕는 정책이 필요
	도시민	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인력, 후계인력 양성 ■ 청년 유입을 위한 혜택 제공
농지	농업인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고령화에 따른 휴경지에 대한 대책 필요
	도시민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보존
농업기관	농업인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필요
	도시민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
농촌 지역개발, 복지	농업인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대책 필요
	도시민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개발 필요, 복지문화시설 확대 필요
농촌 자연환경	농업인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폐기물 처리 대책 필요
	도시민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자연환경 보존 및 훼손 최소화
기타	농업인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수 및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대책 필요
	도시민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전기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 지양 ■ 질병관리 및 예방 필요

자료: 저자 작성.

부록



농정 건의 전문(농업인·도시민)

□ 농업인 분야별 건의 사항

① 농업정책

농업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농촌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및 운영이 필요하다.

농업 예산 확대

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경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대농 위주 정책을 지양하고 중소농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농업정책을 펼쳐야 한다.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품목과 생산량을 통제해야 한다.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렵다.

농업 전문가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농이 안정적으로 농사지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귀농·귀촌 정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한 후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30 청년층에 편중된 농업정책이 중장년층을 소외시킨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 및 지속해야 한다.

기업과 중소농을 구분하여 지원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

기업이 아닌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농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농사를 짓지 않는 땅 주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주지 않아 문제가 크다.

농산물 가격이 너무 싸다.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가격이 심하다.

농업은 생명 산업이므로 정책적으로 우위에 두어야 한다.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법령 정비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농촌 지원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대농과 소농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보조금이 특정 농가에 집중되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자 대비 소득이 적다.

특정 농가가 아닌 누구에게나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농민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1차 농산물을 넘어 가공품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2018년 쌀 목표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

6차 산업 운영의 어려움

PLS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

가난한 소농들이 먼저 출하하여 전량 구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축질병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하는 대신 축산 농가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각종 무역협정으로 인해 희생되는 농업은 수출 기업이 보상해야 한다.

각종 지원금, 보조금을 없애고 직불금으로 통합해야 한다.

경제 논리 이전에 생명 산업임을 생각하여 농업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경제 논리에 따르는 것이 아닌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 상황과 시대 변화에 맞는 정보 및 기술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고령의 농업인을 위해 농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시설이 필요하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품질 쌀 생산으로 쌀 수급 조절

공무원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공무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

공산품 판매 수익으로 생긴 자금을 열악한 농업에 투자해야 한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

공익형 직불제 실시

공익형 직불제 확대
공익형 직불제 확대 실시
공익형 직불제는 임야 농사에 차별적이다.
공익형 직불제의 문제점 제기
공익형 직접 지불제 및 농민 수당 실시
과수원 옆 축사로 인한 분진 피해에 대책이 필요하다.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정부 매입 추진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예방하기 위해 재배 쿼터제를 실시해야 한다.
구조 조정할 비용을 농촌 지도와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
국내산 농업 생산물 우선적 소비 정책 마련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자연을 보전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귀농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촌 지역 미래 개척
귀농·귀촌인에게만 지원이 주어져 기존 농민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귀농인에게 주는 혜택을 귀촌인에게까지 주어서는 안 된다.
기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
기본 수당 및 직불제 확대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 보험 확대가 필요하다.
노후 연금 정책으로 농민 수당을 활성화해야 한다.
노후에 토지를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농가 규모와 상관없이 가구당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농가 소득 위주가 아닌 소비자의 건강과 권리를 지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가 수입이 적다.
농경제 미등록 조건 농지 문제 해결
농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농기계 구입 비용 부담이 크다.
농기계 구입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형 장비도 포함해야 한다.
농기구 및 농자재 가격 인하

농민 기본 소득 및 공익형 직불제 확대
농민 기본 소득 보장
농민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직불제 전환이 필요하다.
농민 수당 및 공익형 직불제 실시
농민 수당 및 농업 예산 확대
농민 수당 및 농촌 복지 혜택 확대
농민 수당 지급
농민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농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농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농민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야 한다.
농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농부가 판매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 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다.
농사에 해가 되는 야생동물 개체수를 관리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 예시제 실시
농산물 가격 하한제를 적용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소비자 위주가 아닌 생산자 위주로 책정되어야 한다.
농산물 생산 기반 지원
농산물 생산/유통 대신 역대 공급/반대급부 수익이라는 비화폐 방식의 모델이 필요하다.
농산물 수급 조절
농산물 수입 금지
농산물 재해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제도
농산물 통계를 정확히 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가격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민에게 많은 이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농업 개방에 따른 국내산 농작물의 경쟁력 향상(생산비, 일자리 등)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농업 기술과 시설 개발에 적합한 농가를 선별하여 농촌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

농업 보조금 제도 전면 개편(직불금으로 일원화)

농업 보조금이 일부 법인 및 단체에 몰린다.

농업용수 확보와 가뭄 해결을 위해 강물을 저수지로 양수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농업정책 예산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농업정책 지원 필수

농업정책은 현장 농업인과의 토론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농업정책의 창의성이 부족하다(강소농, 6차 산업 등 일본 정책을 그대로 도입).

농업정책이 미흡하다.

농업정책이 특정인에게만 적용되어 (농업 법인, 사회적 기업 등) 소농에게는 기회가 없다.

농업 직접 지불 상향 제공

농업 후계자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교육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농업에도 고용보험과 같은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농업을 국력 보존과 식량 생산의 차원에서 중요시해야 한다.

농업을 정책적으로 우위에 두어야 한다.

농업의 1차산업 유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농업인들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야 한다.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자재, 농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농작물 보험 제도의 생산량 및 품종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농지 매매 대금 현실화

농지 원본만 올려놓고 타인이 경작하는 농토가 늘어나고 있다.

농촌 일손 돕기 운동으로 인건비 절감이 필요하다.

농촌 지원 사업의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 체험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농촌 평균 소득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에 살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위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다.

농촌에 청년이 드물다.

농촌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의 열악한 의료 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

농축산 제반 작물에 대한 안전 정책

농협이 지나치게 많은 사업에 관여하는 것이 문제다.

단순한 먹거리 공급이 아닌 식량 안보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대규모 기업 농장 활성화

대농에게 불리한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

덴마크 등 유럽의 농업을 벤치마킹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나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품목에 재배 면적 제한을 두어야 한다.

무상 보조금 정책을 무이자 및 장기 저리 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농수로 개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미국의 압박에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한 것은 잘못됐다.

미국의 압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모색

미시적이고 선결 가능한 정책으로 기존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

발작물 재배 시 밭 직불금을, 수도작 재배 시 수도작 직불금을 지불해야 한다.

복잡한 유통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복지라는 명목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엉뚱한 지원을 해주어 일손이 줄어든다.

생산비 안전 보증 제도

생산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서유럽식 농가 소득 안정적 보장정책

설문 조사 및 연구 용역 결과가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성과가 눈에 띄는 사업에만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

소규모 가족형 농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규모 농업인도 스마트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소규모 법인체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소농과 유기농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

소득이 없어서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를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수급 불안과 기상 재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수입 농산물 품질 표시 강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스마트팜과 같은 과학 영농정책으로 미래지향적인 농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시설 자금 및 농기계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에 대책이 필요하다.

시장 논리에 따른 농지 축소 및 개발과 대농 중심의 정책이 아쉽다.

시혜적 성격의 지원이 아닌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식량 안보 및 환경 보전이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실경작자가 임차 계약 없이 농지를 경작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 많다.

실효성 있는 농민 기본 수당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쌀 목표 가격을 정하거나 직불제 개편(공익형 직불제) 시행이 필요하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타작물 재배를 권장했으나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있었다.

쌀 재고 누적에 따른 논 대체 작물 재배로 인한 기존 밭 재배 농가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쌀의 생산량을 대폭 줄이고 가격을 현재의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

안전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여러 지역에서의 같은 농산물 재배를 제한해야 한다.

유기농 또는 친환경으로 재배된 농산물의 가격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유기농, 소농, 가족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유기질 퇴비가 신청한 만큼 지급되지 않았다.

유행하는 품목에 휩쓸리는 대신 지속가능한 생산을 추구해야 한다.

음료 생산 시설에 대한 HACCP 의무화를 폐지해야 한다.

일반 농민들에 대한 정책 홍보가 부족하다.

일정 이하의 농지는 후계 농업인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어야 한다.

임야 농지에도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연 친화적 영농 기반 확대

자유무역 활성화로 인해 어려워지는 농촌의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잡곡 산지 수산별 정부 구매 확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예산 투자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성 없는 인력을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정부 보조금 완전 폐지

정부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농민 스스로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예산을 농식품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판로 확보에 힘써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농업과 농촌 관련 정책에 무관심하다.

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편중되어 있다.

정책이 도회지나 선거 인수가 많은 지역에 치우쳐 있다.

정확한 통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에서 3월 개방되는 오렌지 수입으로 인해 감귤 농사에 타격이 크다.

조수 피해 방지를 위한 울타리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특구를 통한 물량 조절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농작물을 적절히 재배하도록 하여 가격 폭락을 방지해야 한다.

지역별, 품목별 정책을 전문가가 개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범 사업은 소수에게 편파적이다.

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

직불금 확대

직불금을 현행 면적이 아닌 매상되는 미곡에 부과하여 지급해야 한다.

직불제 부정 수급 방지

직불제 상향과 경관 직불을 확대하여 농업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직불제를 현실에 맞게 확대 실시

질 좋은 농자재를 싸게 공급해야 한다.

질 좋은 농지 구입이 어렵다.

창업보다는 사업의 확장 및 발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청년농 창업 지원은 부당하다.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는 농업인 수당제가 필요하다.

축산업 신규 거리 제한 완화

출하 시 농산물 포장제 지원 확대

친환경 농산물 소비 및 가격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 확대

친환경 농업을 통한 농촌 환경의 보전과 건전한 먹거리 생산

친환경 영농 확대

친환경 유기농 재배 단지의 병충해 방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우스 과잉 공급에 따른 채소 값 폭락 문제

현실과 맞지 않거나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정책이 많다.

현재의 농업 기반과 다른 작물 재배가 어려우므로 기반 설비의 재고가 필요하다.

② 농촌관광

농촌관광 활성화로 도시와 농촌 교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관광 농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산물 판매 및 직거래를 확대해야 한다.

도로 확장 및 개선이 시급하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지역 내 관광지를 홍보해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관광 활성화 필요

관광 기반 시설 지원 및 장기 저리 대출

관광 농원이 정부의 지원 없이 자생할 수 있어야 한다.

관광 상품 개발에 있어 전문가와 지역인의 소통이 필요하다.

교통 환경과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어촌관광 개발 시급

농업 기관이나 행정부서 국회, 지방의회, 지역 과제 운영위원회 감축(무보수 명예직화)

농업인의 숙박업 접근이 용이하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농촌 개발 자금 지원

농촌관광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농촌관광 활성화로 귀농·귀촌을 장려해야 한다.

농촌관광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촌인력이 부족하다.

농촌의 민박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관광을 지양해야 한다.

농촌의 자연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도시 관광 개발로 인해 농촌관광이 줄어들고 있다.

비영농 수입 창출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시설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하다.

시내 투어가 가능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자금과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낮춰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체험 관광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 사업(벽화 거리, 음악이 있는 거리, 농산물 체험 등)을 통해 농촌을 널리 알려야 한다.

지역별, 마을별 특성화를 위한 관광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야 한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이 부족하다.

현재의 농촌관광정책은 투자 비용 및 부채 부담이 크다.

③ 농산물 유통, 가격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폭리를 개선해야 한다.

유통 과정을 개선하여 생산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생산자 판매 가격과 소비자 구매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제도

정부에서 농산물 판매와 유통을 담당해야 한다.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품목과 생산량을 통제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 및 판매의 어려움으로 농가 소득이 불안정하다.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다.

농산물 가격 폭락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너무 싸다.

농산물 가격이 물가 상승에 비해 너무 싸다.

농산물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농산물 가격 하한제를 적용해야 한다.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

농산물 유통 구조 투명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 구조 개선

농산물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

농협에서 농산물 판매와 유통을 담당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농산물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

가격 보장을 위해 농협에서 품목 식재를 조정해야 한다.

가격 안정 지원

가락시장 및 전국 도매 시장에서 정가·수의 매매 실시

경매 출하 시 경매 가격과 소비자 구매 가격의 차이가 심하다.

경매장에 부조리가 많다.

계약 재배 및 안정적 판로 확보

공산품과 같이 가격이 정해져 있었으면 한다.

공판장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공판장에서 경매가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판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과수 및 채소의 생산량을 조절해야 한다.

과일 가격도 정부의 개입으로 안정화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안정적인 유통망을 제공해야 한다.

규제 완화 및 자율화

농가 경영 및 가격 책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가의 재배 면적을 파악하여 생산량을 조절해야 한다.

농민이 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농사에 투입되는 인력에 비해 소득이 낮다

농산물 가격 지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가 경제가 어렵다.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손실 보전 제도

농산물 가격 현실화

농산물 가격이 다양하다.

농산물 가격이 유통업자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농산물 생산 및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 쿼터제 도입
농산물 수급 조절
농산물 수매가 조기 확정
농산물 수입 정책을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 및 가공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 체계를 일원화하여 등급에 따라 가격을 통일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을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산물을 수출해야 한다.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책임져야 한다.
농자재와 인건비가 농산물 가격에 비해 너무 비싸다.
농작물 생산량을 조절해야 한다.
농촌 단체(농협, 축협 등)를 통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농협 또는 감귤협동조합 계통 출하 시 인센티브 제공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 문제 해결
농협을 통한 유통 체계는 농민들을 어렵게 만든다.
농협을 통한 유통 판매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기업 등 식품회사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에 1차 농업인의 참여도가 높아져야 한다.
도매시장 상인들이 농산물 유통을 독점하고 있다.
로컬 푸드 출하 경쟁이 심각하다.
로컬 푸드 활성화 및 유통 흐름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로컬 푸드의 개인 출하량을 조절해야 한다.
물류 비용을 낮춰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생산자의 계획된 생산과 소비의 촉진을 도모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소규모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소농들의 판로 확보가 어렵다.
소농의 판매를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비자와의 거리가 멀어서 경쟁력이 없다.
수급 유통 정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수입 농산물 가격이 저렴하여 경쟁이 어렵다.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산 농산물 가격 하락을 해결해야 한다.

수입 농산물의 엄격한 관리

수확 후에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유통망이 필요하다.

쌀 가격 현실화

쌀 등 핵심 농산물 가격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유통 과정에서 중간 상인을 없애야 한다.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가 소비자와 연결되어야 한다.

유통 단계를 농협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유통 수수료가 비싸다.

유통과 수급 문제 해결

유통면진이 농심을 울리지 않는 유통이 되었으면 한다.

일본식 농업 도입으로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일한 만큼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농작 품목 선택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에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정적 재배 면적 유도 홍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하는 농가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지역 농협이나 행정 당국에서 농산물을 판매해 주어야 한다.

직불제, 보조금,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

최소 수입 보장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퇴비 발효 공장에서 수거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품목별 기본 단가가 정해져야 한다.

품목별 정확한 생산량 파악으로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하청 업체로 인해 유통 수수료가 비싸다.

현장을 직접 방문한 후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농산물 안전성

GMO 식품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GMO 농산물이나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를 사용한 농산물 유통이 염려된다.

PLS 제도로 농산물 생산이 저하된다.

고독성 농약의 사용 자제는 바람직하다.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은 안전성 확보에 있다.

농민 수당 및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제도 실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수시로 시행해야 한다.

농산물 안전성 정책을 위반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농산물 안전성 확보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을 단위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

농산물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농약 전문가로 이루어진 농약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농약과 영양제를 남용하는 농사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

농업 예산 확대

농업정책 지원 필수

당진-천안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농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

로컬 푸드 납품과 PLS 검사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시행된다.

로컬 푸드 확대

소비자의 건강과 위생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안전성 검사 과정이 까다로워 친환경 농사에 어려움이 많다.

안전성은 건강에 중요하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안전한 농약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유기농, 친환경, GAP, 관형농 등의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일부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이 다른 농가에 피해를 준다.

잔류 농약 측정기기를 소형화하여 저렴하게 보급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친환경 농사에 필요한 자재 지원을 줄였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 및 지원 확대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간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⑤ 통상 협상

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경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복귀시켜야 한다.

농산물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처하는 방식이 불만스럽다.

자국 식량 공급률이 높아져야 하는데 통상 협상에서 항상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통상 협상에 우리나라 농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통상 협상에서 농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상 협상으로 득을 보는 산업 분야의 세원으로 농업을 지원해야 한다.

해외 수출 환경 조성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⑥ 품목별 정책

곡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과수(사과) FTA 지원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품목과 생산량을 통제해야 한다.

과채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온실 신규 사업을 멈춰야 한다.

농산물 가격 평균화 정책이 필요하다.

보장성 있는 품목이 없다.

비슷한 품목 안에서도 고객의 특성에 따라 정책을 나누어 시행해야 한다.

샤인머스켓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

임산물에 대한 공익성 직불금 제도 실시

지역별, 품목별 육성안이 필요하다.

축산 거리 제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

품목별 생산자 단체 구성 지원

품목별 수급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

품목별 정책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⑦ 영농 자금, 농가 부채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기계 구입 비용 부담이 크다.

영농 자금 지원 확대

금리를 낮춰야 한다.

농가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1% 저금리 융자 사업 확대

5년차 귀농인들에게 운영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국방 차원에서 회기적 자금 지원

농가 부채 정리를 위한 특별 자금 저금리 대출

농기계 가격을 낮춰야 한다.

농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농기계 구입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농기계 유지 비용 부담이 크다.

농민 기본 소득 및 공익형 직불제 확대

농민 수당 및 공익형 직불제 확대

농민에게 필요한 대출(농심보 활용 안내 필요)

농사 적자로 부채가 늘어난다.

농사를 지어 빚 갚기가 어렵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가 경제가 어렵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 부채가 늘어난다.

농업 소득 저하로 현재 금리가 부담스럽다.

농업인 생계 부채 이자 감면

농자재와 영농 자금 이자를 제하고 나면 소득이 너무 적다.

농지 구입 자금 대출 기간을 늘려야 한다.

농촌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협을 없애야 한다.

담보 능력 없이도 영농 자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채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새로운 영농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소농에 대한 영농 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

소농은 영농 자금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영농 대출 이자를 0.5% 이하로 낮춰야 한다.

영농 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영농 자금 이자가 높다.

영농 자금 이자를 낮춰야 한다.

영농 자금 이자율과 상환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영농 자금을 무이자로 하여야 한다.

자산이 없거나 적은 농업인은 정책 지원만으로 자립이 어렵다.

정책 자금이나 담보 대출을 융통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

정책 자금 규모와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

정책 자금 신청 종류가 적다.

중장년층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

처리 영농 자금의 단기 상환이 농가 부채 증가의 원인이다.

투자 대비 소득이 적다.

후계농 자금의 이자율과 상환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⑧ 농촌인력, 후계인력

영농 후계자를 육성해야 한다.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다.

농촌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건비가 비싸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인력 육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소득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

지역에 연고가 있는 영농 후계자를 육성해야 한다.

청년농 육성 기준 및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청년농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

고령의 농업인을 위해 농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황무지가 되는 토지가 발생할 것이다.

고품질 생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귀농 예정자를 위한 귀농 체험 하우스 운영에 지원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정책이 탁상행정에서 그치고 있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앞날을 고려해 신중히 펼쳐야 한다.

귀농인에게 농지 확보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귀농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창구가 필요하다.

기반이 없는 일반인은 농촌에 적응하기 어렵다.

기존 농업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농번기에 외국인력을 충원하여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

농업 인재 양성 및 유입이 필요하다.

농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농업에도 4대보험과 같은 안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농업의 핵심 인력인 4050세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농작업 중 상해에 대해 상호 부담 없이 처리할 방안이 필요하다.

농작업을 대행하는 젊은 농업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농촌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촌인력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인력이 부족하다.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 후계 인력들이 보다 농촌과 밀접해야 한다.

농촌에 부모가 있는 자녀를 귀농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에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

도시의 유희 인력을 농촌에 투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부족한 장비 및 인력을 공공에서 지원해야 한다.

생산에 관심이 있는 영농 후계자를 육성해야 한다.

소농이 안정적으로 농사지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영농 후계자 육성을 위한 교육과 현장 학습이 필요하다.

영농 후계자에게 농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에 대한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여 국내 인력으로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농촌 노인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자식에게 자신감 있게 승계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귀농정책이 필요하다.

정부 규제로 인해 농촌인력이 부족하다.

직접 직불금을 보장해야 한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청년 창업농 등 후계 인력도 자금이 부족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층 유입이 없다.

청년층 유입이 필요하다.

청년층과 영농 후계자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제에 문제가 많다.

해외인력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후계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

후계인력 영농 자금 대출 기준을 18~49세로 늘려야 한다.

후계인력으로서 4050세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후계자 자금의 거치 및 상환 기간을 늘려야 한다.

⑨ 농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농사를 지은 사람이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법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휴경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휴경지를 농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40대 이상 농업인에게도 농지 구입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논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어야 한다.

논이 아닌 밭에도 수리 시설이 필요하다.

농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농민들이 농업진흥구역에서 민박이나 휴게음식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농사를 지은 사람이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농업 소득이 거의 없는 농지의 개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농지 구입 자금 평당 공시지가의 100% 지원

농지 구입 자금 확대 및 금리 인하

농지 보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지 상한제 폐지

농지 연금 제도 현실화(평가금액 실거래 평가액으로 연금액 산정 개정)

농지 연금으로 고령 농업인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농지 은행 운영 활성화

농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권장해야 한다.

농지 전용을 통해 도시 근교 토지가 무단 전용되고 있다.

농지 정리 지역에서의 인접 토지 교환(세금 면제)

농지가 부족하다.

농지를 풀어주어야 한다(생산 녹지, 도시 근교 절대녹지).

농지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농지의 문턱이 높아 영농 규모 확충이 어렵다.

도시민도 시골 농지를 매입할 수 있어야 한다.

밭 농지 정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밭작물 대량 재배를 위한 경지 작업 정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밭의 경지 정리가 필요하다.

부채 지주 농지는 농민에게 매도하거나 정부가 매수하여 농민에게 임차해야 한다.

비농업인의 농지 판매 및 임차를 제한해야 한다.

수로가 없다.

외부인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 후 방치하는 농지가 많다.

이웃 농사에 피해를 끼치는 휴경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대 계약에 있어 임대농에게 불리한 농지관리법을 개선해야 한다.

임대 농지에도 야생 동물 피해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임대지 공개 공시(면적도 제시)

적정 면적의 절대 농지 확보 필요

젊은 청년 농민에게 농지 구입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증여세가 많이 나와 농지 증여가 어렵다.

청년농들이 농사지를 농지가 없다.

평야지대 외 산간 오지는 절대 농지를 해제하여 개발해야 한다.

휴경지를 귀농·귀촌인에게 싸게 임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휴경지를 다른 용도(태양광 발전 설비 등)로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휴경지를 양성화하여 작물 재배를 현실화해야 한다.

⑩ 농업기관

농업기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에 따른 의제 매입 비율을 높여야 한다.

농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미래 지향적 능력이 필요하다.

농업기관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농업기관에서 토양 등의 분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행사에 세금이 낭비된다.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의 농민 교육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농촌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및 운영이 필요하다.

농협에서 농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해야 한다.

농협이 농민들이 아닌 조합장이나 직원들을 위해 일한다.

일부 지역농협, 청과에서 과일 가격을 조작한다.

지역별 축제가 너무 많다.

협동조합 직원들이 일선 농가를 방문하여 지도해야 한다.

⑪ 농촌 지역개발, 복지

5도 2촌 정책으로 도시인들의 농촌 체험 및 농산물 판매를 도모해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교통이 열악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이 어렵다.

농민 기본 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농촌 개발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절실하다.

농촌 관련 연구실 개발 필요

농촌 문화와 복지를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촌 인식 개선을 위해 문화 및 여가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단 설립 및 유지가 필요하다.

농촌 지역 대중교통에 대한 공영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⑫ 농촌 자연환경

농업 폐기물을 소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자연을 훼손하는 태양광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가로수 훼손을 막아야 한다.

귀농·귀촌인들이 무분별한 개발을 요구한다.

농사용 폐비닐을 수시로 수거해야 한다.

농업 폐기물 수거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농업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용 쓰레기 봉투를 판매 또는 제공해야 한다.

농업인들에게 환경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농촌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의 환경 오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무분별한 축산 시설을 규제해야 한다.

생태 유지를 위한 농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수중보의 지하화로 자연 복원 노력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이 필요하다.

양돈장을 폐쇄해야 한다.

자연 보전 직불금 도입

자연재해나 야생 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자원순환센터에서 폐기물 처리 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지역 정비와 청소 작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축사 및 비료 공장의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특정 사업을 허가할 때 지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 직불금을 도입하여 농업 폐기물 처리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⑬ 기타

조수 피해 대책이 시급하다.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

공중에 분사한 농약이 인근 주택에 피해를 끼친다.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품목과 생산량을 통제해야 한다.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TV 및 신문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미래 재배 품종 연구가 필요하다.

농가의 자가 생산물 판매 및 유통에 부가세 감면이 필요하다.

농기계 보조 사업 기계 대금과 보조 없이 농가에서 구입할 때 가격 차이가 없다.

농업 관련 보조 사업이 연고관계에 따라 시행되어 폐단이 크다.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농업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농외 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 문제를 인본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모든 분야에 좋은 대책이 필요하다.

물(강수량) 부족 문제

산림법을 보완하여 농가에서 임산물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시장 개방에 맞추어 농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소고기 값이 비싸다.

소규모 농가들이 식품 가공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장의 갑질 행태를 막아야 한다.

인건비 상승으로 내국인 고용이 어렵다.

최저 생활 이하 소득자에게 소득 보전 요망

친환경 농업 확대

□ 도시민 분야별 건의 사항

① 농업정책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농산물 유통 및 수급 안정
농업정책 수립
농업정책의 활성화
청년, 노장년 차별성을 없앴
정부의 지원 필요
안정적인 농업정책
농민에게 도움이되는 정책
농업정책 개선
농업국가에서 산업수출국가로 농업학생 보상 필요
스마트팜시설 기자재 비용 저렴 정책
농가소득 증대
농업정책의 일관화
농업정책의 체계화
농업정책의 실용화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갯춤
신농작방법 개발자의 인센티브 인정
농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청년 유입을 위한 혜택 제공
젊은 인력 농촌 정착 기반 조성
안전한 농산물 제공/안심 먹거리 제공
농산물 수입 최소화
농산물 유통과정 간소화
안전한 농산물 공급
수입 농산물 규제 강화
농산물 가격 인하
고정적인 수입 보장
농업정책에 대한 홍보
직불제 확대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농업정책의 구체화
농산물 수입에 자국민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농업지원정책이 너무 많음
지속적인 연구개발 필요
첨단기술적용 농사
농업인 실질 이익을 위한 품종 개량
식량무기화 대비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WTO 개도국 취소에 대한 농업경영 어려움 대처 방안 검토
기본 농민수당 필요성
농산물 세금 인하
농업인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
농업경영 컨설팅 전문가 육성
농업경영 자본능력자 우대정책
농업가치 존중정책 필요
빈부격차가 크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농촌인력 확충
후계 인력 양성
교육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농업 일자리 창출
고령화에 대비
농가격차 해소
세금당비 없는 적절한 지원책 필요
특별지역에 편중된 농업정책자금 골고루 사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재배
수출 확대
자연재해 예방
품목 다양화
혜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농지 생산량 향상 기술

② 농촌관광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체험 관광사업 육성	
농촌의 새로운 관광지 개발	
농촌관광 홍보 강화	
다양한 볼거리 제공	
농촌관광 상품 개발	
다양한 먹거리 제공	
농촌관광의 다양화	
지역에 맞는 관광 개발	
숙박시설 개선	
농촌환경 정비	
농촌관광객 유치	
농촌관광사업을 통한 소득 증대	
지역특산물 이용한 축제	
저렴한/적절한 관광비용	
농촌관광사업 육성	
저렴한 숙박비	
지역특산물 개발	
자연경관을 보존한 관광	
농촌 접근성 강화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	
숙박음식 가격 평준화	
농촌관광을 위한 정부 지원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존	
유적지와 연계 발전	
도로 이정표 개선	
농로 확장	
휴식시설 증설	
폐가 활용	
안전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점검	
화장실 불편	
농촌 자연환경 보존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깨끗한 농촌 자연환경	
무분별한 개발 방지	

③ 농산물 유통, 가격

농산물 가격 안정
농산물 유통과정 간소화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중간 마진을 줄임
농산물 유통 개선
농산물 유통 및 수급 안정
농산물 가격 인하
직거래 장터 활성화
안정된 유통
농민은 제값에 공급하고 수요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체계 마련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
국산 농산물 가격이 비쌈
수입 농산물 규제 강화
중간유통 폭리 단속 강화
공급 수급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 방지
과일/야채 가격이 비쌈
농산물 유통과정 현대화
농산물 유통과정 철저한 관리
유통과정에서 신선도와 위생관리 철저
농산물 산지에서 소비자 연결 배송시스템 구축
직거래 서비스 구축 시스템 정부 지원 필요
현실적인 가격 책정
농산물 가격 폭등,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 필요
농민 위주 적정가격 책정
농가의 유통마진 증가
농산물 유통과정 투명화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라벨표시 정확성
생산지에 대한 정확한 표기
농산물 비축 확대

지역 단위 로컬 푸드 소비기반 마련
정부 인의적 개입보다 시장경제 체제에 맡기는 방향이 바람직함
농산물 유통 관심 필요
소포장 판매
직불제 도입
믿음이 가는 유통과정
적당한 수익 농가 전달
직거래 공간 확대
재배지 조정으로 가격안정
가격 정찰제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가격의 불안정이 없어야 함
적절한 생산으로 안정적인 가격 유지
가격 폭락 시 유통경로 마련
거품없는 가격 조성
농가소득 증대

④ 농산물 안전성

안전한 농산물 제공/안심 먹거리 제공
농약잔류검사 강화
농약사용 자제
잔류농약이 없는 제품 생산
친환경 농산물 생산(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재배
안전한 관리
안전한 농산물 공급
잔류농약 안전성
농약잔류량 표시 의무화
유전자 변형 농산물 관리
농약의 철저한 관리
사용한 농약 및 사용량 표기
엄격한 품질관리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제공

농산물 안정을 위한 꾸준한 노력
질병 관리 및 예방
농산물 유통 및 수급 안정
농산물 가격 안정
국내 농산물 안정성 강화
잔류농약 검사 기준치 강화
기준치 이상 농약 사용 금지
식품첨가물 표시
중간 마진을 줄임
믿을 수 있는 화학제품 사용
방사성 물질 관리
유전자 변형 표기
브랜드를 체계화를 통한 신뢰구축
농산물 안정성 검사 강화
농산물 유통 개선
공급 수급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불안 방지
농산물 비축 확대
국산 농산물 가격이 비쌈
농산물 수입에 자국민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교육 강화
안전성 있는 농약 개발
발암 물질 없는 깨끗한 먹거리
유통과정에서 방부제 사용 자제
생산자 실명제의 전 품목 확대 시행
인증된 곳의 허가
수입 농산물 수입국 표시
수입 농산물 유해성분 검사
최저가 정부 보장
유해첨가물 표기
인정기관 체계화
농산물 안정성 표시
검역강화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농약 사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
전염병 확산 방지
농산물 안전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에 처벌 강화
농산물 품목들을 골고루 재배
안전성 기준을 높임
재배면적을 미리 계산하여 가격 폭락 방지
국산 농작물에 관한 홍보 활성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가격 폭락이 없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식품안전성 규제 강화
수출품의 안전한 검증
수입산과의 차별화

⑤ 통상협상

통상협상 해결
수출 확대
농산물 수입 최소화
양보만 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벗어나야 함
수입 농산물 규제 강화
농산물 가격 안정
안정적인 농업정책
농민을 위한 협상 필요
농산물 수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
농업인들의 고통을 정부가 적극 배려
통상압력 강화 따른 전문적 대처
국내 농산물 보호
개도국 포기로 통상 협상 시 밀린 통상 자제

⑥ 품목별 정책

품목별 정책 관리
지역특산물 개발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
품목별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
지역별로 특화된 농작물 재배 지원
농산물 유통 및 수급 안정
농민은 제값에 공급하고 수요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체계 마련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수입에 자국민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스마트팜 시설 기자재 비용 저렴 정책
엄격한 품질관리
경쟁력 있는 품목 공급
품목 다양화
국내 특화상품 개발
가치 높은 품목만 전문적으로 재배
재배기법 개발
농산물에 따라 지원정책이 동일해야 함
개도국 지위 포기 시 발생하는 농가의 어려움 해소 방안 필요
농산물 품목 정확히 표기
수입 농산물 대체할 수 있는 품목 개발
부가가치 상승 필요
수확기 홍수출하로 가격 폭락 같은 어려움 해결 위한 식품품 가공기술 개발

⑥ 영농자금, 농가부채

저금리/무이자 영농자금 대출
농가부채 당감
영농자금 확대
농가 부채가 많음
저리로 장기 상환
무조건적인 지원 방지
영농자금 확대 악용 금지
균형 있는 대출 필요
세금낭비 없는 적절한 지원책 필요
농업정책 개선
재해 피해 시 보상금액이 너무 작음
고가의 농기구 지원 혜택
스마트팜 시설 기자재 비용 저렴 정책
특별지역에 편중된 농업정책자금 골고루 사용

⑦ 농촌인력, 후계인력

젊은 인력 양성
후계인력 양성
농촌인력 확충
청년 유입을 위한 혜택 제공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젊은 인력 농촌 정착기반 조성
정부의 지원 필요
후계자 지원
교육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고령화에 대비
농촌인력자원을 위해 신기술 개발 투자
농촌체험 관광사업 육성

장비를 첨단화하여 인력 대체
후계자 선정 기준 완화
매력적인 직업임을 홍보
선진지 견학 농업기술 무료 교육
농업일자리 창출
월급제 농부 시스템
현대식의 전문화된 농사법
인건비 절감 가능한 농사법 개발 및 보급
품목 다양화
복지 증진
혜택 강화
귀농장려금 확대
귀농자들의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귀농자금 대출 확대
귀농하고 싶은 농촌환경 만들기
부족한 일손에 실업자 투입
인건비 지원
기업과의 계약재배 시 가격 보장이 필요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지원정책의 유지 및 관리포인트의 명확화

⑧ 농지

높고 있는 농지 활용
농지 보존
비싼 농지 가격
휴경농지 법률에 정한 강제매각 시 행령 실시
농지 확대
농지 양도소득세 절세
땅을 임대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
농지 생산량 향상 기술

⑨ 농업기관

농업기관 비리 근절
농업기술센터 육성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
신농법 기술개발 필요
지속적인 연구개발 필요
품종개발 예산 확대
전문기관 필요
기관의 활발한 활동
구체적인 전략 필요
지역 주민과의 소통

⑩ 농촌 지역개발, 복지

농촌 지역 개발
복지정책 개선
문화시설 확충
복지시설 확대
편의시설 확충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의료시설 확충
교육시설 확충
농촌체험 관광사업 육성
젊은 인력 농촌 정착기반 조성
무분별한 개발방지
혜택 강화
생활 기반시설 확충
노후주택 개발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특산물 개발

노인복지 강화
직거래 장터 활성화
정부의 지원 필요
농업일자리 창출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자녀복지 강화
인구증가 유지
교통시설 확충
도로 넓히기
도시생활인 적응을 위한 방법 지도
인공지능 첨단기술 지원
낙후된 농촌지역 지원사업
공무원의 열정 필요
개발을 위해 세금이 높아지면 안 됨
공정한 개발
놓고 있는 농지 활용

⑪ 농촌 자연환경

농촌 자연환경 보존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무분별한 개발 방지
깨끗한 농촌 자연환경
농촌 자연환경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
문화 유지 보존
다양한 볼거리 제공
농약 사용 자제
농약의 철저한 관리
친환경 농산물 생산(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재배
농촌 폐가 살리기
생태계 훼손 처벌 강화
농촌체험현장 증설

미세먼지 제거

자연재해 예방

자연환경 개발

⑫ 기타

도시가스 공급

질병 관리 및 예방

수출 확대

혜택 강화

농업이 미래다

고퀄리티 상품 재배

휴경농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인에게 임대

농업용 전기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 지양

재미 있는 농산물 소비 홍보

농업인 설문조사표

[농업·농촌에 대한 2019년 국민의식 조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바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조사업무에 변함없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올해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농정연구에 귀중한 기초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기록하신 후에 2019년 11월 22일 (금)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반송봉투나 팩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발송봉투를 확인하시면 ‘통신원 번호’가 기입(다섯자리 숫자)되어 있사오니 꼭 확인하시어 기입해 보내주세요.
(단, 우편번호를 기입하지 마세요.)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목적 이외에는 절대 이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0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보내는 방법	우편(동봉하는 회송봉투에 넣어 우편회신), 이메일(frog78@krei.re.kr), 팩스(061-820-2404) 중 편한 방법 선택 <u>*팩스 발송시, 조사표가 양면이오니 페이지를 확인하여 발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u>
조사 관련 문의	이정민 조사동향팀장(061-820-2123) 박혜진 연구원(061-820-2228)

I. 농업경영에 대한 인식변화

1) 귀하는 올해 농사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약간 불만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2) (문 1번에서 ①, ②번 응답자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
②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됐다
③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 ④ 소비자의 요구가 까다로워졌다
⑤ 기타()

3) 귀하는 현재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음	다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매우 높음
① 전반적 만족 정도	1	2	3	4	5
②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정도	1	2	3	4	5
③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 정도	1	2	3	4	5

4) (문 3번에서 '매우 낮음'과 '다소 낮음'을 선택하신 분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②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③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④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⑤ 농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⑥ 기타()

5) 최근에 귀하는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① FTA 등 개방 확대 ② 농업 생산비 증가 ③ 영농자금 압박
④ 농업정책 오류 ⑤ 일손 부족 ⑥ 판로확보 어려움
⑦ 농지 부족 ⑧ 농가부채 증가 ⑨ 후계인력 부재

- ⑩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⑪ 가뭄/홍수/태풍 피해
 ⑫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 감소 ⑬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⑭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⑮ 조수 피해
 ⑯ 기타()

6) 귀하는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
 ②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③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④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7) 귀하는 가격과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산 농축산물이 수입산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① 쌀		1	2	3	4	5
축산물	② 한우	1	2	3	4	5
	③ 돼지고기	1	2	3	4	5
	④ 닭고기	1	2	3	4	5
⑤ 신선채소		1	2	3	4	5
⑥ 과일		1	2	3	4	5

8) 귀하는 농업농촌에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많은 편이다 ⑤ 매우 많다

9) 귀하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대체로 부정적이다 ③ 비슷하다 ④ 대체로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10)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① 매우 비관적이다 ② 비관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희망적인 편이다 ⑤ 매우 희망적이다

II. 농업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

11) 5년 전과 비교하여 귀하의 올해 농촌 생활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 ① 매우 나빠졌다 ② 약간 나빠졌다 ③ 마찬가지다
④ 약간 좋아졌다 ⑤ 매우 좋아졌다

12) 5년 전과 비교하여 농업경영과 생활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제시하는 항목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나빠졌다	조금 나빠졌다	보통	조금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① 농사 수익성	1	2	3	4	5
② 농자재수급 및 가격	1	2	3	4	5
③ 영농(농지)규모	1	2	3	4	5
④ 농촌일손	1	2	3	4	5
⑤ 농산물 유통	1	2	3	4	5
⑥ 농사방법과 기술	1	2	3	4	5
⑦ 농가부채·영농자금	1	2	3	4	5
⑧ 농외소득 기회	1	2	3	4	5
⑨ 공동체 생활 및 문화	1	2	3	4	5
⑩ 이웃과의 관계	1	2	3	4	5
⑪ 문화·복지 시설	1	2	3	4	5
⑫ 보건·의료 시설	1	2	3	4	5
⑬ 도로·교통 등 생활환경	1	2	3	4	5
⑭ 교육환경	1	2	3	4	5
⑮ 농산물 수입개방	1	2	3	4	5
⑯ 정부의 농업인식	1	2	3	4	5
⑰ 일반 국민의 농업인식	1	2	3	4	5
⑱ 농업인의 농업애착	1	2	3	4	5

13) 귀하는 현재 농촌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약간 불만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4) 현재 분야별 농촌 생활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주거환경	1	2	3	4	5
② 교육환경	1	2	3	4	5
③ 대중교통	1	2	3	4	5
④ 쓰레기 및 환경 관리	1	2	3	4	5
⑤ 보건 의료	1	2	3	4	5
⑥ 문화체육여가	1	2	3	4	5
⑦ 소득원 및 일자리	1	2	3	4	5
⑧ 이웃과의 관계	1	2	3	4	5

15) 귀하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마을 주민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원만하지 않다 ② 원만하지 않은 편 ③ 그저 그렇다
④ 원만한 편 ⑤ 매우 원만하다

16)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18) 도시 생활 수준에 비해 농촌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다소 낮다 ③ 비슷하다 ④ 다소 높다 ⑤ 매우 높다

19) 귀하는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 좋다 ② 안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0) 다음은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점수(10점 만점)
① 자신의 건강상태	() 점
② 자신의 재정상태	() 점
③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 점
④ 가정생활(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 점
⑤ 사회생활(지역사회단체, 종교, 취미, 친목모임 등)	() 점
⑥ 종합적인 행복도	() 점

Ⅲ. 농업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21) 귀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대체로 불만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만족이다 ⑤ 매우 만족이다

22) 귀하께서는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① 자연재해(폭염 등) ② 쌀 목표가격 설정 ③ 공익형 직불제 개편
④ 일자리 창출 ⑤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⑥ 가축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⑦ 식품 안전성(PLS 등)
⑧ 농산물 가격 안정 ⑨ 성장동력 확충(스마트팜 등)
⑩ 농민수당(기본수당) ⑪ 농촌정주여건 개선 ⑫ 지역경제 활성화
⑬ WTO 개도국 지위 변경 ⑭ 기타()

2020년부터 직접지불제는 기존 소득손실 보전 방식에서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증진 역할에 대한 기여 보상 방식으로 지급하는 ‘공익형 직접지불제’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공익형 직접지불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쌀농가와 밭농가가 동일한 수준의 직접지불금 수령
- 쌀 변동직불금 폐지하고 시장격리 등을 통해 수급 안정
- 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높은 단가를 지급
- 농민에게 환경 보호 등 의무 부과

23) 귀하께서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대체로 부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24) 성공적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위해 현재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정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도입(준수의무 확인, 부당수령 방지 등)
 ② 직불제 예산 지속 확대
 ③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장치 마련
 ④ 기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나라들이 세계 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인정에 따른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위상(GDP 세계 12위, 국민 소득 3만 달러)과 싱가포르, 브라질의 향후 특혜 미주 장 선언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10월 25일 발표하였습니다.

25)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시장 개방 추이에 따라 농산물 수입 증가와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부문 피해 보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을 골라주세요(2개 선택).

(), ()

- ① 공익형 직불제 확대
 ②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 재해보험 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및 개선
 ③ 지역 단위 로컬 푸드 소비기반 마련
 ④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 강화
 ⑤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⑥ 청년·후계농 육성 적극 추진
 ⑦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조건 개선 및 농지은행 제도 개선
 ⑧ 농업예산 확대
 ⑨ 농업생산시설 기반 지원

- ⑩ 농어촌 상생기금 확충을 위한 기업출연 인센티브 확대
 ⑪ 기타()

※ 다음은 국외 비교 문항(문 26~30번)입니다.

26) “농업 소득은 불안정하다”라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⑤ 모르겠다

27) 농업정책 중 어떠한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을 원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것
 ②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함
 ③ 휴경지 발생을 방지하고 농지를 유지하는 것
 ④ 한국문화를 다음세대에 전달하는 것
 ⑤ 농촌 방문 및 이주를 촉진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
 ⑥ 한국의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는 것
 ⑦ 인공지능 및 무인항공기 등 첨단 기술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

28) 식품 안전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는 점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식중독 ② 수출입 음식제품 ③ 식품첨가물
 ④ 잔류농약 ⑤ 유전자 변형 식품 ⑥ 방사성 물질
 ⑦ 알레르기 유발물질 ⑧ 라벨지의 불완전한 표기
 ⑨ 불안감을 느끼지 않음 ⑩ 기타() ⑪ 모르겠음

29) 한국의 음식문화 중 외국인이 체험해봤으면 하는 문화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발효식품을 이용한 요리
 ② 각 지역의 식재 및 향토 요리
 ③ 설, 추석, 단오 등 명절(연중행사) 때 먹는 요리
 ④ 자연과 사람에게 감사하고 음식을 소중히 하는 태도
 ⑤ 지역의 식품을 지탱하는 농림수산업 및 전통문화체험
 ⑥ 국산 식재 맛보기
 ⑦ 자연의 아름다움 및 사계절의 특징을 담은 요리
 ⑧ 영양 균형이 좋고 건강한 음식
 ⑨ 짜장면, 양념치킨 등 외국에서 유입되었으나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요리
 ⑩ 기타() ⑪ 특별히 없음 ⑫ 모르겠음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자연재해(폭염 등)	② 쌀 및 농산물 수급 안정
③ 일자리 창출	④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⑤ 가축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관리	
⑥ 식품 안전성	⑦ 취약계층 식품보장 강화
⑧ 성장동력 확충(스마트팜 등)	⑨ 농민수당(기본수당)
⑩ 남북 농업협력	⑪ 지역경제 활성화
⑫ WTO 개도국 지위 변경	⑬ 공익형 직불제 개편
⑭ 지방분권, 농촌계획제도 협약 추진	⑮ 농촌 재생에너지 개발
⑯ 사회적 경제	⑰ 기타()

분야	① 농업정책	② 농촌관광	③ 농산물 유통, 가격	④ 농산물 안전성
	⑤ 통상협상	⑥ 품목별 정책	⑦ 영농자금, 농가부채	⑧ 농촌인력, 후계인력
	⑨ 농지	⑩ 농업기관	⑪ 농촌 지역개발, 복지	⑫ 농촌 자연환경
	⑬ 기타			

□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합니까?
(여러 개인 경우 앞에 해당 번호를 붙이고 기재)

(번)

IV.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DQ1)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 ()시군

DQ2)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떤 형태입니까?

- ① 도시근교(대도시 인근에 위치) ② 평야지대(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평야)
③ 산간지대(준산간지대)

DQ3) 귀하의 연령은 올해 몇 세입니까? (만 세)

DQ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국민)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또는 졸업 이상

DQ5) 귀하는 언제부터 영농에 종사하셨습니다? (년부터)

DQ6) 귀하의 농업경영에서 연간 판매액이 가장 많은 작목은?

- ① 수도작 ② 과수 ③ 노지채소 ④ 축산 ⑤ 시설원예 ⑥ 특작 ⑦ 기타

DQ6-1) 구체적인 품목을 기입해주세요.(2가지만) (,)

DQ7) 귀하의 연평균 소득(총 수입에서 생산비는 제외)은 얼마나 됩니까?

-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4천만 원 미만
⑥ 4천만~5천만 원 미만 ⑦ 5천만~7천만 원 미만
⑧ 7천만~1억 원 미만 ⑨ 1억~1억 5천만 원 미만
⑩ 1억 5천만~2억 원 미만 ⑪ 2억 원 이상

DQ8) 귀하의 전체 농가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① 5백만 원 미만 ② 5백만~1천만 원 미만 ③ 1천만~2천만 원 미만
④ 2천만~3천만 원 미만 ⑤ 3천만~4천만 원 미만
⑥ 4천만~5천만 원 미만 ⑦ 5천만~7천만 원 미만

- ⑧ 7천만~1억 원 미만 ⑨ 1억~1억 5천만 원 미만
- ⑩ 1억 5천만~2억 원 미만 ⑪ 2억 원 이상

DQ9) 귀덕에서 월평균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50만 원 미만 ② 50만~70만 원 미만 ③ 70만~100만 원 미만
- ④ 100만~150만 원 미만 ⑤ 150만~200만 원 미만
- ⑥ 200만~300만 원 미만 ⑦ 300만~500만 원 미만
- ⑧ 500만 원 이상

DQ10) 귀덕의 가족 구성원(현재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몇 명이십니까? (명)

도시민 조사표

농업·농촌에 대한 2019년 국민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인식과 정책현안에 대해 일반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귀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평소에 느끼신대로 조사표에 기재해 주십시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연구에 참고만 할 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통계 결과만을 인용하고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수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표이사 박재형

SQ 1) 지역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경기 |
| 9. 강원 | 10. 충북 | 11. 충남/세종 | 12. 전북 |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 16. 제주 |

SQ 2) 지역규모

- | | |
|-----------|---------|
| 1. 특별/광역시 | 2. 일반 시 |
|-----------|---------|

SQ 3) 성별

- | | |
|-------|-------|
| 1. 남자 | 2. 여자 |
|-------|-------|

SQ 4) 귀하의 연령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만 19세 미만 또는 만 70세 이상 면접 중단

SQ 5) 귀하는 농촌(읍, 면지역)에서 1년 이상 사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SQ 6) 부모나 형제 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I.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

문 1) 귀하는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래 제시한 항목 중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 항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많은 편	매우 많다
(1)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 관심 정도	1	2	3	4	5
(2)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 정도	1	2	3	4	5

문 2) 귀하는 농업농촌에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 3) 귀하는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2.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3.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이다
4.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문 4) 귀하는 농업농촌이 가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기능'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다 3. 보통이다 4. 많은 편이다 5. 매우 많다

문 5) 다음은 귀하께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제시한 항목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잘 모르 겠음		
	0	◀	◀	3	◀	5	▶	7	▶		▶	10
(1) 식량(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99
(2)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99
(3)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0	1	2	3	4	5	6	7	8	9	10	99
(4)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99
(5)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99
(6) 식품 안전성 차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0	1	2	3	4	5	6	7	8	9	10	99
(7) 농촌 지역 난개발 등으로 농촌경관이 훼손된다	0	1	2	3	4	5	6	7	8	9	10	99
(8) 주거·교육·교통·복지·보건 등 생활 여건이 불리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99
(9) 농업·농촌이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99

문 6) 국가정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적극 반대한다 2. 반대하는 편이다 3. 찬성하는 편이다
4. 적극 찬성한다 5. 잘 모르겠다

문 7) 귀하는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면제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대체로 부정적이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문 8) 귀하는 농촌 주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복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극 반대한다 2. 반대한다 3. 보통이다 4. 찬성한다 5. 적극 찬성한다

문 9) 귀하는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대체로 부정적이다 3. 비슷하다
4. 대체로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문 12)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이다 2. 대체로 불만이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이다
5. 매우 만족이다

문 13) 귀하께서는 농축산물을 구입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 목	가 격	안 전 성	품 질(맛)	브 랜 드	포 장 상 태	영 양 등
(1) 채 소	1	2	3	4	5	6
(2) 육 류	1	2	3	4	5	6
(3) 곡 물	1	2	3	4	5	6
(4) 과 일	1	2	3	4	5	6

문 14) 귀하께서는 가격과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산 농축산물이 수입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낮다	대체로 낮은 편이다	보통 이다	대체로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1) 쌀		1	2	3	4	5
축산물	(2) 한우	1	2	3	4	5
	(3) 돼지고기	1	2	3	4	5
(4) 과일		1	2	3	4	5
(5) 화훼		1	2	3	4	5

문 15) 귀하께서는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
2.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 농산물보다 안전하다
3. 수입산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보다 안전성이 높다

문 15-1) 귀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수입 농산물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 자주 구매하지 못한다
2. 수입 농산물이 좋고 구매도 거리낌이 없다
3.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다
4. 수입 농산물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구매하지 않는다
5. 수입 농산물에 대해 인식은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 구매한다

문 16) 귀하는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입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1.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2.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3.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문 17) 귀하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2. 개선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개선되고 있는 편이다
5. 매우 개선되고 있다

문 18) 도시 생활 수준에 비해 농촌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2. 다소 낮다
3. 비슷하다
4. 다소 높다
5. 매우 높다

문 19)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심각하다
5. 매우 심각하다

문 20) 귀하는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안 좋다
2. 안 좋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문 21) 다음은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점수(10점 만점)
1. 자신의 건강상태	() 점
2. 자신의 재정상태	() 점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 점
4. 가정생활(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 점
5. 사회생활(지역사회단체, 종교, 취미, 친목모임 등)	() 점
6. 종합적인 행복도	() 점

III. 농업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문 22) 귀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이다 2. 대체로 불만이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이다 5. 매우 만족이다

문 23) 귀하께서는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연재해(목염 등)
2. 쌀 목표가격 설정
3. 공익형 직불제 개편
4. 일자리 창출
5.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6. 가축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7. 식품 안전성(PLS 등)
8. 농산물 가격 안정
9. 성장동력 확충(스마트팜 등)
10. 농민수당(기본수당)
11. 농촌정주여건 개선
12. 지역경제 활성화
13. WTO 개도국지위 변경
14. 기타(적을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나라들이 세계 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인정에 따른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위상(GDP 세계 12위, 국민 소득 3만 달러)과 싱가포르, 브라질의 향후 특혜 미주 장 선언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10월 25일 발표하였습니다.

문 24)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시장 개방 추이에 따라 농산물 수입 증가와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부문 피해 보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을 골라주세요 (2개 선택).

1. 공익형 직불제 시행
2.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 재해보험 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및 개선
3. 지역 단위 로컬 푸드 소비기반 마련
4.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 강화
5.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6. 청년·후계농 육성 적극 추진
7.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조건 개선 및 농지은행 제도 개선

8. 영양 균형이 좋고 건강한 음식
9. 짜장면, 양념치킨 등 외국에서 유입되었으나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요리
10. 기타(적을 것:)
11. 특별히 없음
12. 모르겠음

문 29) 귀하께서는 최근 2~3년 내에 농촌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여행을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의향이 있음
2. 여행을 한 적은 없으나, 앞으로 의향이 있음
3. 여행을 한 적이 있으나, 앞으로 의향이 없음
4. 여행을 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 의향이 없음

문 29-1) (문 29번에서 2번 응답자만) 여행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1. 자연 및 풍경(산, 강, 바다, 계단식 논 등)
2. 지역 휴양지에서 휴식(온천 등)
3. 지역의 특산품을 사용한 식사
4. 축제, 전통 예능 등 지역문화
5. 유적지, 사찰 등의 문화재
6. 지역 특산물 구매
7. 농림어업체험
8. 지역민과 교류
9. 농어가 민박
10. 운동, 오락(등산, 사이클링 등)
11. 기타(적을 것:)
12. 특별히 없음
13. 모르겠음

문 29-2) (문 29번에서 1번 응답자만) 농촌 여행 시 체류하고 싶은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당일
2. 1박
3. 2박
4. 3박
5. 4~6박
6. 7박 이상

문 29-3) (문 29번에서 1, 2번 응답자만) 농촌 여행 시 어느 시설에서 숙박하고 싶습니까?

1. 옛집, 폐교 등을 활용한 숙박시설
2. 일반 호텔 또는 고급 전통숙박시설
3. 농어가 민박
4. 일반 민박 또는 펜션
5. 공공 숙박시설
6. 캠핑장
7. 기타(적을 것:)
8. 특별히 없음
9. 모르겠음

문 29-4) (문 29번에서 3, 4번 응답자만) 농촌 여행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관심 없음
2. 숙박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름
3. 숙박 시설과 위생이 불안
4. 교통 불편

5. 농촌 정보 부족
6. 교통 및 숙박 예약방법을 모름
7. 과거에 다녀와서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8. 식사가 가능한 곳이 적어서
9. 기타(적을 것:)
10. 특별히 없음
11. 모르겠음

문 30) 귀하께서는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연 재해(폭염 등)
2. 쌀 및 농산물 수급 안정
3. 일자리 창출
4.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5. 가축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관리
6. 식품 안전성
7. 취약계층 식품보장 강화
8. 성장동력 확충(스마트팜 등)
9. 농민수당(기본수당)
10. 남북 농업협력
11. 지역경제 활성화
12. WTO 개도국지위 변경
13. 공익형 직불제 개편
14. 지방분권, 농촌계획제도 협약 추진
15. 농촌 재생에너지 개발
16. 사회적 경제
17. 기타(적을 것:)

문 31) 농업정책이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분야	1. 농업정책	2. 농촌관광	3. 농산물 유통, 가격	4. 농산물 안전성
	5. 통상협상	6. 품목별 정책	7. 영농자금, 농가부채	8. 농촌인력, 후계인력
	9. 농지	10. 농업기관	11. 농촌 지역개발, 복지	
	12. 농촌 자연환경	13. 기타(적을 것:)		

☐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하십니까? (여러 개인 경우 앞에 해당 번호를 붙이고 기재)

(번)

IV.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DQ 1)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1. 초등(국민)학교 졸업 이하 | 2. 중학교 졸업 |
| 3. 고등학교 졸업 | 4.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또는 졸업 이상 |

DQ 2) 귀댁의 가족 구성원(현재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DQ 3) 귀댁의 연평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 | |
|-------------------|--------------------|
| 1. 5백만 원 미만 | 2. 5백만~1천만 원 미만 |
| 3. 1천만~2천만 원 미만 | 4. 2천만~3천만 원 미만 |
| 5. 3천만~4천만 원 미만 | 6. 4천만~5천만 원 미만 |
| 7. 5천만~7천만 원 미만 | 8. 7천만~1억 원 미만 |
| 9. 1억~1억 5천만 원 미만 | 10. 1억 5천만~2억 원 미만 |
| 11. 2억 원 이상 | |

DQ 4) 귀댁에서 월평균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 | |
|-------------------|-------------------|
| 1. 50만 원 미만 | 2. 50만~70만 원 미만 |
| 3. 70만~100만 원 미만 | 4. 100만~150만 원 미만 |
| 5. 150만~200만 원 미만 | 6. 200만~300만 원 미만 |
| 7. 300만~500만 원 미만 | 8. 500만 원 이상 |

DQ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임/어업 종사자(가족 종사자 포함)
2. 자영업자(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3.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정부/기업 고위 임원, 일반관리자 등)
4. 전문가(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예술가 등)
5. 기술공 및 준전문가(컴퓨터 준전문가, 경찰, 소방수, 철도기관사, 운동선수, 연예인, 종교인 등)
6. 사무종사자(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7. 서비스종사자(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 등)
8. 판매종사자(상점점원, 보험설계사, 내레이터 모델 및 홍보종사자 등)
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광부, 전자전자장비 설비 및 정비 종사자, 수공예 종사자 등)
1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11. 단순노무종사자(배달, 운반, 세탁, 기사, 청소원, 경비원 등)
12. 학생
13. 전업주부
14. 직업군인
15. 무직
16. 기타
99. 모름/무응답

- 김동원·박혜진. 2003. 『2003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박혜진. 2004. 『2004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박혜진. 2005. 『2005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박혜진. 2006. 『농업·농촌에 대한 200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박혜진. 2007. 『농업·농촌에 대한 200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박혜진. 2008.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박혜진. 2009. 『농업·농촌에 대한 2009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박혜진. 2010.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박혜진. 2011. 『농업·농촌에 대한 2011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박혜진. 2012.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박혜진. 2013.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박혜진. 2014.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박혜진. 2015.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박혜진. 2016.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성환·박혜진. 2017.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성환·박혜진. 2018.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박혜진·윤영석·김미리. 2013. 『농업·농촌 국민의식 변화분석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P1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김정호. 1999.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연구보고서 R4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세익. 200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연우·최익수. 1981. “농민의 의식구조 변화.” 『농촌경제』 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기성·이은수. 2018. 『2017 한국의 직업 정보-2017 KNOW-』. 연구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김미곤·여유진·정해식·박이택·김성아. 2018.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内閣府. 2018. 11. 『食と農林漁業に関する世論調査』.

John F. Helliwell, Richard Layard and Jeffrey D. Sachs.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